



# 신활력플러스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2021. 10. 1(금)

충남 청양군 남양면 행복나눔터



# 신활력플러스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2021. 10. 1(금)

오후 14시~17시

## 주 제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장 소

충남 청양군 남양면 행복나눔터

\*유튜브 Live(오르빌, 농특위 채널) 영상을 통해 외부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 참석자

농특위 위원, 신활력플러스 관계자, 연구진 등 30명 내외

▶ 주요 외부인 : 농특위 위원장, 청양군수 등



일정	주요내용	비고
14:00~14:10(10')	개회식 및 행사취지 소개	
14:10~14:20(10')	인사 말씀	정현찬 위원장 / 김돈곤 군수
14:20~14:50(30')	주제발표 :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구자인 소장
14:50~15:10(20')	사례발표 :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경험과 시사점	황준환 대표
15:10~15:20(10')	휴식	
15:20~16:50(90')	종합토론 - 김향자 농특위 농어촌분과 위원장 - 김정연 농특위 농어촌분과 위원 - 김명숙 충남도의회 의원 - 노승복 청양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이상길 농어민신문사 논설위원	(사회·좌장) 황의동 대표
16:50~17:00(10')	종합정리 및 마무리	

\*시간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관 (주)오르빌,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 현장 토론회 안내

### □ 배경과 목적

- 복잡 다양화하는 농어촌문제 해결과 자치분권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필요와 민관협치의 중요성 부각
- 농특위는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 의결 (2019.12)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나, 추진체계 안착의 원활한 진행과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농어촌정책 단위로 농어촌 현장에 밀착하여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이에, 관련 정책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 현장에서 집중 토론회를 통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우수사례 요인 분석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 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으로 5대 분야(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농어업회의소, 농촌협약, 어촌뉴딜300 사업)와 지역을 선정하여 진행

### □ 현장 토론회 추진 일정

일시	지역	정책사업	주 발제자(소속)
10. 01(금)	충남 청양	신활력플러스	구자인 소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동,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10. 20(수)	경북 상주	푸드플랜	황영모 연구위원 (전북연구원)
10. 21(목)	강원 평창	농어업회의소	김대현 사무국장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11. 17(수)	전북 임실	농촌협약	김정연 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11. 18(목)	전남 목포	어촌뉴딜300	황길식 대표 (명소,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세부일정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Live(오르빌, 농특위 채널) 영상을 통해 외부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관 (주)오르빌,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목 차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4대 의제와 7대 과제	....	4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분석	.....	7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사례	.....	73
토론문	....	113

#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농특위 의결안건의 취지와 기본방향

- ◆ 지역의 '사람과 조직'을 중시하는 '주체 중심'의 역량 증진과 협력 강화
- ◆ '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 추진체계가 정착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 □ 단위사업 중심에서 '통합적인 행정추진체계'로 개편

-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계획 역량과 정책 협력, 책임성 강화
- 칸막이형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영역 간 연계·협력 추진
  - \* '통합적인 행정추진체계'란 정책집행을 추진하는 시군에서 부서간 칸막이 업무를 지양하고 다양한 업무의 연계·협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전담하는 총괄부서 신설, 부서 간 협의체 운영 등을 포괄하는 의미임

### □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주체 중심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로 전환

- 모든 정책 사업에 공공일자리 개념을 결합하여 인건비 최대 지원
- 현장수요형 학습동아리 발굴과 육성, 공익형 민간법인 설립 유도

### 【4대 주요 의제(Agenda)와 7대 세부과제】

4대 의제		7대 세부과제
행정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 농어촌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형성 2. 전문가 채용, 담당 공무원의 농어촌정책 전문성 확보
행정- 민간	민관협치 강화	3.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4.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 연계협력 강화
민간	민간의 조직화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5. 이해당사자 협의체 조직·육성 6.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비영리법인 육성
제도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7.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 제도화

## **의제 1 : 총괄·조정과 전문성 강화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 농어촌정책의 총괄·조정체계 형성
  - 1-1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정책영역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1-1 관련부서 간 '행정협의회' 운영 정례화, 업무소통·정책 협력 추진
2. 민간 전문가 채용, 담당 공무원의 농어촌정책 전문성 확보
  - 2-1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공모직위제 확대 등 순환보직제 단점 보완
  - 2-2 개방형, 임기제 등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 **의제 2 : 중간지원조직 재편으로 민관협치 강화**

3. 농어촌정책 영역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 3-1(중앙) '삶의질법 등'을 개정하여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지위 확보
  - 3-2(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유도
4. 광역과 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 강화
  - 4-1(광역)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기초지자체 지원 기능 강화
  - 4-2(지자체) 통합의 범위와 형태, 시기 등은 지자체 자율성 부여

## **의제 3 : 민간의 조직화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5. 주요 정책별 민간의 이해당사자 협의체 설립 및 조직화 지원
  - 5-1 민간 자발성을 토대로 한 '당사자 협의체' 설립 지원
  - 5-2 현장 학습모임 등 단체 필요에 따른 조직화 활동 적극 지원
6. '당사자 협의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영리법인 육성
  - 6-1 민간주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장려
  - 6-2 사무위탁이나 보조사업, 계약사업 등으로 민간 법인의 성장 촉진

## **의제 4 :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7.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 제도화
  - 7-1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책의 기본조례' 제정
  - 7-2 기본계획, 정책위원회/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민관협치 제도화



# 발제문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분석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대표 구자인)



#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분석

구자인(마을연구소 일소공도)

## 1. 사업 개요와 추진상황

### 1) 사업도입 배경과 취지1)

#### (1) 사업도입의 배경

- 국가균형발전 비전의 실현 : “문재인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목표로 설정(‘18.2)”
-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반성 :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는데 한계”
  -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용역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역량 있는 민간조직 육성 미흡”,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사업보다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중점”
- 참여정부의 신활력사업 후속으로 2018년 신규사업에 반영되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포함

[표 11] 참여정부 신활력사업과의 비교

구분	신활력사업(‘05~‘10)	농촌 신활력 플러스(‘18~‘21)
목적	○ 낙후지역의 구조적 어려움 극복, 도농상생의 새로운 기회 활용	○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대상지역	○ 70개 시군(낙후지역 중심)	○ 123개 농촌 시군
사업내용	○ 지역특산물 및 향토자원 산업화, 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 다양한 전략사업 자율 추진 ○ 자생적 지역조직 성장기반 구축
특이사항	○ ASP 모델 - 혁신주체(Actor) : 지역혁신협의회 - 네트워크(System) : 지역-민간 거버넌스 - 프로젝트(Project) : 농업의 융복합 등 낙후지역 발전사업 구상	○ ASPP 모델 - 주체(Actor) : 전담조직, 현장활동가, 주민 협의회(액션그룹), 사회적경제조직 - 네트워크(System) : 주체간 파트너쉽 - 프로젝트(Project) : 특화발전 모델 - 계획협약(Planning-Contract)도입

1) 이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한 사업지침, 사업설명회, 워크숍 등의 사업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여러 자료를 조합하여 정리한 것임

## (2) 사업의 추진방향과 목적

### 가. 추진방향

- (핵심주체 육성)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립적 추진주체 육성
- (창의적 사업 추진) 특색 있는 전략사업 및 연계프로그램 발굴
- (통합적, 협업적 추진) 다양한 분야 및 지역간 협력사업을 통해 성과확산 유도

### 나. 사업 비전과 목표

- 비전 :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 목표 : 지속가능한 혁신거점 100개소 조성
- 주요 추진과제
  - 추진주체 육성 : 전담조직 구성 + 현장 활동가(Actor), 활동조직 양성 + 지역내 민간조직 참여 확대
  - 창의적 사업 추진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전략모델 개발(특화산업 고도화, 지역 순환경제, 공동체 활성화 등)
  - 통합적 농촌발전 :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 + 계획협약 도입

## 2) 사업개요

### (1) 공모사업 개요와 주요 내용

#### 가. 주요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개소당 4년간 총70억원(국비 70%), 총 100개 시군 선정(연차별)
- 대상지역 : 123개 농어촌 시·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나. 주요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지역내 민간조직의 양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으로 활용
  - 원칙적으로 “사업의 목적 등 기본구상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을 추진 가능”
- 추진방식 : 산업·문화·복지 등을 연계한 통합계획을 수립
  - 사업 추진의 **3대 필수요소** : ① 민간 사업주체 육성, ② 민간 중심의 추진단 운영, ③ 고유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

- 인센티브(2018년 사업지침 기준) : 중간평가(2020년) 실시 후에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함

다. 추진절차와 주체별 역할 ([그림 1] 참고)

- 추진단과 행정, 액션그룹 등이 사전협의를 통해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을 강조함
- 사업계획(기본계획)의 자문과 심의는 중계단에서, 승인은 농식품부가 권한을 가짐
- 기본계획에 대해 추진단과 농식품부, 시군 지자체가 3자 사이의 계획협약을 체결함

## (2)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담당 사무관 1명
-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 1~2명이 지원업무 수행
- 순환보직제로 인해 담당자들이 사업기간 중에 2~3회 바뀌고, 중앙 차원의 지원기능은 미약함

### □ 중앙계획지원단 운영

- 역할 : 중심지활성화사업처럼 중앙계획지원단을 설치하여 자문 및 심의 방식으로 지원함.
- 위원수 : 2018년 첫 해에는 총 20명으로 4개 권역으로 구성되었고, 선정 시군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원수도 25명으로, 또 35명으로 늘어남
- 권역별 운영 : 2020.08.31. 현재, 중앙계획지원단 위원은 총 35명이고, 전라 및 경상 권역은 도별로 분리하여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응함. 권역별로 5~6명이 2022년 기준으로 12개에서 22개 시군을 담당하게 되는 셈임

[표 12]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중앙계획지원단 권역별 위원

권역	선정 시군수	위원 성명	소속	전문분야	직책	비고
단장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단장	
경기 강원 제주 (5명)	16	이기원 송우영 박주영 최선강 강종원 오승은 김정연	한림대학교 산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농촌계획 경제산업 문화관광 경제산업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충청 (6명)	22	김태인 구지병 박덕성 윤성수 우창명	충남대학교 단국대학교 마음연구소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연구원	농촌계획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촌계획 경제산업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전북 (5명)	12	이민수 황영모 장민기 이정섭 지영효 김영일	한국농수산대학 전북연구원 농정연구소 원광대 도시공학부 두리공간연구소	농촌계획 경제산업 역량강화 생활SOC 지역계획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전남 (6명)	17	김광성 김경수 정원철 김승훈 김영훈 김종규	전남대학교 농촌경제연구원 협동조합 이장원 광주전남연구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제산업 농촌계획 역량강화 경제산업 농촌계획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경북 (6명)	19	이영아 정호훈 김영숙 김연호 김미옥	동양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역량강화 농촌계획 경제산업 문화관광 역량강화 생활SOC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경남 (5명)	14	이유진 송부용 임의제 이종호 윤인숙	부산대학교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농촌계획 경제산업 농촌계획 생활SOC 역량강화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주 : 전문분야는 농어촌공사의 분류에 따름  
 자료 : 농어촌공사 제공 자료(2020.08.31.)를 수정·보완함

- 중계단 자문체계(2021 사업지침 기준) :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 검토 단계부터 연구용역 착수·중간·완료보고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검토의견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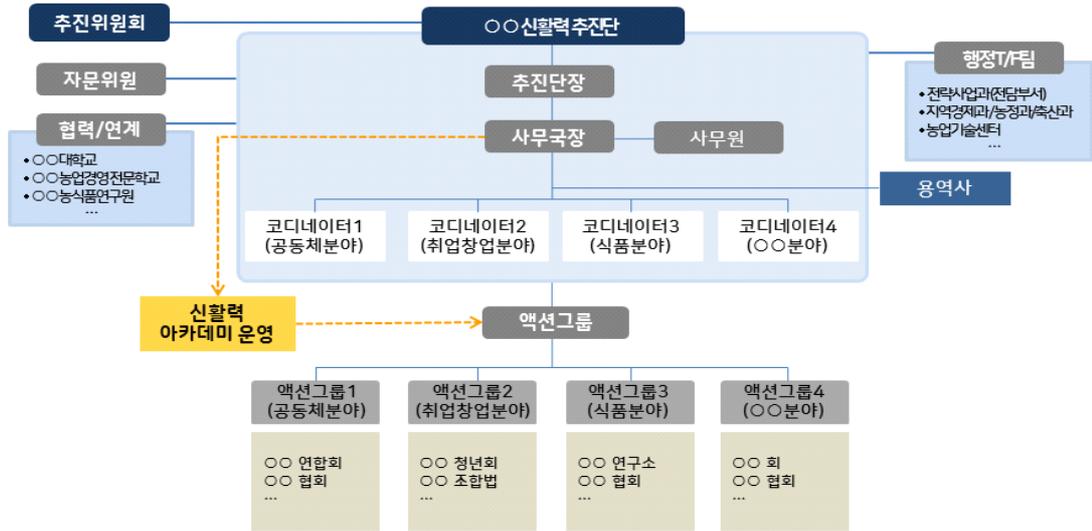
### (3) 기초 지자체 차원의 추진체계도와 변화과정<sup>2)</sup>

#### □ 전체 개념도 : 2021년 시군 통보용 사업지침 기준

- 그 이후에 제시된 추진체계는 거의 수정되지 않았고, 추진단 외에도 추진위원회, 행정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 등 **민관협치형 시스템이 더욱 강조됨**
- 시군 상황에 따라 자문위원단, 협력/연계조직, 용역사는 임의조직으로 미운영 가능하도록 함

2) 광역 지자체는 시군이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농식품부에 추천하고, 사업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역할 정도에 그침

[그림 9] 전체 개념도3 : 2021년 시군 통보용 사업지침 기준



#### (4) 지자체 차원의 추진주체

##### □ 추진위원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 내용 심의 및 사업 진행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구성 : 행정 담당부서와 테마 관련 역량 있는 민간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권장함. 활동조직(액션그룹) 대표는 사업의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이해충돌 가능성 배제)에만 추진위원이 될 수 있음
- 추진위원회는 예비계획서 수립단계에서 실무 집행을 위한 추진단장을 우선 선임하고, 사무국 구성안(인원수, 역할, 보수 등)과 지원조례안도 검토함

##### □ 추진단 : 사업 전체의 총괄 집행조직

- 추진단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조직**
- 사업 종료 후에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반영구적으로 존속해야 할 조직임
- 구성 : 추진단장, 사무국(국장, 사무원 등), 분야별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추진단을 만들기보다는 농촌중심지 PM단, 기존 중간지원조직 등과 연계·협력하는 구조를 권장하고, 향후 농촌정책 추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
- 추진단장**은 비상근으로 관내 전문가(권장) 또는 관외 전문가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진단을 대표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총괄함.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사무국장·사무원(상근) 및 코디네이터(비상근)로 구성

- 추진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자부담 제외)의 7.5% 범위”에서 추진단 구성원 활동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추진단 구성원 중 비상근(코디네이터)의 활동비는 “운영비 총액의 50% 범위”에서 지급.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

- 추진단 구성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의 재정상황, 추진단 기금 적립액, 추진단 구성원의 전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되, 초임 금액은 아래 사례를 최소 기준으로 적용 권고
  - ※ 사무국장: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농특) 사업(사무장, 월 250만원)
  - ※ 사무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고용노동부 결정 최저임금 수준, '18년 월 158만원 → '19년 월 175만원)
  - ※ 코디네이터: 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사무국장과 사무보조 사이에서 결정

- “추진단의 법인격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결정하되,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법인화를 권고” --> 추진단 자체가 중간지원조직 성격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될 수 없음. 보조사업과 혼동하여 이런 문구 표현이 나타난 셈임

**□ 행정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

- 예비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구성하고, 내용 속에서 “지자체의 행정협의체(전담부서, 협업부서) 구성, 역할 및 운영방법 등은 반드시 제시”하도록 명시함

## 2. 사업추진상황

### 1) 공모사업 선정 현황

- 전체 123개 대상 시군 중에서 100개가 선정되어 완료
- 참고로 농촌협약은 2021년 6월에 심사를 통해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해수부 소관 10개 제외) 중에서 2022년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총 20개 시·군을 선정함

[표 13]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도별 선정 현황

구분	경기 (6)	강원 (8)	충북 (11)	충남 (11)	전북 (12)	전남 (17)	경북 (19)	경남 (14)	제주 (2)	세종 (0)
2018년 (10개)	가평군 (1)	원주시, 평창군 (2)	영동군 (1)	아산시, 예산군 (2)	완주군 (1)	장흥군 (1)	의성군 (1)	하동군 (1)	-	-
2019년 (20개)	여주시 (1)	강릉시, 홍천군 (2)	중평군, 충주시 (2)	청양군 (1)	김제시,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4)	간진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4)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3)	산청군, 함양군 (2)	서귀포시 (1)	-
2020년 (30개)	양평군, 화성시 (2)	횡성군 (1)	괴산군, 진천군 (2)	금산군, 천안시 (2)	고창군,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4)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해남군, 고흥군, 곡성군 (6)	군위군, 정주군, 영양군, 영동진군, 영주군, 영선군, 영선도군 (6)	거제시,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양산시, 양양군, 창녕군, 합천군 (7)	-	-
2021년 (20개)	이천시 (1)	영월군, 양양군 (2)	청주시, 단양군 (2)	공주시, 보령시 (2)	진안군 (1)	완도군, 화순군, 함평군 (3)	김천시, 영덕군,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5)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3)	제주시 (1)	-
2022년 (20개)	안성시 (1)	정선군 (1)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4)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4)	정읍시, 무주군 (2)	영암군, 진도군, 보성군 (3)	구미시, 포항시, 영양군, 봉화군 (4)	사천시 (1)	-	-
미선정 (23개)	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4)	삼척시 (1)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서산시 (4)	군산시 (1)	담양군, 순천시, 신안군, 여주시 (4)	경산시, 경주시, 청송군, 철원군 (4)	고성군, 의령군, 진주시, 함안군 (4)	-	세종시 (1)
전체 시군수	10	9	11	15	13	21	23	18	2	1
선정비율(%)	60.0	88.9	100.0	73.3	92.3	81.0	82.6	77.8	100.0	0.0

주 : 밀줄 시군은 농촌협약에 선정된 곳으로 2022년에 선정된 곳(5개 : 안성, 제천, 홍성, 무주, 봉화)

자료 : 농어촌공사 제공 자료(2021.09.15.)를 수정·보완함

## 2) 2018~19년 선정 지자체의 추진체계 통계 분석

### (1) 조사 개요와 총괄표

□ 조사 자료

- 농어촌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는 시군 「관리카드」(2021.03 기준)
- 공주대학교, 2020.12., “신활력플러스사업의 18-19년 사업 성과분석 및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대면조사(인터뷰) 및 서면조사 병행(2020.10 기준)

□ 총괄표 : 권역별, 시군별 추진상황

[표 14]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8~19년도 선정 시군 추진상황 요약

권역	시군	선정 연월	사업 주제 유형	예산집행율(%)			사업계획 승인시기	추진단		추진위원회		행정협의회	
				소계	H/W	S/W		사무국 인원	코디 인원	위원장	위원수	담당부서	실과소 수
평균				30.4	28.3	33.1		2.5	5.3		11.8		7.0
경기 강원 제주	가평군	2018.08	향토자원고도화	90	119	48	2019.11	2	10	행정단독	9	기획감사담당관	10
	여주시	2019.04	지역푸드	34	3.2	54	2020.08	2	7	민관공동	10	농업정책과	5
	서귀포시	2019.04	향토자원고도화	45	50	36	2020.05	2	1	민관공동	13	마을활력과	6
	원주시	2018.08	지역푸드	28	28	29	2019.11	3	11	행정단독	7	로컬푸드과	7
	평창군	2018.08	지역푸드	51	20	71	2019.07	3	0	행정단독	7	유통산업과	5
	강릉시	2019.04	지역푸드	15	2	43	2020.04	2	6	행정단독	19	유통지원과	15
	홍천군	2019.04	향토자원고도화	49	59	36	2020.08	2	4	민관공동	13	농정과	7
충청	아산시	2018.08	지역푸드	27	12	54	2020.04	4	6	민관공동	15	먹거리정책과	5
	예산군	2018.08	공동체경제플랫폼	67	98	44	2019.10	3	1	행정단독	14	건설교통과	7
	청양군	2019.04	공동체경제플랫폼	48	0	61	2020.04	3	4	민관공동	13	농촌공동체과	6
	영동군	2018.08	향토자원고도화	70	84	56	2019.12	2	8	민관공동	9	건설교통과	6
	증평군	2019.04	공동체경제플랫폼	8	0	20	2020.04	2	4	민관공동	13	미래기획실	5
	충주시	2019.04	지역푸드	4	0	8	2020.10	2	3	민관공동	14	농정과	8
전북	완주군	2018.08	지역푸드	34	10	72	2019.07	4	4	행정단독	12	먹거리정책과	5
	김제시	2019.04	지역푸드	4	0	7	2020.06	3	3	민관공동	12	농촌활력과	8
	익산시	2019.04	공동체경제플랫폼	13	6	21	2020.09	4	6	민관공동	14	농촌활력과	11
	임실군	2019.04	공동체경제플랫폼	15	3	31	-	3	4	민관공동	11	농촌활력과	7
	장수군	2019.04	향토자원고도화	33	32	34	-	2	4	민관공동	12	농촌지원과	7
전남	장흥군	2018.08	향토자원고도화	15	7	21	-	4	2	민관공동	7	지역경제과	6
	강진군	2019.04	공동체경제플랫폼	11	3	18	2020.05	2	3	행정단독	10	건설과	8
	무안군	2019.04	향토자원고도화	4	0	9	2020.07	2	7	민관공동	13	농정과	4
	영광군	2019.04	향토자원고도화	39	64	20	2020.07	2	6	민관공동	9	농정과	8
	장성군	2019.04	향토자원고도화	21	46	6	2020.06	2	5	민관공동	13	농식품유통과	7
경북	의성군	2018.08	공동체경제플랫폼	51	76	35	2019.07	2	8	행정단독	7	지역재생과	5
	문경시	2019.04	향토자원고도화	33	41	29	2020.07	2	6	민관공동	9	농정과	8
	상주시	2019.04	지역푸드	40	53	20	2020.06	2	10	민관공동	20	유통마케팅과	8
	예천군	2019.04	공동체경제플랫폼	12	0	35	2020.03	2	9	행정단독	13	기획감사실	7
경남	하동군	2018.08	향토자원고도화	34	28	46	2019.11	3	4	민간단독	17	특화산업과	4
	산청군	2019.04	향토자원고도화	9	3	14	2020.04	2	5	민관공동	11	한방향노화과	6
	함양군	2019.04	향토자원고도화	7	2	16	2021.01	3	9	민관공동	7	산삼엑스포과	9

자료 : 농어촌공사(2021.03) 시군 「관리카드」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정리 가능한 정보를 추출

- **사업유형** : 크게 보았을 때 농특산물이나 지역자원 중심의 ‘향토자원 고도화’가 13개,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등 농식품 영역의 ‘지역푸드’가 9개, 사회적경제나 청년창업 등의 ‘공동체경제 플랫폼’이 8개로 구분 가능함
- **예산집행율** : 2018.08 선정 시군은 평균 46.7%(H/W 48.2%, S/W 47.6%), 2019.04 선정 시군은 평균 22.2%(H/W 18.4%, S/W 25.9%)로 **전체 평균은 30.4%**(H/W 28.3%, S/W 33.1%)임.

## (2)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제정 4가지 방식 :
- 추진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무국 인건비를 지급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운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기본조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기존 조례 해석	기존 조례 일부 변경	신활력 중심 별도 제정	신활력 포함 포괄조례 제정
사업 년도	18년(n=10)	3(33.3)	3(33.3)	2(22.2)	1(11.1)
	19년(n=20)	5(26.3)	1( 5.3)	8(42.1)	5(26.3)
Total		8(28.6)	4(14.3)	10(35.7)	6(21.4)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20쪽을 재정리

## (3)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 구성의 유형과 위원수 : ‘**공공중심형**’이 절반 이상인 **56.7%**로 나타남. 공공행정의 구성 비율을 낮추고, 민간단체 리더나 전문가들의 참여가 훨씬 활발해야 함.

		위원회 구성 유형			평균 위원수 (명)
		공공중심형	민간중심형	전문가중심형	
사업 년도	18년(n=10)	6(60.0)	3(30.0)	1(10.0)	10.4
	19년(n=20)	11(55.0)	5(25.0)	4(20.0)	12.5
Total		17(56.7)	8(26.7)	5(16.7)	11.8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4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추진위원장 유형 : **민관 공동위원장 유형이 66.7%**로 가장 많고, 행정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30.0%나 됨(특히 2018년 선정 시군).

		위원장 방식			부군수 공동 위원장 참여	추진단장 역할		
		민간 단독	민관 공동	행정 단독		추진 위원장	추진 위원	미참여
사업 년도	18년(n=10)	1(10.0)	3(30.0)	6(60.0)	8(80.0)	5(50.0)	4(40.0)	1(10.0)
	19년(n=20)		17(85.0)	3(15.0)	18(90.0)	15(78.9)	4(21.1)	
Total		1( 3.3)	20(66.7)	9(30.0)	26(86.7)	20(69.0)	8(27.6)	1( 3.4)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5쪽과 농어촌공사(2021.03) 시군 「관리카드」 자료

- 추진위원회 개최실적 : 2020년 10월 조사결과로 보자면, 2018년 선정 시군은 추진위원회를

약 9.3회 개최했으며, 2019년 선정 시군은 5.6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남. **분기별로 1회 정도 개최**

		평균(회)	추진위원회 회의 실적			
			~5회 미만	~10회 미만	~20회 미만	20회 이상
사업 년도	18년(n=10)	9.3	5(50.0)	2(20.0)	1(10.0)	2(20.0)
	19년(n=20)	5.6	10(50.0)	8(40.0)	2(10.0)	0(0.0)
Total		5.2	15(50.0)	10(33.3)	3(10.0)	2(6.7)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6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4)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 추진단의 법적 형태 : '임의단체 형태로 설립하고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6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수탁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16.7%의 순으로 나타남.

		행정 직영	임의 단체	위탁1: 중간 지원조직	위탁2: 대학	재단 법인
사업 특성	향토자원 고도화 (n=16)		11(68.8)	2(12.5)	1(6.3)	2(12.5)
	지역푸드 시스템 구축(n=7)	1(14.3)	5(71.4)	1(14.3)		
	창업·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n=7)	1(14.3)	3(42.9)	2(28.6)		1(14.3)
Total		2( 6.7)	19(63.3)	5(16.7)	1(3.3)	3(10.0)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9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추진단장 선정방식 등 : 공개모집의 비율은 낮고, **대부분 내부추천 방식**임(특히 2019년). 근무 형태가 비상근으로 명예직 성격이 강해 전현직 대학교수나 전직 고위공무원을 내부추천으로 선정하지만 이 때문에 추진단의 정체성이나 사업추진력이 떨어지고, 내부 갈등이 발생

		선정방식		근무형태		은퇴 후 참여 여부
		공개모집	내부추천	상근	비상근	
사업 년도	18년(n=10)	4(40.0)	6(60.0)		10(100.0)	3(30.0)
	19년(n=20)	2(10.0)	18(90.0)	1(5.0)	19(95.0)	9(47.4)
Total		6(20.0)	24(80.0)	1(3.3)	29(96.7)	12(41.4)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6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추진단장 직업 유형 : 추진단장은 **전직 교수나 고위공무원 및 공기관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함. 비상근이라 실무 운영에서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해본 전문적 경험이 취약하기에 많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교수	공무원	공기관	기업가	기타	미상
사업 년도	18년(n=10)	5(50.0)	1(10.0)	1(10.0)	2(20.0)	1(10.0)	
	19년(n=20)	4(25.0)	5(25.0)	4(20.0)	3(15.0)	2(10.0)	2(10.0)
Total		9(30.0)	6(20.0)	5(16.7)	5(16.7)	3(10.0)	2( 6.7)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7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사무국장 선정방법과 임금 : 사무국장은 사업지침을 반영하여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모집 방식**을 취함. 역량 있는 사무국장이 근무해야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결코 높지 않은 임금의 비정규직 상황**이라 좋은 인재가 근무하기 어렵고 자주 변경되는 문제점이 드러남.

		선정방법		경쟁률		
		공개모집	내부추천	1:1	2:1	3:1 이상
사업 년도	18년(n=10)	9(90.0)	1(10.0)	1(11.1)	3(33.3)	4(55.6)
	19년(n=20)	20(100.0)	0(0.0)	5(26.3)	9(47.4)	5(26.3)
Total		29(96.7)	1(3.3)	6(21.4)	12(42.9)	10(35.7)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8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연봉 평균 (만원)	사무국장 임금		
			월 300만원 미만	~월330만원 미만	월 330만원 이상
Total		3,591.8	6(20.0)	22(73.3)	2(6.7)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8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사무국 직원 수 : 행정의 별도 예산으로 '2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사업지침에 따라 전체의 18곳에서 기본은 지키고 있고, 추가로 '3명 이상'인 곳도 12개 시군에 달함([표 11] 참고). 총 76명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대상 100개 시군으로 단순 계산하면 250명이 됨.

		평균 인원수(명)	사무국 인원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사업 년도	18년(n=10)	3.0	0	3(30.0)	4(40.0)	3(30.0)
	19년(n=20)	2.3	0	15(75.0)	4(20.0)	1(5.0)
Total		2.5	0	18(60.0)	8(26.7)	4(13.3)

자료 : 농어촌공사(2021.03) 시군 「관리카드」 자료 분석

## (5) 코디네이터의 구성과 운영

- 코디네이터 선정방법과 근무형태 : **내부추천 방식이 81.5%**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상근직 성격을 반영하고, 비공식적으로 상근 및 반상근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
- 코디네이터 인원수 : 코디네이터 인력은 **시군별로 평균 4~5명** 정도이고 코디네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인력풀 측면에서** 쉽지 않은 현실임. 사무국 상근자는 별도 지방비 예산에서 채용하고, 신활력플러스 운영비 예산에서는 수당 방식으로밖에 채용할 수 없는, **예산운영의 제도적 현실**을 개선해야 함

		선정방법		급여지급 방식	
		공개모집	내부추천	월급	수당
사업 년도	18년(n=10)	2(25.0)	6(75.0)	2(25.0)	6(75.0)
	19년(n=20)	3(15.8)	16(84.2)	0(0.0)	19(100.0)
Total		5(18.5)	22(81.5)	2(7.4)	25(92.6)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0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평균 (명)	코디네이터 인원		
			1~2명	3~5명	6명 이상
사업 년도	18년(n=10)	4.3	3(33.3)	3(33.3)	3(33.3)
	19년(n=20)	4.9	2(10.5)	9(47.4)	8(42.1)
Total		4.9	5(17.9)	12(42.9)	11(39.3)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0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6) 행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 행정협의체 담당부서 : 총괄조정부서는 **사업주제를 반영하여 정해지는 경향**이 강하고, 매우 다양함.
- 참여 실과소 수 : 팀별로 협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실과소 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평균 7개**(2018년 6.0개, 2019년 7.5개)이고, 4개에서 11개까지 매우 다양함([표 11] 참고).
- 행정협의체 운영실적 : 협의회는 지금까지 **평균 총 23.5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남.

		평균 횟수	협의회 등 회의 실적			
			~5회 미만	~10회 미만	~20회 미만	20회 이상
사업 특성	(가공·유통 중심) 향토자원고도화	33.6	1(11.1)	1(11.1)	2(22.2)	5(55.6)
	(관광·서비스 중심) 향토자원고도화	17.9	1(14.3)	0(0)	4(57.1)	2(28.6)
	지역푸드 시스템구축	30.1	1(14.3)	2(28.6)	0(0)	4(57.1)
	창업·사회적경제 플랫폼구축	9.7	4(57.1)	0(0)	1(14.3)	2(28.6)
Total		23.5	7(23.3)	3(10.0)	7(23.3)	13(43.3)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8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7) 기타3)

- 역량강화 교육 실적 : 5회 미만이 35.7%, 50회 이상이 14.3%로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
- 중계단 자문회의 실적 : **2~3개월에 1회** 정도 자문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임
- 추진단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정보 공개 : 밴드·단톡방 등 ‘SNS’만을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블로그 등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일정만 공유하는 경우, 자료까지 공유하는 경우, **토론·투표 등을 통해 의사결정까지 하는 경우**

3)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5쪽 이하에서 인용하였고, 세부자료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 3.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검토

#### 1) 의제1. 행정의 총괄조정체계와 정책 전문성 확보4)

##### (1) 농어촌정책의 총괄·조정체계 구축

###### 가.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정책영역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사업지침으로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체에 따라 담당부서가 대체로 정해짐. 하지만 어느 시군이나 사업주체 자체가 농촌정책과 먹거리(로컬푸드, 푸드플랜), 사회적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있고, ‘액션그룹의 발굴과 육성’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사업부서보다 기획부서가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전통적인 건설(교통)과나 특정 사업부서(특화산업과, 유통산업과, 한방향노화과, 산삼엑스포과 등)가 이런 전담부서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실제로 총괄·조정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는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힘들. 다만 중계단 활동경험으로 보자면 **담당 부서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부)단체장의 관심이 크게 좌우**함. 추진단의 역량으로는 행정의 총괄·조정 역할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추진단장의 개인적 역량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나. 관련부서 간 ‘행정협의회’ 운영 정례화, 업무소통·정책 협력 추진

- 사업지침에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음. **참여하는 실과소 수는 4개에서 11개까지 매우 다양**하고 평균 7개임([표 11] 참고). 공주대학교(2012.12, 18쪽) 조사결과에 따르면 협의회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평균 총 23.5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남
- 협의회 운영실적만으로 보자면 본 사업을 계기로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며 매우 활발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사업영역이 넓고 해보지 않았던 융복합(협업) 업무가 본 사업의 기본취지이기 때문임. 하지만 중계단 활동경험으로 보자면 협의회 전체회의만이 아니라 개별 협의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고, **조례에 근거를 둔 제도적인 형태의 협의회 운영은 더 많은 시간**이

4) 이하 내용은 구자인(2021.08.30.), “마을만들기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독본』 15호(가을호)를 참고바람. 의제1 전반과 관련되고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결릴 것으로 예상됨

## (2) 민간 전문가 채용, 담당 공무원의 농어촌정책 전문성 확보

### 가.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공모직위제 확대 등 순환보직제 단점 보완

#### □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 크게 네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적어도 필수보직기간은 지켜야 하며, 공모직위제나 전문직위제를 적극 도입하거나, 이것도 아니라면 민간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임
- **보완장치1 공무원 필수보직기간(2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는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전보 제한기간’의 용어 개정)을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2년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보완장치2 공무원 공모직위제** : 공모직위제란 “특정 부서 내 주요 직위에 대해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치러 임용하는 제도”(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로, 최근 주민자치회 전환과 더불어 시행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이 방식에 해당함
- **보완장치3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3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음.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이고, 직급은 광역 3~7급, 기초 5~8급으로 정해짐. ‘전문관’으로 불리고, 3년간 전보가 제한되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음
  - ‘**전문직위군(群) 제도**’는 전문직위 제도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 유사한 전문직위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5년 이상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것임. 2016년에 지자체에 처음 적용되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대상으로 함

#### □ 중장기 융복합 정책사업에서는 필수 도입 검토

- 신활력플러스사업은 4년간 70억원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영역이 넓고, 주민과의 밀착형 지원을 필요로 하기에 순환보직제는 핵심적인 정책 리스크에 해당함.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 도입은 **사업지침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임
- 다만 이를 사업지침에 강제할 것인지, 권장사항으로 유도해야 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함. **지자체의 조직편성권과 인사자율성**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함

### 나. 개방형, 임기제 등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 □ 보완장치4 : 개방형 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제도

- **개방형 직위제** :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주요 공직에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제도”로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임기제 공무원** : “한시적 사업, 외부 우수인재 총원 등을 위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의미하고, 정년은 적용되지 않지만 임기 동안 신분을 보장함.
  -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이 중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 외로 취급되며, 또 5년간

비교적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임

[표 15] 임기제 공무원의 유형과 특징 비교

구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전문임기제
정원	정원 대체	정원 외	정원 외	정원 외
기준인건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직급	일반직과 동일	가~마급	5~9호	일반직과 동일
신규 임용	경력경쟁임용 (일반직과 동일)	경력경쟁임용 (별도로 규정)	경력경쟁임용 (별도로 규정)	경력경쟁임용 (별도로 규정)
근무시간	상근	주 15~35시간	주 15~35시간	상근
근무기간	총5년 (신규 임용자 5년 이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총 1년 6개월 (필요시 1년 6개월 연장 가능)	1년 단위 (단체장 임기만료일 이전에는 연장 가능)

□ 행정과 민간 사이의 인사교류 및 순환 확대 필요

- 공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 행정 내부에서는 매우 비판적임(특히 6급 이상의 보직). 하지만 갈수록 지역문제가 복잡하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전통적인 행정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도 인정해야 함. 반대로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공무원이 민간(신활력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도 있음
- 인사교류 및 순환을 통해 상호간의 장점을 인정하고, 민관협치 관점을 숙지해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과도 도출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총체적 역량도 성장**할 수 있음

## 2) 의제2.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연계협력 강화<sup>5)</sup>

### (1) 농어촌정책 영역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가. (중앙) ‘삶의질법 등’을 개정하여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지위 확보

- 중간지원조직이란 말뜻대로 보자면 ‘중간’에서 ‘지원’하는 ‘조직’이지만, 엄밀하게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① 행정 ‘사무’**이자, ② 전문가 ‘조직’이며, ③ 사무실이 있는 ‘공간’에 해당함
- 농식품부 차원에서 법의 제개정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 행안부 소관의 ‘마을공동체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고,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가 반영되어 있음
- 다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포함하여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협약 등의 **사업지침 속에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
  - 사업지침은 강제력이 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면 사업기간 중에만 존속하는 단체에 불과해짐.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가 명확해야 함.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지속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나. (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유도

- 추진단의 안정된 설치와 운영을 **사업지침에서 강조**함
  - 추진단 자체가 농촌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성장해가야 함을 사업지침에서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업지침에 예비계획서의 구성요건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옴
  - 2021년 사업지침에서는 ‘① 추진단 구성’과 ‘② 추진단 인건비 확보’를 강조함. 특히 “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군 자체 인건비 확보 및 상근(사무국장, 사무원) 채용 계획(일정 및 금액) 포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문서 유무 확인**”까지 명시함. 또 ‘③ 추진단 지원 근거’로 “추진단(중간지원조직) 지원을 위한 조례 유무 확인 및 없을 경우, 제.개정 계획 포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추진단의 중간지원조직 지위가 불명확하고, **통합형으로의 발전 경로도 불투명**함
  - 추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조례 제정까지 확인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이란 제도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고, 특히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해나갈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사업지침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5) 중간지원조직 관련해서는 구자인(2021.11 예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제도적 성격과 미래”, 『마을독본』 16호(겨울호\_근간)를 참고바람. 의제2 전반과 관련되고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 행정의 정책 간막이가 여전히 강하고, 농촌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민관협치로 설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통합형 설치 논의는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소관 중에서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이외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농촌협약지원센터, 역량강화전담기구, 그리고 마을공동체, 6차산업, 도농교류, 사회적농업, 농촌복지 등의 중간지원조직 수요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는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여전히 사업적 관점이 강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적으로 설치하려는 민관협치 관점의 정책적 시도가 매우 미약한 셈임
- **중계단 활동**을 통해 시군별 기본계획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보지만, 추진단은 당장의 사업집행에 집중하는 경향이고, 행정은 순환보직제로 인해 이해도가 계속 낮은 상황이 지속됨. 사업지침과 별개로 **공동심화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방향을 수립해야 하나 코로나19 상황과 겹쳐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충남에서는 농식품부의 **‘농촌재생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심화워크숍을 기획중이고, 2021년 10~12월 사이에 4개 그룹으로 나누어 1박2일씩 진행할 예정임. 이를 통해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시군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집중토론할 것임

[표 16] 충남도의 농촌재생확산사업 심화과정 프로그램(안)

시기	시간(m)	교육과목(주제)	주요 교육 내용	비고
1일차 오전	10~12시 (120분)	농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강의) 충남 농촌마을정책의 경험 ○(강의) 농촌협약의 추진체계 지침	강의
	13~15시 (120분)	농촌협약 추진체계의 제도적 장치 실습1	○(강의) 행정의 전담조직 구성과 정비 ○(실습) 우리 시군의 전담조직 구성	강의, 실습
1일차 오후	15~17시 (120분)	농촌협약 추진체계의 제도적 장치 실습2	○(실습) 농촌협약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습) 민간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습
	17~18시 (60분)	종합토론 및 중간 정리	○(토론) 쟁점토론과 정리	토론
2일차 오전	09~12시 (180분)	농촌협약 추진체계의 제도적 장치 실습3	○(강의) 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실습) 우리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강의, 실습
	13~14시 (60분)	실습자료 정리 및 발표 준비	○(실습)시군별 실습도면 종합정리 ○(토론)시군별 발표 준비	실습, 토론
2일차 오후	14~16시 (120분)	시군별 사례 발표와 토론, 자문1	○(발표) 시군별 발표(30분 내외) ○(자문) 쟁점토론과 자문	발표, 자문
	16~17시 (60분)	종합 정리	○(토론) 시군별 향후 과제 점검 ○(자문) 향후 과제 제안	토론, 자문

## (2) 광역과 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 강화

### 가. (광역)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기초지자체 지원 기능 강화

- 광역의 역할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검토 자체가 매우 미약함**

- 농식품부 정책사업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광역 자체에 대한 지원 기능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음. 광역에서 자발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이상 예산확보도 사업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시군에만 직접 지원될 뿐 광역 지자체는 시군이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농식품부에 추천하고, 사업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역할 정도에 그침
-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검토도 없기 때문에 지원기능을 **광역 중계단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셈임. 농촌정책 자체의 전문가 인력풀도 미약하여, 전문가가 발굴되고 성장할 기회 자체도 없는 셈임.
- 광역 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고, 충남이나 전북, 전남, 경남처럼 광역의 마을만들기(공동체) 중간지원조직과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단발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보자면, **전북 사례**처럼 시군 추진단 예산을 모아 광역의 기관에게 지원함으로써 추진단 공동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함

□ **충남도**는 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과정에서 **강력한 지원활동을 전개함**

- 2015년부터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행정과 충남연구원)에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함**. 예를 들어, 도비 지원 공모사업과 현장밀착형 컨설팅(2년간), 학습자료 계간지 『마을독본』 발간, 월1회 시군 순회 대화마당 개최, 연 2회 2박3일간 상근자 직무연수 등임
- 2015년부터 연차별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중간지원조직이 **14개 시군에서 개소**했고, 2021년 9월 현재, 14개 시군에서 약 80명이 근무중에 있음. 2021년까지 7년간 투자된 총예산은 11,889백만원(도비 4,580, 시군비 7,309)임

나. (기초지자체) 통합의 범위와 형태, 시기 등은 **지자체 자율성** 부여

□ 지나치게 느슨한 자율성은 **책임 방기에 해당함**

-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추진단의 안정된 성장과 독립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은 **전적으로 시군 자율성에 맡겨진 셈임**. 하지만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나치게 느슨하여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을 정도임

□ 지자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지원기능이 필요함**

- 시군 스스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적어도 공동워크숍을 통해 집중토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재의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은 사업 자체의 집행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가까이에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경험이 있는 시군은 논의라도 시도해볼 수 있지만 대개는 정책 간막이 속에서 행정도 추진단도 갈 방향을 잃고 있는 셈임

### 3) 의제3. 민간의 조직화 촉진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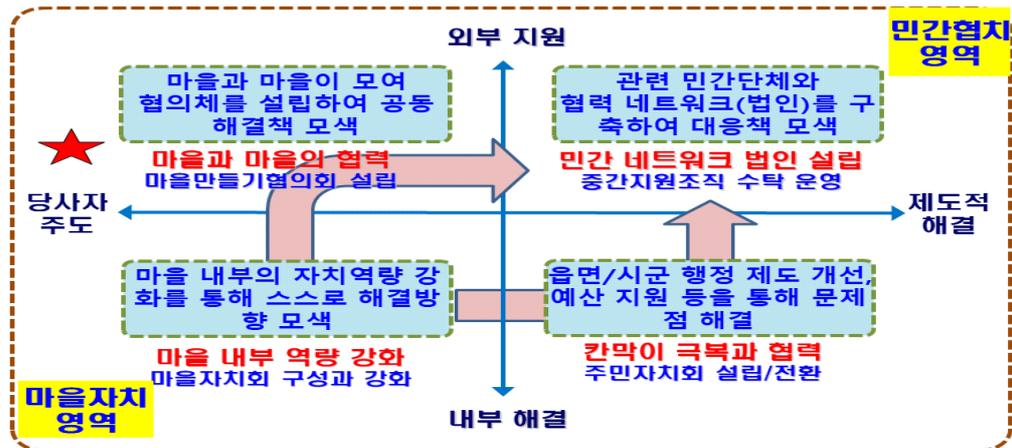
#### (1) 주요 정책별 민간의 이해 당사자 협의체 설립 및 조직화 지원

##### 가. 민간 자발성을 토대로 한 ‘당사자 협의체’ 설립 지원

###### □ 농촌 현실과 당사자협의체의 중요성

-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진전과 더불어 농촌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정 사업을 매개로 당사자협의체가 조금씩 조직됨. ‘주민들의 조직적인 자치 역량’이야말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수단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바람직한 미래상에 해당함. 주민을 조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관점과 자세가 중요함. 주민 개개인에게 있어 ‘조직’이란 “힘없는 약자의 힘을 모아주는 주춧돌이고, 삶의 의욕을 되새김하고,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는 디딤돌”에 해당하기 때문임
- 행정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성장하는 경로를 열어주고, 당사자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 그럼에도 농촌정책 영역에서 주민 조직화는 행정사업별로 행정의 필요에 의해 조직된 셈이고, ‘행정의 칸막이’가 ‘민간의 칸막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그림 10] 당사자협의체의 중요성 : 농촌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경로(영역)



###### □ 실천조직(액션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네트워킹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핵심적인 과제**에 해당함

- 사업지침은 예비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당사자협의체가 참여하는 것을 강조함**.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귀농귀촌, 농촌관광, 지역복지 등의 정책 영역에서 설립된 당사자협의체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협의체와 액션그룹은 공공성 측면에서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원방식을 달리 해야 함

6) 중간지원조직 관련해서는 구자인이 작성한 『마을독본』 13호(당사자협의체), 14호(네트워크 법인) 특집주제 총론 원고를 참고 바람. 의제3 전반과 관련되고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 액션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당사자협의체 설립과 성장은 ‘액션그룹의 네트워킹’이란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설명되는 것에 그침.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 조직들이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고 **서로 연대하며 당사자협의체를 설립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개별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개인의 역량강화에는 기여하지만 조직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과제일 수도 있음.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과정도 그렇고, 당사자협의체 설립과정도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 시군별로 시도되는 다양한 시행착오 경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광역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기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나. 현장 학습모임 등 단체의 필요에 따른 **조직화 활동 지원**

### □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지 자체가 민간의 조직화 지원**

-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그 자체가 ‘액션그룹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네트워킹’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의 조직화 과정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
- 사업지침에서도 핵심내용으로 강조함. 2021년 사업지침에서는 예비계획서 구성요건으로 ‘**⑤ 사회적경제 포함**’을 강조하고, “추진위원회와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조직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또 ‘**⑥ 참여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총 사업비의 30% 이상(제 경비 제외)**을 로컬액션그룹 활성화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활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실제 기본계획 내용이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소액사업**을 통해 자주적인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작은 실천을 시도해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 액션그룹의 성장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밀착형의 지원이 필요함**

- 농촌은 저밀도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촌형의 사회적경제 조직화는 일반 도시와 다를 수밖에 없음. 여전히 표준화된 방법론은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셈임**
- 중앙(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차원에서 이런 경험들을 모니터링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론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함. 몬드라곤대학의 MTA(Modragon Team Academy) Korea처럼 전문성을 축적한 조직과 협력하여 농촌형 창업과 조직화모델을 방법론적으로 빨리 정립해야 함

## (2) ‘당사자 협의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영리법인 육성

### 가. **민간 주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장려**

#### □ **작은 조직은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법인 설립을 통해 공적 지위를 확보함

- 개별 행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은 사업완료 이후에 지속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움. 이것은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한계도 있지만 ‘칸막이’에 갇혀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작은 조직은 협력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받으며 성장하게 됨

-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많은 액션그룹들도 이 점을 놓치면 실패하기 쉽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필요를 공유하는’ 다른 기관·단체·조직들과 끊임없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추진단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행정은 이런 경로를 가로막는 칸막이를 강요해서는 안됨
- 성장과정에서 일부는 임의단체로 남기도 하고, 일부는 민간단체로, 일부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출할 것임.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운영이란 정책적 필요와 맞물려 네트워크 법인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함**

□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자체는 법인이 아니기에 **수탁 운영할 법인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은 ① 행정이 직영하는 경우(행정직영), ②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민간위탁), ③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재단법인) 등이 있음. 여기서 민간위탁은 지역사회에 수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의 존재를 전제로 함. 여기에 ‘정책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형으로 설치하려 한다면,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셈임
- 한국 농촌 지자체 현실에서는 이런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민간 법인을 찾기가 쉽지 않음.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각 정책 영역의 질적 발전이나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도 기대하기 어려움
- 이 때문에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경로나 방법, 형식 등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 액션그룹 및 당사자협의체의 설립이나 성장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의식적인 실천’이나 ‘정책적 유도’와 맞물려 법인 설립경로를 설계해야 함.

□ 농촌정책 네트워크 법인 설립의 **두 가지 경로**

- 제1안) 좁은 의미에서 농식품부 중심의 농촌정책 영역을 중시하는 경로 : 농촌 마을공동체, 농촌관광, 6차산업, 사회적농업, 농촌복지, 귀농귀촌, 푸드플랜 등의 그룹을 우선함. 농촌의 특성상 행정 사업과 더욱 강하게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농업·농촌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집중하는 방향이기도 함.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강하고 농정 분야로 국한되기에 결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 또 마을 주민들 관점에서도 관련성을 이해하기 쉽고, 행정의 전통적 업무 체계와도 일치된다는 장점이 있음. 단, 사회적 가치 지향의 정책 영역과 멀어지고, 행정 내부에서의 협력관계가 매우 미약하다는 상황에서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 제2안) 사회적 가치 지향의 지역사회 정책 영역을 중시하는 경로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지속가능발전 등의 그룹이 여기에 포함됨. 사회적 가치 지향이 보다 명확하고 중간지원조직 논의도 활발하여 공동의 지향점을 찾기가 훨씬 쉬운 장점이 있음. 하지만 행정의 칸막이가 높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통합 논의 자체가 어렵고, 또 각각의 개별 협의체 조직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시너지효과가 없고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도 있음
-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어느 안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체로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운동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제2안을 선택하기 유리하고, 특히 행정이 조직개편을 통해 ‘공동체’ 전담 부서를 신설한 지역이라면 제2안이 보다 현실적임. 두 가지 경로 사이의 조합

도 충분히 가능할 것임. 이렇게 네트워크 법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있고, 그래서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이런 학습 역량을 키우고, 제도적 이해를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음

## 나. 사무위탁이나 보조사업, 계약사업 등으로 민간 법인의 성장 촉진

### □ 한국 농촌에서 **너무나도 빈약한 네트워크 법인 설립** 현황

- 농촌정책 영역에서 민간 네트워크 법인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함. 대부분 충남과 전북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수탁 운영과 연계하여 발전되어 있는 정도임.
- **전북** : (사)지역활력센터, (사)전북지역농업연구원, (사)마을엔사람(진안군), (사·협)완주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사)장수지역활력센터, (사)10년후순창 등 7개 이상
- **충남**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법인이 6개 이상([표 14] 참고). 이외에 재단법인 3개 시군(청양, 부여, 서천)

[표 17] 충남 시군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법인 설립 현황(2021. 9. 기준)

지역명	법인 명칭	설립년도	조직화 방식	비고
홍성군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2016. 4.	당사자협의체의 대의원 방식 + 전문가 참여	'홍성통'의 민간영역 발전
천안시	(사)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2016. 5.	마을 리더 개인과 활동가, 전문가 주도	농촌사업 및 협업체 미발달
보령시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2016.12.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도 + 전문가 보완	농촌 일반 모델
예산군	(사)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2017.11.	마을대학 5회로 협업체 조직화 + 네트워크 구축	지원센터 인큐베이팅 모델
서천군	(사)서천마을누리네트워크	2019. 4.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도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계	2021년부터 지원센터는 재단 전환
금산군	풀뿌리주민네트워크 (사)금산&사람들	2020. 1.	마을대학, 워크숍 + 분야별 개인, 단체 결합	지원센터 인큐베이팅 모델

- **이외 지역** : 2003년에 협의회로 설립되어 단계적으로 발전해온 (사·협)원주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8년 10월에 창립한 (사·협)상주다움 정도임
- 최근에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농촌협약을 준비하면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시군에서 민간 법인이 설립됐지만 논의가 풍부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 그래서 한국 농촌 현실에서는 행정의 '**정책적 인큐베이팅 관점**'이 중요함

- 행정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과 성장과정을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지원해야 함
- 민간 법인의 **수익사업** 영역도 행정이 지역현장에 밀착된 컨설팅기관을 지역 내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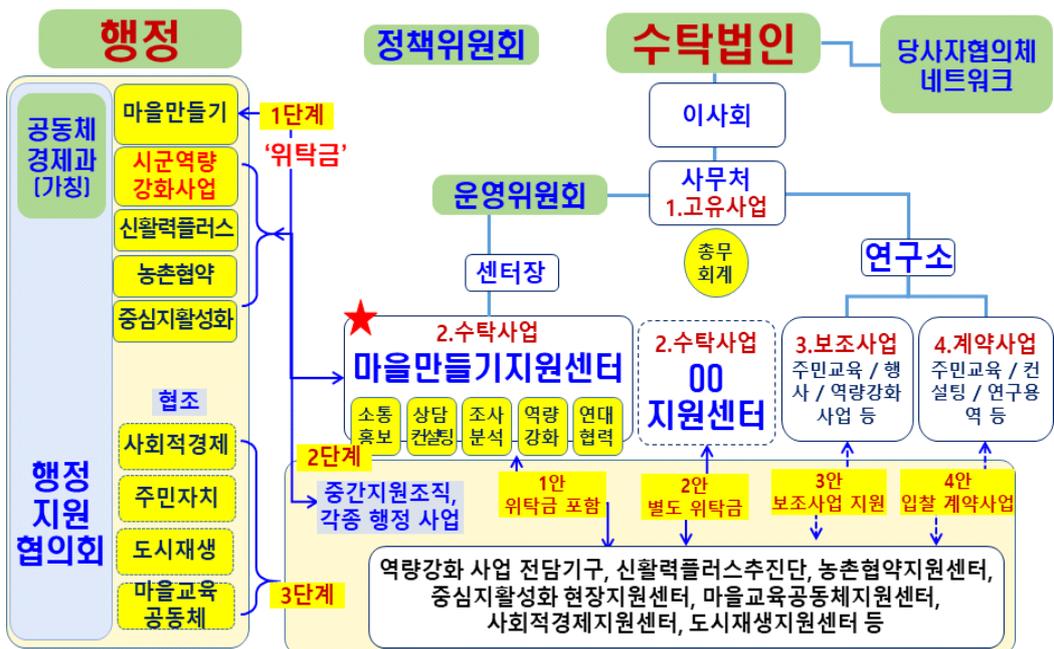
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인큐베이팅’ 관점을 가질 때 가능함. 한편으로 농촌 (지역)정책에 관여하는 민간 법인이 지자체 내부에 일단 설립되면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각종 **보조사업**이 몰릴 수밖에 없음. **지방의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민관협치와 중간지원조직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임

-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도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과 성장과정을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인큐베이팅하려는 관점이 중요함. **4년의 사업기간이 완료될 시점에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모아 지역사회 내에 ‘튼튼한 네트워크 법인’이 반드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함

□ 행정과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법인의 사업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됨**

- **네트워크 법인의 4대 사업영역과 수위탁 구조** : 기본적으로 고유사업, 수탁사업, 보조사업, 계약사업 등의 4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네트워크 법인에 참여하는 당사자협의체 사이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중간지원조직 상근자를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함.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와 이사진의 역량이 축적되면 보조사업과 계약사업 영역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음(그림 6) 참고). 여기에 2단계로 역량강화 전담기구나 신활력플러스추진단, 농촌협약지원센터 등의 사업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는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가 얼마나 중간지원조직의 수위탁 구조를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음

[그림 11]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설치와 수탁법인의 4대 사업영역



#### 4) 의제4.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 제도화

##### 가.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책의 기본조례’ 제정

###### □ 농촌협약까지 염두에 두고 농촌정책의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함

- 행정사업을 추진할 때 제도적 근거로 사업조례를 흔히 제정함. 하지만 ‘정책 간막이’를 넘어 서면 관련 사업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협업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됨
-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실행 차원에서 사업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움. 하지만 바람직하기로는 농촌정책의 기본조례를 제정한다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신활력플러스 사업조례는 추진단의 설치근거와 인건비 지원이 핵심내용이기 때문임**
- 하지만 기본조례를 어떻게 제정해야 할지는 여전히 불명확함. 향후의 정책동향이 불명확하고 농업농촌기본법과 삶의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이 어떻게 정비될 것인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임. 여기에 농촌재생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겹쳐 지자체의 기본조례가 어떤 정책사업까지 포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음
- 적어도 농촌협약까지 염두에 두고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함. 신활력플러스나 농촌협약처럼 정책 범위가 넓고, 사업 영역이 포괄적이라면 기본조례 속에 담겨야 민관협치의 제도적 틀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음. **사업별로 정책위원회나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을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임**

###### □ 지자체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조례는 별도로 제정해야 함**

-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형으로 설치하자면 별도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음. 기본조례 속에 세부 내용을 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임
- “(가칭) 00시·군 농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형식이 될 것이고, 주요 내용은 설치근거와 역할, 운영방식, 공무원 파견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임. 민간위탁 방식이라면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크게 참고가 될 것이고, 재단법인이라면 기존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임

##### 나. 기본계획, 정책위원회/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민관협치 제도화

###### □ 모든 사업조례는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를 담아야 함

- 민관협치는 제도적 근거가 명확해야 행정문화로 정착될 수 있음. 조례의 구성 자체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제1~3의 내용들이 잘 담겨야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를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임
- 진안군에서 2010년에 제정한 마을만들기 조례와 귀농귀촌 조례는 여전히 민관협치 조례의 모델로 평가됨. **충남도의회 김명숙 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02.22. 제정된 “충남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 조례”도 민관협치를 강조하는 선진 조례로 평가됨

###### □ 제도적 장치에 기반하여 민관협치가 문화로 정착해야 함

- 조례는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많을수록 민간에 대한 책임성이 강함. ‘조례는 약속’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많을수록 행정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함. 그래서 서 조례에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임

- 하지만 이런 조례도 공론장을 거쳐 제정되지 않으면 사문화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음. 행정도 민간도 상호학습을 통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행정과 민간이 서로 신뢰하며 약속을 지키려는 **민관협치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형성**될 것임

###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2-22 조례 제 4900호  
(대표발의) 김명숙 도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 ④ “**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 ⑥ “**정책 협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는 (중간 생략) 종합적인 시책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간 생략) **읍면 주민대표기구인 농촌형 주민자치회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간 생략)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농촌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및 정책 협업 촉진을 위하여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간 생략)

제5조(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간 생략) “농촌정책 협업 촉진 행정협의회”를 둔다.

- ②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중간 생략)
- ③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농촌활력과장이 된다.

제6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농촌정책 사업 집행을 위해 충청남도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간 생략)

제7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중간 생략)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중간 생략)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 단위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사무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정책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도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4. 분석과 제안

### 1) 종합분석 및 평가

#### (1) 종합 진단과 분석

□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사업**

- 2018년에 10개 지자체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 마지막 사업 시군은 2021년 7월에 선정됨. 2018년에 시작한 시군은 올해 완료될 예정이고(물론 다수 사업이 이월 예정), 내년에 시작하는 시군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임**
- 총예산은 7천억 규모이고, 연차나 집행액으로 보자면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셈임. 따라서 엄밀하게 모니터링 점검하고, 시행착오를 수정·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농촌협약제도의 도입으로 지자체는 관심주제가 ‘또다른 공모사업’으로 이미 넘어간 분위기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의의나 가능성, 중요성 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약해지고 있음**

□ **주요 성과와 가능성**<sup>7)</sup> : 여전히 현재진행형

- **‘지자체 농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비교적 잘 반영한 정책** :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자체 차원의 해당 사업주체에 대해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크게 강조하고 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사업계획 수립과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협의체 설치 및 운영, 민간 주체의 발굴과 육성 등이 모두 그러함. 하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시행착오는 반복되고 있는 경향임
- **다양한 활동가 및 액션그룹의 출현** :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사회에 숨어 있던 활동가 및 액션그룹의 발굴과 육성에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사무국에서 상근하는 인력이 시군 당 2.5명, 코디네이터가 5.3명으로,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경에는 약 800명의 활동가가 지역사회에서 발굴될 것으로 기대됨. 또 평균적으로 사업 시군 당 15개의 액션그룹과 27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음. 본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된 액션그룹도 평균적으로 3개 정도 되며, 회원 수는 65명 정도임. 액션그룹이 또다른 액션그룹을 지원하고 확장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농촌사회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총체적 인적역량 강화 기여** : 지역사회 내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서도 상당한 실적이 나타남. 액션그룹의 80% 정도가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018년 지구는 시군 당 약 35.2회, 2019년 지구는 13.1회 정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것으로 나타남. 사업수행 연도를 고려하면 월 1회 이상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이들 인적자본은 향후 다양한 조직화의 경로를 거쳐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거나 각종 협의체와 법인 설립으로 이어져 농촌활성화에 전반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통계 수치는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33쪽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함

- **행정과 민간의 상호소통과 협력 경험 축적** : 예비계획서 작성을 준비하면서부터 다양한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해결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함. 정책 간막이를 극복하며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그룹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음. 관-관, 민-관, 민-민 사이의 활발한 소통으로 '정책 간막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국면에서 제공됨

## (2) 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sup>8)</sup>

### □ 주민참여와 네트워킹 만족도 평가 : 대체로 양호한 평가

- 사업추진에서 주민 참여 부분은 **3.83~4.07점 수준으로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함**. '지역주민 우선순위 반영'에 대해서는 4.0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도 대체로 높게 평가됨. 네트워킹의 경우에도 3.9점 수준으로 낮지 않게 평가함. '민간기관 간 협력증진'과 '민간·행정간 협력증진' 모두 유사한 점수로 평가하였음(3.9점)
- **중계단 활동**을 통해 예비계획서 심사와 기본계획 승인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계속 강조하고, **사업지침**에도 이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주민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리고 그동안 이질적인 정책 영역으로 생각하여 만나지 않던 관계가 **민-민, 민-관 사이의 접촉기회도 확대**되면서 네트워킹도 증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주민참여			네트워킹	
	지역주민 우선순위 반영	사업계획 주민참여	주민참여 증진 홍보활동	민간기관간 협력증진	민간·행정 협력증진
<b>18년 지구</b>	4.07	3.91	3.86	3.99	3.87
<b>19년 지구</b>	4.04	3.92	3.83	3.88	3.91
<b>Total</b>	4.05	3.92	3.84	3.92	3.90
<b>t</b>	.36	-.17	.29	1.40	-.45

주 : \*p<0.05 \*\*p<0.01 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7쪽에서 인용함

### □ 거버넌스 만족도 평가 :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권한이나 지자체 및 민간 자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인 2.88~3.26점(3=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추진위원회가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행정사업이 가진 제도적 한계(특히 보조사업지침)를 극복하지 못한 측면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됨
- 이 부분은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들 것이며, 사업경험이 축적되고 제도적 한계가 해결되면서 민관협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성장해갈 수밖에 없을 것임

8) 조사 결과는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7쪽에서 인용함

	추진위원회 의사결정권한	지자체 자율성	민간 자율성
18년 지구	3.03	3.06	2.88
19년 지구	3.26	3.17	3.09
Total	3.18	3.13	3.02
t	-2.32	-1.09	-2.00

주 : \*p<0.05 \*\*p<0.01 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7쪽에서 인용함

## 2) 당면과제와 해결방향 제안

### (1)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내실화

#### 가. 정책 전달체계 자체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를 강조하면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추진체계**는 민관협치형으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중앙정부나 광역 차원에서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성격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임
- **광역**은 단순 전달하는 기능에 집중되고, 자문위원 성격에 불과한 권역별 중계단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음. **중앙(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차원에서도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 나. 사업 추진체계의 민관협치 성격 강화<sup>9)</sup>

- **추진위원회의 제도적 위상 강화**
  - 추진위원회가 민관협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조직 구성이나 운영 측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함. 행정간사 이외에 **민간간사도 선임**하여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회의록을 정리하여 공개해야 함
  - '정책의 공동생산' 측면에서 **의제 선정과 결정 과정**이 명확해야 함.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권역 중계단이 가진 권한을 일부 이관**하여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계속 훈련해야 할 것임
- **추진단장의 권위와 위상 강화**
  - 추진단장은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의 총괄 조정과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휘·감독, 세부사업의 진행 총괄, 행정과 추진위원회 및 액션그룹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등 상당한 역할을 수

9)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29~32쪽의 제안을 요약하고 필자 관점에서 평가를 보완함

행해야 하는 직책임. 현재와 같이 비상근의 명예직처럼 운영한다면 책임성을 가지기 어려움

- 추진위원장과 추진단장 사이의 관계를 본다면 **한국 농촌 현실에서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음. 집행조직의 대표(추진단장)이 의사결정조직의 대표(추진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함. 하지만 행정과 민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국 농촌 현실에서는 추진단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병행하면서 민간의 의견을 대등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자체 내부에 인적풀이 취약한 상태에서 추진단장의 권위는 '**액션그룹의 적극적 지지와 대표성**'에서 궁극적으로 나올 것임. 추진단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권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비상근에서 반상근,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에 걸맞는 활동비가 보장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함

#### □ 전문성 있는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제도 기반 정비

- 현실적으로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성공 여부는 사무국장의 역량에 크게 의존함.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고려한 자격기준과 이에 걸맞은 **현실적인 인건비 산정**이 필요함. 활동경력이 20년 이상인 50세 전후라면 매월 4백만원 이상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용되도록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4년간은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채용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 이런 역량에 걸맞은 사무국장을 찾기 힘든 현실까지 고려하여 중앙 및 광역에서는 공개채용 설명회 개최나 집중심화과정 운영, 전문가 파견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완장치**도 검토해야 함

#### □ 코디네이터 위상과 역할 정립

- 현재의 사업지침에서 사무국의 상근자수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반면,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 사업수가 아주 많은 현실에서 코디네이터의 성격 자체는 타협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사무국의 인력을 대폭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여 행정사무 처리 역할을 일부 담당**해야 함
- **현직에 있는 비상근 전문가는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적어도 반상근할 수 있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어야 할 것임. 홍보와 소통, 회계(보조사업 정산), 역량강화 등의 역할은 사무국과 분담하여 처리하고, 사업분야별로 코디네이터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다. 사업지침의 변경, 보완사항

#### □ 지방비 30% 예산 안에서 **상근자 인건비** 인정

- **역량 있는 사무국장**과 **사무원 및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와 같이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는 별도 지방비로 사무국 직원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음. 코디네이터도 운영비(총액의 7.5%)에서 수당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그래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의 현장지원센터 사례처럼 **지방비 매칭 30% 예산 안에서 인건비 사용을 적극 인정**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업지침을 변경해야 함. 동일하게 '자치단 체자본보조' 예산임에도 차이를 두는 것은 불공평한 지침에 해당함

□ 사무국장 인건비 상향 조정과 채용방식 개선

- ‘월 3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불만사항임. 사업지침에 자격기준에 따라 월 300~350만원, 월 350~400만원, 월 400~450만원, **월 500만원 이상** 등으로 단계를 둔다면 역량있는 사무국장을 채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임
- 물론 활동경력만으로 역량을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용설명회, 숙박워크숍, 발표평가, 상호평가 등 **채용방식 자체**가 훨씬 세련될 필요가 있음. 사업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좋은 사례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임

□ 행정의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시 요구

- 현재의 사업지침에는 총괄조정(전담)부서와 행정협의체는 강조되고 있지만 순환보직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4대 제도적 장치(앞의 의제1 (2) 부분 참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음. 4년간 진행되고, 융복합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순환보직제의 폐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함
- 지자체의 조직편성권과 인사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대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홍보하고, 우수사례도 수집·공유해야 함

□ 광역 단위 지원기능 강화 방안 검토

- 사업지침에 광역의 지원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함. 현재 **100개 시군에 걸친 사업물량**은 중계단의 자문 방식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책임구조가 확산되기 쉬움
- 선정된 시군의 사업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광역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어디선가 담당해야 함. 물론 전문성과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옥상옥’**이 되지 않을 것임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방향 제시

- 현재의 사업지침에서는 추진단이 향후 어떤 경로로 발전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불명확한 상태임. 이론적으로라도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는 보편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세부 경로는 지자체 특성에 맞추어 토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농촌협약을 염두에 두고**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농촌재생확산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집중심화워크숍**이 수시로 개최되도록 장려해야 함

□ 액션그룹 활동성과를 모아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 강조

- 추진단의 향후 경로를 설계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는 위해서는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이 전제가 되는 셈임.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4년차에 추진단의 진로도 명확해짐
- 이를 위해서는 추진단과 액션그룹 리더 이외에도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당사자협의체**들과도 충분히 토론해야 함. 특히 중간지원조직 설치 수요가 명확하게 있는 정책 영역의 행정부서와 민간단체들이 우선 모여 초기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할 것임

## (2)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지원 기능 강화

### 가. 농식품부의 역할 강화

#### □ 지자체의 민간 우수인력 확보 지원 : 공동채용설명회 정기 개최

- 추진단 구성(사무국장 및 사무원 채용)이나 코디네이터 임명 등 우수인력 확보가 모든 지자체의 공통과제에 해당함. 여기에 대해 해당 지자체 사정으로 일임하기보다 중앙 및 광역에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충남에서는 공모사업 첫 해인 2018년부터 매년 신규 공모를 희망하는 시군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공동워크숍을 개최함

#### □ 중계단 위원수 확대와 광역 지자체 단위로 재편 : 중계단 위원 부담 경감

- 현재 80개 지자체에서 활동중이고, 2022년에 100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35명 중계단 위원들이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임. 또 시도 연구원이나 중간지원조직 소속 위원들은 타 광역으로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임
- 빨리 중계단 위원수를 확대하고 광역 지자체 단위로 시스템을 개편하여 시군 현장에 더 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또 시도 연구원이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는 등 제도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함

#### □ 광역 지자체에 별도 예산 지원(혹은 별도 편성 요구) : 광역의 지원기능 강화

- 시군 지자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광역 지자체가 본 사업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농식품부가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혹은 광역 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방비로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처럼 본 사업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함
- 전체 사업비 규모를 생각하면 5%만이라도 광역 시스템에 투자해야 할 것임. **예산 확보의 기술적 방법론**으로 1) 선정된 지자체에서 시도 연구원에 매년 고정 금액을 출연하는 방법, 2) 광역 단위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매년 고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 3) 광역 단위 관련 중간지원조직(모법인)에 소액 컨설팅(연구용역) 예산을 수의계약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국비 사업으로 광역 지자체에 지원하고, 별도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라 봄

#### □ 각종 정보의 충분한 공유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소통구조 확보

- 여전히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미흡함. 또 선정 시군마다 유사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유사한 애로/건의사항이 있는데 그때그때 해결하는 단편적 대응에 그치고 있음. 사업지침 해석, 재교부 여부, 예산과목 편성, 추진단 법인화 방향 등 선정지구마다 거의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임
- 중계단 위원들도 행정 실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에 체계적인 답변도 어렵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계속 유보하거나 행정에 미루는 상황임. 온라인 상에서 중계단 위원만이 아니라 모든 선정지구 공무원 및 추진단, 액션그룹 등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함. Q&A 작업도 훨씬 강화해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 정책 방향에 대한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 과정 중시 : 중앙의 민관협치 구조

- 농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후에 통보받는 방식은 민관협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코로나19 상황이라 하여도 소인수 정책토론은 충분히 가능할 것임. 온라인 정책토론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토론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공론장(場=온라인 플랫폼)이 확장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참여하면서 공동학습이 강화되고, 농촌정책의 외연도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임.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이제 절반도 진행되지 않는 단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이나 애로사항 공동해결 차원에서라도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야 함

□ **전문적인 연구논문 생산을 위한 별도 공모사업 도입** : 학술토론 확대

- 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하여 전문연구자들에게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논문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토론의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임. 현재는 이런 기초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정책토론도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시도 연구원과 지역대학, 민간 컨설팅기관 등의 연구자들도 본 사업에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연구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함. 이를 위해 별도 공모사업을 도입하고, 또 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참여정부 시절의 FD학회 논의를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임
- 농촌정책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행정 공무원도 민간 활동가도 연구자도 정책토론이 자주 있어야 논쟁도 생산되고 공동의 방향도 확인될 수 있음. 현재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논쟁 자체가 없고, 사업지침을 단순 집행하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임

□ **주제별 소인수 심화워크숍 개최** : 지식의 공동생산과 공유

- 시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제도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음. 특히 역량강화 프로세스는 빨리 정립되고 공유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과업지시서 설계 방법, 우수인력 채용방법, 보조사업 집행과 정산,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방법, 추진단의 법적 형태와 향후 경로, 기본조례의 제정 방법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음. 행정 공무원 대상으로 별도 주제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임
- 시군별로 선착순 20명 정도로 모으고, 매회 1박2일로 숙박하며 심화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공유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 또 광역별로 전국별로 농촌정책의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나. 농어촌공사의 지원 기능 강화

□ **공사 산하에 전문인력 대폭 확대** : 중앙의 지원기능 강화

- 현재처럼 사업관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 분석과 연구 기능을 크게 보완해야 함.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추가로 3~4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 주요 역할은 1) 선정지구의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분석, 2) 공통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과 추가적인 지침(안) 작성, 3) 관련 정책 영역과의 협력방안 모색(푸드플랜,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 삶의질계획,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4) 전국 단위 공통사업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관리 등 현실적이고 당면한 과제가 아주 많음

□ **자료 수집 및 분석, 공유 기능 강화** : 공동학습자료 생산과 보급

- 전국 80개 시군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아주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에 민관협치 관점에서 갈등하거나 협력하는 다양한 사례들도 축적되고 있음. 기존의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활동경험들이 전혀 정리되지 못하고, 공유도 되지 못함. 시군 「관리카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가 생산될 수 있음.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함
- 특히 액션그룹의 발굴과 육성 프로세스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 농촌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민간조직들이 움직인 사례가 매우 드물 것임. 그들이 제출했던 수많은 사업계획서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참고할만한 시사점들이 많을 것임

다. 광역(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의 지원기능 강화

□ **광역 단위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 특히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협력 강화

- 광역 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충남이나 전북, 전남, 경남 처럼 광역의 마을만들기(공동체) 중간지원조직과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농촌정책 영역의 재단법인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단발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보자면, 전북 사례처럼 시군 추진단 예산을 모아 광역의 기관에게 지원함으로써 추진단 공동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함.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광역은 광역답게’ 고유한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임

□ **광역 행정의 조직개편과 행정협의체 운영** : 광역 지자체부터 모범을

-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시군 행정에 전담부서 설치와 행정협의체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했지만 광역 단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음(농촌협약도 마찬가지임)
- 농촌정책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하고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정책적 신호’가 계속 필요함. 적어도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소관의 업무가 하나의 ‘과’에 배치되어 있을 때 업무협조도 유리하고, 시군에도 정책적 파급력이 클 것임
- 행정협의회도 설치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런 점에서 충남도의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는 시사점이 크고,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자면 농식품부의 적절한 ‘정책적 신호’가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3) 지자체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농식품부와 농특위의 역할 제안

※ 아래 내용은 세미나 이후에 보완하여 작성할 예정이고 토론 활성화를 위해 목록만 제시합니다.

#### (1) 농식품부의 역할과 과제 제안

- 가. 농촌협약의 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중장기 구상 설계
- 나.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형태에 대한 집중 심화워크숍 개최
- 다. 민간 활동가의 심화학습을 위한 광역 단위 교육연수원 설립과 운영
- 라. 농촌 '면' 기반의 정책협업 강화 :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등
- 마.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 토론 중심의 민관협치과정 개설

#### (2) 농특위의 역할과 과제 제안

- 가.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과감한 행정혁신 유도 : 행안부 협조
- 나. '삶의질 특별법'을 지렛대로 부처별 조정 역할 강화 : 삶의질위원회 연계
- 다.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의결안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라. 행정과 민간의 정책토론 적극 유도 : 논쟁의 생산과 공감대 확산
- 마. 농어촌정책 분야 민관협치 우수사례 수집 및 표창, 확산

#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1.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농촌의 현장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빠르게 진행되는 자치분권과 정책협업 요구,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



## 마을학회 일소공동체

마을학습 | 마을기록 | 지식생산 | 지식공유

농촌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제 힘으로 제대로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 마을 안팎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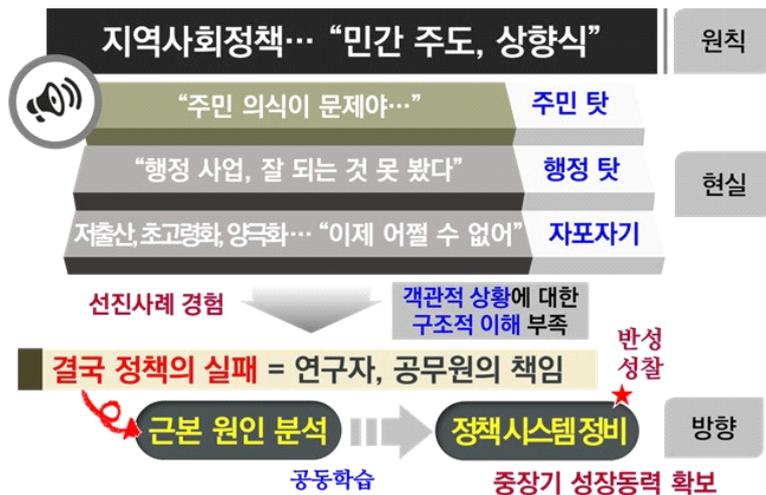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일소공동체’의 뜻은 우리에게 공부하지 않는 소와 일하지 않는 도깨비 사이의 오래된 나뉠을 새롭게 이어서 공부하는 소, 일하는 도깨비가 되라고 일깨웁니다.

마을학회 일소공동체는 일과 공부, 삶과 삶이 하나인 21세기 농촌의 가치와 문명을 마을의 삶 속에서 다시 상상하고 실험합니다.

# [전제] 농어촌정책의 근본과제

## “왜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정비’ 인가?”

**[반성] 지자체 행정이 먼저 나서서 혁신해야 한다**  
 → ‘월급을 받는 사람’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농촌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

# [정책] 중앙정부 정책 흐름에 어떻게 대응을 것인가? → '아주 빠르고 복잡한 요구', 선제적 대응과 주체적 접근

[중앙1. 주민자치] 읍면동 생활권 정책의 주민주도성 강화  
→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다양한 영역에 참여 유도

[중앙2. 재정분권]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1단계)  
→ 지자체의 계획 자율성 확대(농업·농촌지역 특화사업)  
- 마을만들기 시범사업(1단계) 추진(2021. 10. 1. ~ 2022. 9. 30.)  
- 마을만들기 시범사업(2단계) 추진(2023. 1. 1. ~ 2024. 12. 31.)

[중앙3. 신활력플러스] 사업 위치와 임팩트(농업·농촌) 유망사업  
→ 다중이용시설 복합화, 관광형 시설 구축(유망사업)  
- 농촌활력의 마을을 사업  
- 농촌활력의 마을을 사업(1단계) 추진(2021. 10. 1. ~ 2022. 9. 30.)  
- 농촌활력의 마을을 사업(2단계) 추진(2023. 1. 1. ~ 2024. 12. 31.)

[중앙4. 부도관리] 지역 정책의 범주와 중간지원조직  
→ 다중이용시설 복합화, 관광형 시설 구축(유망사업)

[중앙5. 정책연구] 지역사회의 자치·활력·재정 업무협약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업무협약 체결

[기획위]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연관성 강화 추진체계 구축'  
- 농어촌정책의 연관성 강화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별 주요 정책 방향  
- 농촌진흥청: 농촌활력의 마을을 사업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 안전성 강화  
- 농식품부: 농촌활력의 마을을 사업  
- 농촌진흥청: 농촌활력의 마을을 사업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 안전성 강화  
- 농식품부: 농촌활력의 마을을 사업

**\* 업무 공통점 = 기존 행정(공무원)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분야**  
 →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이 결합되어 있고, 장기사업인 경우가 많음  
 1)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 주도**가 전제되어야 성공  
 2) 행정의 **전담부서 설치**와 **업무협력**이 원활해야 성공  
 3) **중장기적 관점**에서 길게 보며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성공  
 4)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접근해야 성공

## 지자체의 행정조직 개편과 정책전문성, 계획 역량 향상이 필수 5

# [문제의식] 농촌 현장 문제는 누구라도 쉽게 안다!!! → "자기 애로사항과 핑계만 말한다"



**주민 당사자**  
"제도 개선이 너무 안된다"

"상향식이라 말하지만 안된다는 것이 너무 많다", "사전 준비가 너무 안된 상태에서 선정되는 것 같다", "교육 방법론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자침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행정 공무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사업자침이 너무 자주 바뀐다", "주어진 업무량을 무시하고 신규 사업이 너무 많다", "항상 감사가 두렵고 정계가 신경 쓰인다", "행정 내부의 칸막이로 사후관리가 쉽지 않다", "중간지원조직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컨설팅 기관**  
"고생하지만 보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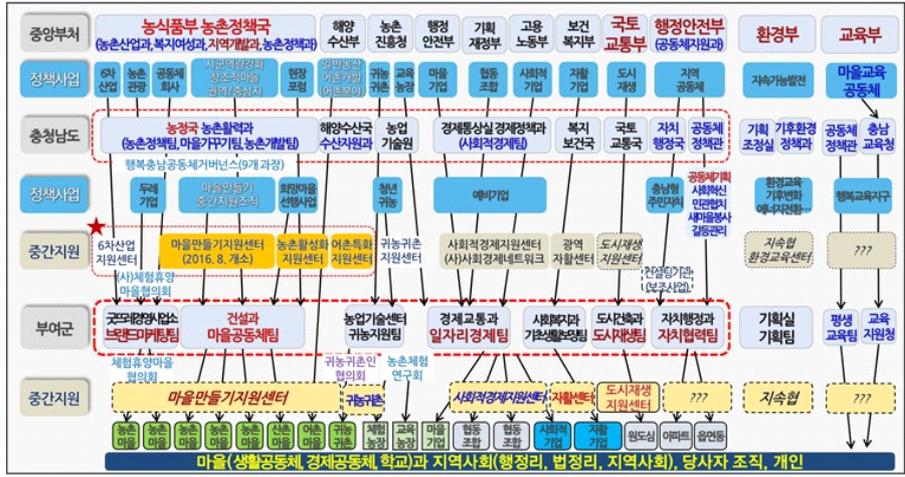
"현재 입찰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결합이 어렵다", "행정에서 항상 '을' 취급받아 전문가로서 자존감이 떨어진 다", "현장에 밀착하려 하지만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에 중간지원조직이라도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된다"

**중간지원조직**  
"인력도 지위도 너무 열악하다"

"인력은 적는데 할 일은 너무 많다", "같은 현장에서 시행되는 행정사업들 사이에도 칸막이가 너무 높다", "주변에 역량 있는 활동가를 찾기 어렵다", "행정에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관행과 문화, 그리고 제도적 장치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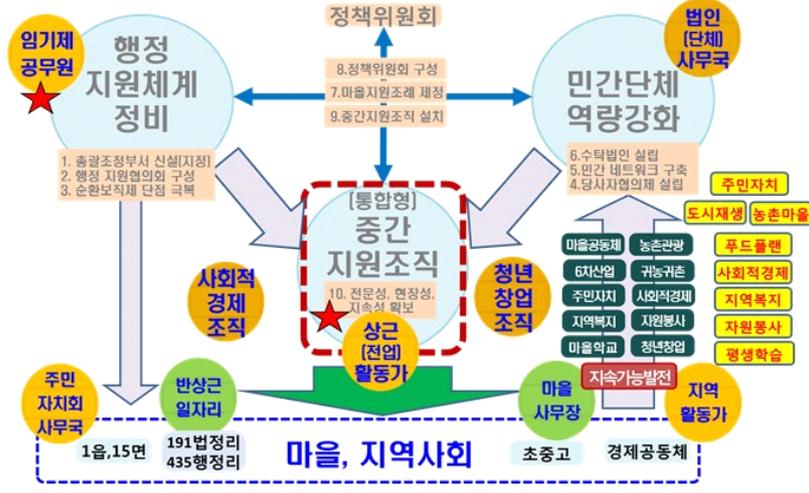
# [근본과제1] 칸막이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행정도 민간도 '현장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신활력플러스, 푸드플랜, 농촌협약, 농어업회의소, 중심지활성화, 농촌공간계획  
어촌뉴딜300, 도시재생뉴딜, 마을교육공동체 ... → 융복합 영역이 계속 확대중

→ 정책수요자 주민 관점에서 행정조직의 총괄조정과 연계협력 강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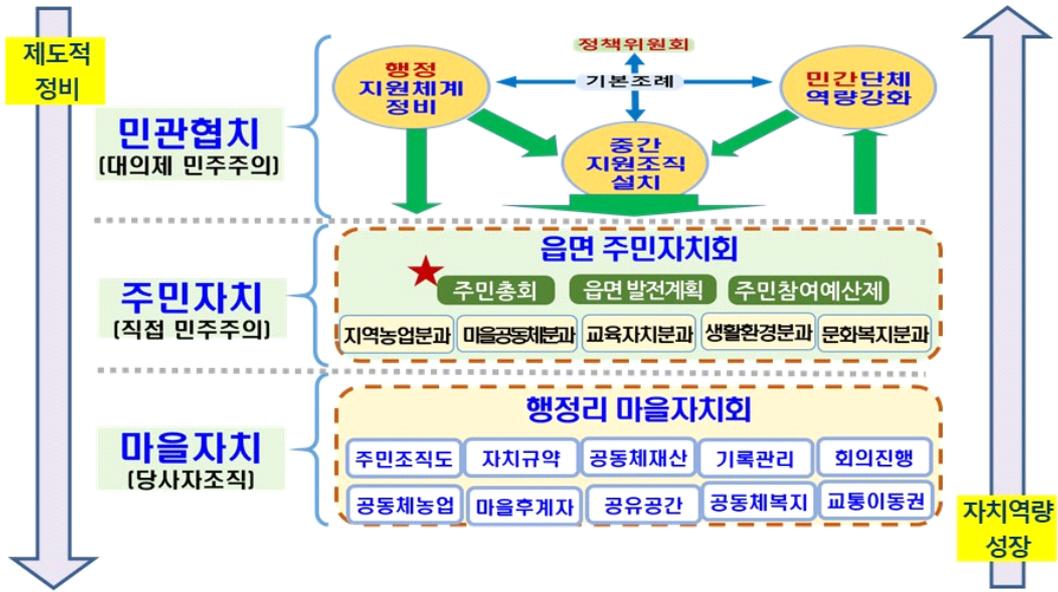
# [근본과제2] 정책사업은 많지만 현장에 사람이 없다 → 외부 컨설팅기관, 농어촌공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 정책사업은 '사람과 조직' 중심의 정책 설계와 초기 단계 공공일자리 제공 8

# [근본과제3] 민관협치도 주민자치도 많이 미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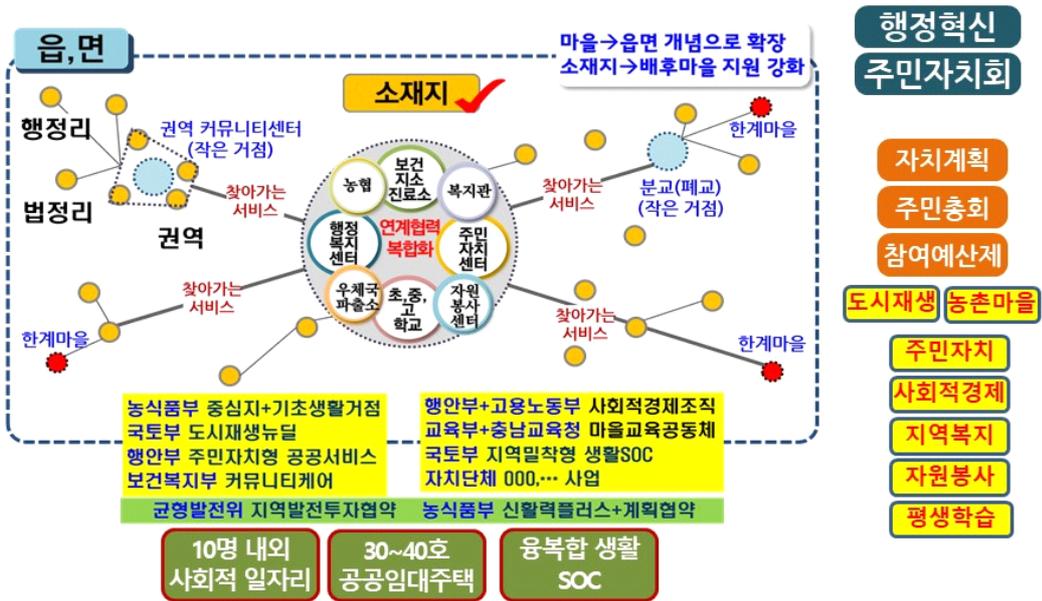
→ 단위 사업만 많고,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다



→ 민관협치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주민자치 시스템으로 확장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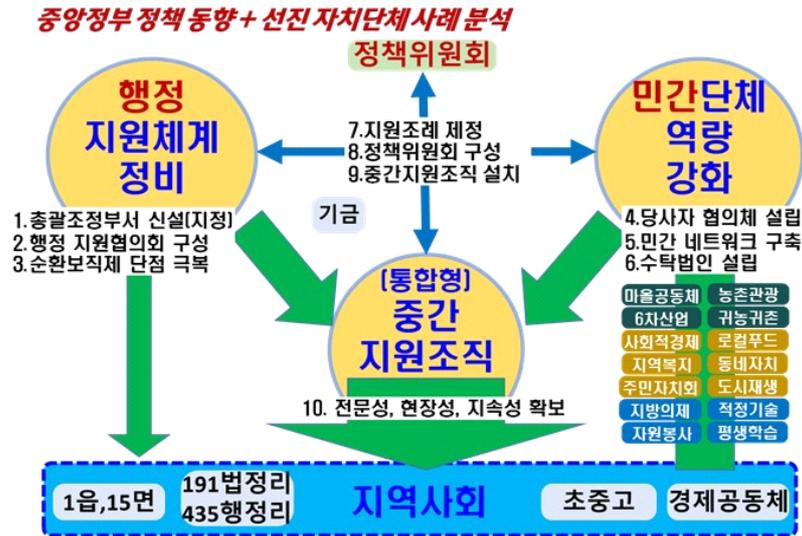
# [근본과제4] 주민생활권=면면에 대한 관점이 없다

→ 개별 사업들이 각각 시행되고, 협력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전환에 강력하게 결합하여 성공사례 우선 도출 10

**[방향]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 10대 핵심과제 해결**  
 → 지역 특성에 맞추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접근



→ 모든 정책에 적용 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 : 농촌지역재생의 핵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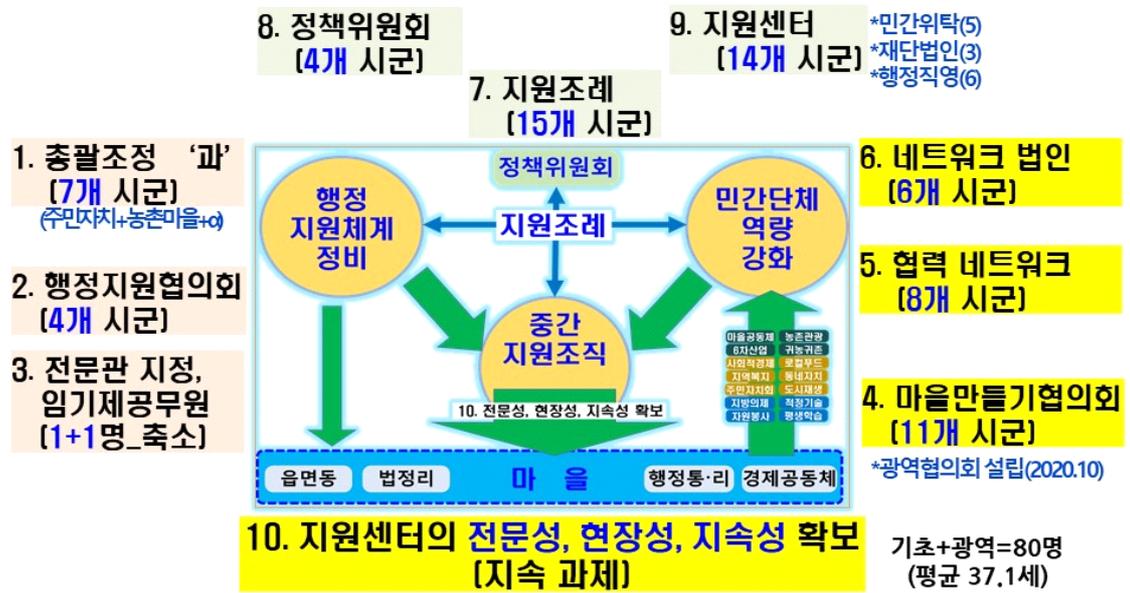
**1. 농특위 의결안건 (2019.12)**  
 “취지와 주요 내용, 핵심 점검 항목”

**[충남 경험] 농촌마을 문제 해결+정부 정책에 선제적 대응**  
 → 광역 단위에서 기초 시군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지원



→ '광역은 광역답게', '행정은 행정답게'에 '사람과 조직' 정비에 우선 집중 13

**[충남 성과]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만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빠르게 혁신중



→ 농촌 마을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시스템 구축(1단계) 14

# [충남 광역] 끊임없는 공동학습 + 다양한 선행경험 축적 →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경험의 평가와 확산, 어떻게 할 것인가?

계간지 **마을독본** 발간  
(2017~21, 총15회)

월간 뉴스레터 발송  
(총42회)

시군순회 **대화마당** 개최  
(2016~21.9, 총52회)



제13호(2021.03)  
당사자 협의체

제14호(2021.05)  
민간 네트워크 법인

제15호(2021.8)  
행정 지원체계

제16호(2021.11)  
중간지원조직

단행본(통권 1~4)  
마을자치 시스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홍성	광역	광역	광역	광역	광역-종합
2	아산	홍성	청양	예산	아산	당진-협의체
3	논산	금산	3농대학(청양)	천안	태안	아산-법인
4	예산	천안	예산	서천	당진	금산-행정
5	보령	보령	홍성	청양	광역	청양-중간
6	천안	서천	아산	금산	보령	광역-우수사례
7	청양	예산	당진	논산	광역(홍성)	
8	서천	아산	서천	광역	광역	
9	태안	공주	태안			
10	광역	광역	광역			

14개 시군 정책시스템 구축  
연구용역(2년 연속)

15개 시군 순회방문 컨설팅  
(연간 2회)

광역 및 시군 센터 직무연수  
(2박3일, 연간 2회)

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월1회 정기회의)

충남 광역 농촌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작은 국제학술행사

정책연구회, 정책워크숍

→ 충남에 축적된 다양한 경험의 전국적 평가와 확산 : 농특위 의결과제

15

# [농특위]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농어촌분과제출, 3차 본위원회 의결, 2019.12.3, 의안번호 2019-5호

[2대 기본방향]

1. 단위사업 중심에서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계**'로 개편
2.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주체 중심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로 전환

[4대 주요 의제(Agenda)와 7대 세부과제]

4대 주요 의제		7대 세부과제
행정	<b>통합적 추진체계 구축</b>	1. 농어촌정책의 <b>총괄·조정 체계</b> 형성 2. 전문가 채용, 담당 공무원의 농어촌 <b>정책 전문성</b> 확보
행정- 민간	<b>민관협치 강화</b>	3. <b>통합형 중간지원조직</b> 설치·운영 4. <b>광역-기초</b>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연계협력 강화
민간	<b>민간의조직화촉진과 자치역량 강화</b>	5. <b>이해당사자 협의체</b> 조직·육성 6. <b>민간 협력 네트워크</b> 를 위한 비영리법인 육성
제도	<b>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b>	7. <b>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b>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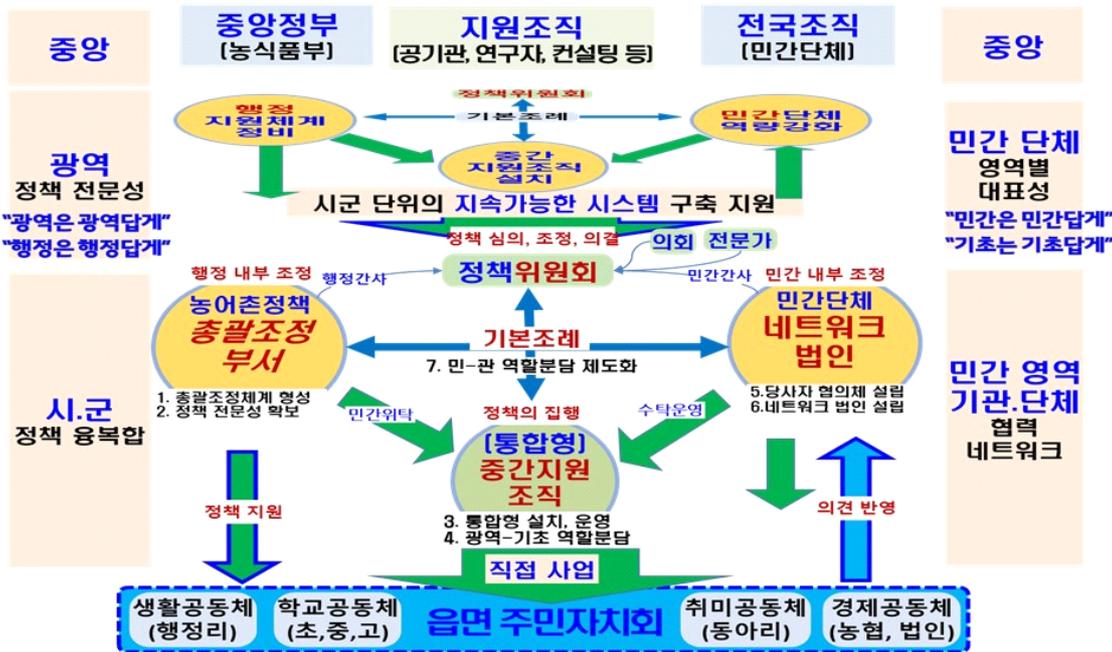
16

# [12대 점검항목] "7대 세부과제"의 주요 정책별 세부 점검 → 1차)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농식품부)\_청양세미나

4대 주요 의제	7대 세부과제	12대 점검항목
행정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 농어촌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형성 2. 민간전문가채용, 공무원의 농어촌정책 전문성 확보	1-1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정책영역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1-1 관련부서간 '행정협의회' 운영정례화, 업무소통·정책 협력 추진 2-1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공모직위제 확대 등 순환보직제 단점 보완 2-2 개방형, 임기제 등 민간전문가채용확대
행정 - 민간	3. 농어촌정책의 통합형 중간 지원조직 설치·운영 4.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 연계협력 강화	3-1(중앙) '삶의질법' 등 '을'개정하여 중간지원조직의 법적지위 확보 3-2(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유도 4-1(광역)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기초지자체 지원가능 강화 4-2(지자체) 통합의 범위와 형태, 시기 등은 지자체 자율성 부여
민간 민간의조직화 촉진과 지차역량강화	5. 민간의 이해당사자 협의체 조직육성 6.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비영리법인 육성	5-1 민간 자발성을 토대로 한 '당사자협의체' 설립지원 5-2 현장 학습모임 등 단체 필요에 따른 조직화 활동적극 지원 6-1 민간주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장려 6-2 사무위탁이나 보조사업, 계약사업 등으로 민간 법인의 성장 촉진
제도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7.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 제도화	7-1 민관협력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책의 기본조례' 제정 7-2 기본계획, 정책위원회/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민관협력제도화

→ 모든 정책에 적용 가능한 민관협력 시스템 : 농촌지역재생의 핵심 17

## [목표] 자치분권 시대, 지자체 정책의 민관협력형 추진체계 → 중장기적 방향을 가지고 '정책혁신'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



→ 현장밀착형, 문제해결형 지자체 농어촌정책 추진(지원)체계 구축 18

## 2. 신활력플러스사업 개요와 추진상황

### “왜 도입되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19

**[개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도입 취지와 목적**  
**→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이 가능한 '사람과 조직' 육성**

### 1. 도입배경

- (1) 국가균형발전 비전의 실현 :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 비전/목표로 설정('18.2)
- (2)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반성 :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는데 한계”  
 -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용역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역량 있는 민간조직 육성 미흡”,  
 -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사업보다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중점”
- 참여정부 '신활력사업' 후속으로 2018년 신규사업에 반영되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포함

구분	신활력사업('05~'10)	농촌 신활력 플러스('18~'21)
목적	◦낙후지역의 구조적 어려움 극복, 도농상생의 새로운 기회 활용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대상지역	◦70개 시군(낙후지역 중심)	◦123개 농촌 시군
사업내용	◦지역특산물 및 향토자원 산업화, 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전략사업 자율 추진 ◦자생적 지역조직 성장기반 구축
특이사항	◦ASP 모델 - 혁신주체(Actor) : 지역혁신협의회 - 네트워크(System) : 지역-민간 거버넌스 - 프로젝트(Project) : 농업의 융복합 등 낙후지역 발전사업 구상	◦ASPP 모델 - 주체(Actor) : 전담조직, 현장활동가, 주민협의체(액션그룹), 사회적경제조직 - 네트워크(System) : 주체간 파트너십 - 프로젝트(Project) : 특화발전 모델 - 계획협약(Planning-Contract)도입

20

## 2. 추진방향과 목적

### ○ 추진방향

- (1) **(핵심주체 육성)**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립적 추진주체 육성
- (2) **(창의적 사업 추진)** 특색 있는 전략사업 및 연계프로그램 발굴
- (3) **(통합적, 협업적 추진)**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 및 지역간 협력사업을 통해 성과확산 유도

### ○ 비전과 목표

- (1) 비전 :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 (2) 목표 : **지속가능한 혁신거점 100개소 조성**
- (3) 주요 추진과제
  - **추진주체 육성**: 전담조직 구성 + 현장 활동가(Actor), 활동조직 양성 + 지역내 민간조직 참여 확대
  - **창의적 사업 추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전략모델 개발(특화산업고도화·지역순환경제공동체활성화등)
  - **통합적 농촌발전**: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 + 계획협약 도입

### ○ 사업목적

- (1) **기존에**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특히, 민간 추진주체 및 활동가 등 지역의 인적자원 양성에 중점
- (2)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배양, 전략사업 기획 및 실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형 사회 혁신 창출**

21

## 3. 사업개요

### ○ 주관부서 **순환보직제**

- (1)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2)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 ○ 시설직 중심 부서

- (3) **(광역)** 농정국/농림축산국  
농촌개발과/농촌활력과

- (3) **(기초)** 사업주제별로  
지자체 자체 판단/조정

### ○ 사업규모와 대상지역 **개소당 70억원 \* 100개소 = 총 7,000억원**

- (1) **사업규모**: 개소당 4년간 **총 70억원**(국비 70%), **총 100개** 시군 선정(연차별)
  - 1년차 20%, 2~3년차 각 30%, 4년차 20%
- (2) **대상지역**: 123개 농어촌 시·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 (3) 연차별 신규 선정: ('18) 10개소 → ('19) 20 → ('20) 30 → ('21) 20 → ('22) 20개소
  - 2022년 대상지구에는 농촌협약 선정 시군 포함

**100개소 선정 완료**

### ○ 주요 사업내용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 (1) **사업내용**: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조직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S/W 프로그램 사업에 활용**
- (2) **추진방식**: 산업·문화·복지 등을 연계한 통합계획 수립
  - 3대 필수: ① 민간 주체 육성, ② 민간 중심 추진단 운영, ③ 고유자원 활용,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
- (3) **인센티브**(2018년 사업지침 기준): 중간평가(2020년) 실시 후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함

# [추진체계] 중앙-광역-기초 단위 사업의 추진(전달)체계 → 기초 지자체 단위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만 강조

## 1. 중앙계획지원단

중심지활성화, 농촌협약도 동일한 방식

### ○ 역할

- (1) 기본계획 수립의 자문과 심의
- (2) 시행과정의 자문

###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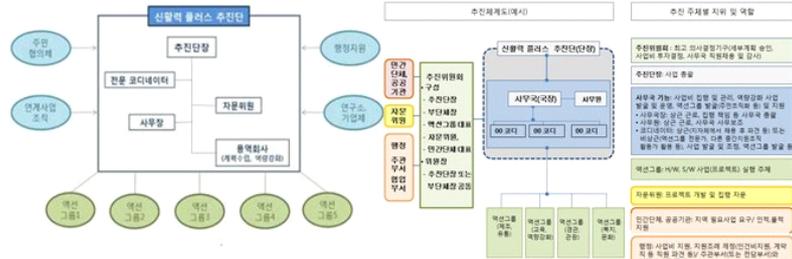
- (1) 전체회의: 2018년 4회, 2019년 3회  
- 2020년 이후는 화상회의로 대체
- (2) 위원수 : 단계적으로 확대  
- ('18) 20명 → 25명 → ('20.8) 35명
- (3) 권역별 운영 : 6개 권역  
- 권역별 5~6명 → 12~22개 시군 담당

위원들에게 과중한 부담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절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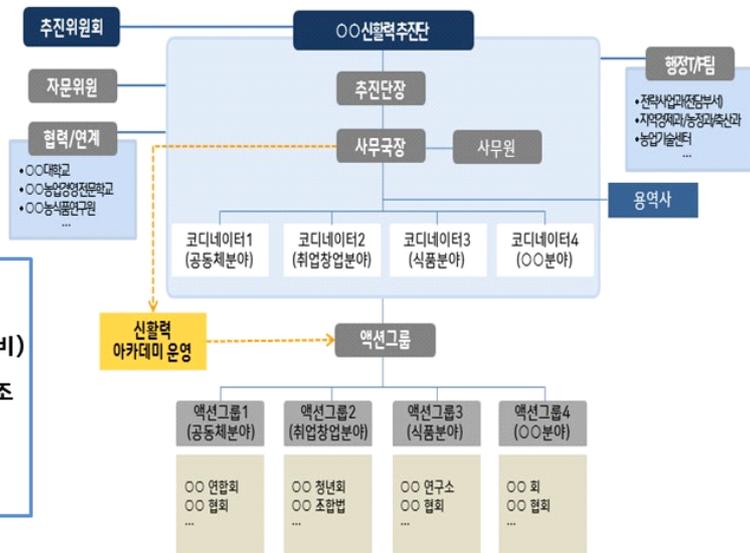
권역	선정 시군수	위원 성명	소속	전문 분야	직책	비고
단양		송이영	농촌경제연구원		단장	
경기 강원 제주 (5명)	16	이기원, 송우영, 박우영, 최인성, 장영준, 오승준	한림대학교, 신일대학교, 순천대학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농촌계획, 경제산업, 문화관광, 경제산업, 경제산업, 경제산업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충청 (6명)	22	김정연, 김태연, 구자선, 박인성, 송상우, 우성명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아산대학교,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	농촌계획, 경제산업, 경영산업, 문화관광, 농촌계획, 경제산업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전북 (5명)	12	이민수, 황영모, 장민기, 안영표	한국농수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농촌계획, 경제산업, 경영산업, 지역계획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전남 (6명)	17	김영철, 김광수, 임광수, 서정원, 김성철, 임영호	전남대학교, 농촌경제연구원, 영동초안, 이안, 광주전남연구원, 고려대학교, 개혁신당정책연구원	경제산업, 농촌계획, 경영산업, 경영산업, 경제산업, 농촌계획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경북 (6명)	19	홍종규, 이광우, 정희준, 김영숙, 김인숙, 김이숙	동원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경제정책지원센터, 대구기류, 대구경제 정책연구원	경영산업, 농촌계획, 경제산업, 경영산업, 경영산업, 경영산업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경남 (5명)	14	이유진, 송영진, 임정희, 이종호, 윤안숙	부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농촌계획, 경제산업, 경영산업, 경영산업, 경영산업	팀장, 부팀장	신규, 신규, 신규,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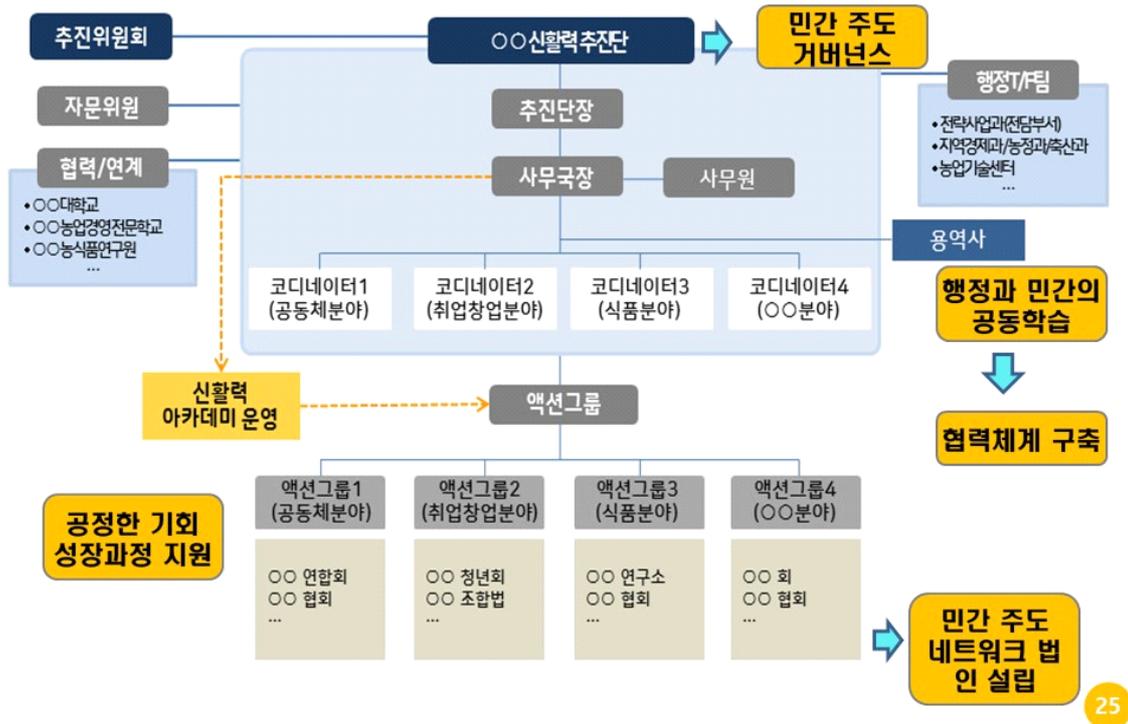
## 2. 기초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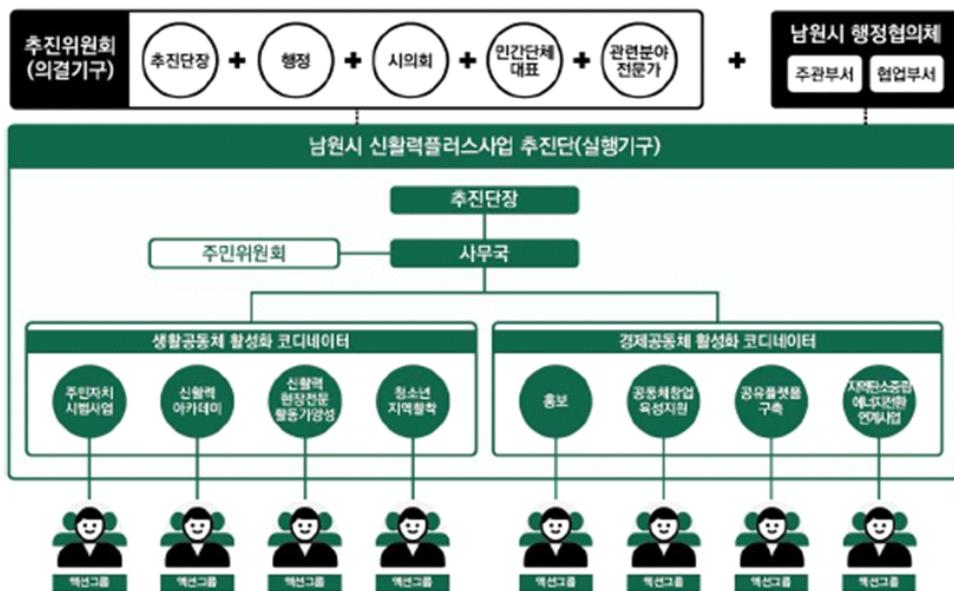
### ○ 변화과정

- (1) '민관협치' 관점 강화
- (2) 인건비 지출 강화(별도 지방비)
- (3) 행정 전담부서 및 협의체 강조
- (4) 전체 공공관대행사업 금지
- (5) 3주체 '계획협약'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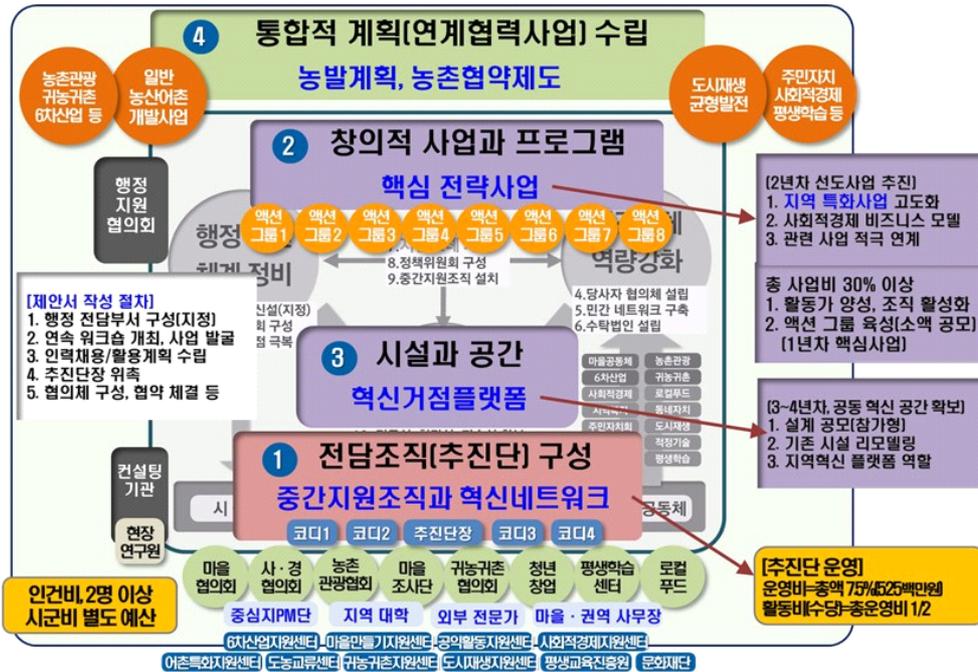
[참고] **남원시 신활력플러스 추진체계**



민관협력의 경험 축적 +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시스템 구축 + 행정리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자치분권 시대의 지자체 정책 시스템 구축 + 농촌협약 시대의 체계적 준비"

[참고]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연계 모델



### 3. 지자체 참가 주체

- 추진위원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1) **(구성)** 민간 중심으로 10명 내외 구성  
(2) **(역할)** 초기에 구성하여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주도  
- 추진단장 우선 선임, 추진단 사무국 구성안 및 지원조건 검토 등
- 행정 : 전담부서와 협의체

(1) 예비계획서 단계부터 **의무사항**  
(2) 사업내용에 따라 행정협의체에 참여
- 추진단 : 총괄 집행조직 = 중간지원조직

(1) **(구성)** 추진단장(비상근/반상근), 사무국장, 사무원 + 코디네이터 4~5명  
- "향후 농촌정책 추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2) **(역할)** 전체사업의 기획, 세부사업 발굴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
- 역할분담 : 지자체 실정 반영하여 다양

(1) **(추진단장)** 비상근의 전문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추진단을 대표하고 사업 총괄  
(2) **(사무국장)** 관내 거주 활동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단장이 임명, 실무 책임  
(3) **(코디네이터)** 관내 거주 활동가, 비상근/반상근/상근, 분야별 사무국 보완 vs 자문위원
- 인건비 대책 : 제도적, 사업지침 한계 반영

(1) **(사무국 '2명 이상')** 지자체 별도 지방비 확보(사업 선정 전제조건으로 전환). 사무국장 월 250만원 이상  
(2) **(추진단장/코디네이터)** 운영비 내에서 '200만원 이내' 수당으로 지급  
- **(운영비)**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운영비' 편성(525백만원). 운영비 50% 이내에서 활동비 지급

## 4. 사업의 주요 특징

**(1) 사업 선정기준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지역내 민간조직의 S/W사업 예산으로 활용**  
 - 활동가 양성(Actor) → 조직 활성화 → 역량배양 → 사업의 지속성 확보라는 원칙 고려  
 - 하드웨어의 경우 기존 시설물 연계·재활용 등 우선 고려  
 -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우선 선정  
 - 단위사업(H/W, S/W)의 운영주체는 반드시 명기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절차, 시기, 방법, 기준 등을 명시

**(2) 액션그룹 발굴과 육성 방법론 : 2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운영**  
 - (1단계)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를 통해 현장 활동가 발굴, 활동조직(액션그룹) 구성 및 연계 네트워킹 유도  
 \* 신활력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조직 구성과 계획수립, 시행 등 공동체 활동 기본원칙 교육  
 - (2단계) 활동조직\* 제안을 반영하여 **S/W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조직적 역량 배양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유도. 청년층 아이디어를 반영한 조직에 대해 인센티브 등 우대

**(3) 추진주체별 기능 및 역할 : 민간 주도를 원칙으로 하고,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  
 - 추진위원회 : 최고의사결정기구 - 세부계획 승인, 사업비 투자결정, 사무국 직원 채용, 감사 등  
 - 추진단장: 사업총괄  
 - 사무국: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 사무국장: 상근 근로, 사업비 집행 등 사무국 총괄  
 \* 사무원: 상근 근로, 사무국장 사무보조  
 \* **코디네이터**: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 사업 발굴 및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  
 - **액션그룹**: H/W, S/W사업(프로젝트) 실행 주체  
 - **전담부서**: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지원조례 제개정, 사무국 지원(인건비 확보 및 직원 파견 등)

## [추진상황] 공모사업 선정 현황과 18~19년 시군 추진체계 → 큰 원칙은 지켜지고 있으나 시군별로 큰 편차

### 1. 시도별 선정현황

#### ○ 현황

- (1) 목표한 100개 시군 선정 완료
- (2) 시도별로 시군 비율은 60~100% 다양

#### ○ 농촌협약과의 관계

- (1) **신청대상 : 113개 일산농산어촌 시군**  
 - 해수부 소관 10개 시군 제외
- (2) **선정현황 : 총 26개(전년도 예비 선정)**  
 - (21) 9개 → (21.6) 17개(예비 3)
- (3) **유형 - 신활력플러스사업과의 관계**  
 - 신활력플러스 **별도** 선정 : 21곳  
 - 신활력플러스 **포함** 선정 : 5곳(2022년)

2022년 농촌협약 선정 중 '포함' 5개 시군의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문제(안성, 제천, 홍성, 무주, 봉화)

구분	경기 (6)	강원 (8)	충북 (11)	충남 (11)	전북 (12)	전남 (17)	경북 (19)	경남 (14)	제주 (2)	세종 (0)
2018년 (10개)	가평군 (1)	원주시 (1) 홍천군 (2)	영동군 (1)	아산시 (1) 예산군 (2)	원주군 (1)	장흥군 (1)	의성군 (1)	하동군 (1)	-	-
2019년 (20개)	여주시 (1)	강릉시 (1) 홍천군 (2)	충원군 (2)	청양군 (1)	김제시 (1) 익산시 (1) 완주군 (2) 장수군 (4)	강진군 (1) 무안군 (1) 영광군 (2) 장성군 (4)	문경시 (1) 상주시 (1) 예천군 (3)	산청군 (1) 함양군 (2)	서귀포시 (1)	-
2020년 (30개)	양평군 (2) 화성시 (2)	횡성군 (1)	괴산군 (2) 진천군 (2)	공주시 (2) 천안시 (2)	고창군 (1) 남원시 (1) 부안군 (1) 순창군 (4)	광양시 (1) 구례군 (1) 해남군 (1) 고흥군 (1) 곡성군 (2)	군위군 (1) 영주군 (1) 영천시 (1) 영동군 (1) 영월군 (1) 정선군 (1) 철원군 (1) 화천군 (1)	거제시 (1) 거창군 (1) 남해군 (1) 밀양시 (1) 양산시 (1) 장성군 (1) 합천군 (1)	-	-
2021년 (20개)	이천시 (1)	영월군 (2) 양양군 (2)	장주시 (2) 단양군 (2)	공주시 (2) 보령시 (2)	진안군 (1)	완도군 (1) 화순군 (3)	김천시 (1) 영덕군 (1) 영천시 (1) 영주시 (1) 고령군 (3)	장흥시 (1) 김해시 (1) 통영시 (3)	제주시 (1)	-
2022년 (20개)	안성시 (1)	정선군 (1)	보은군 (1) 옥천군 (1) 제천시 (1)	당진시 (1) 서천군 (1) 태안군 (1) 홍성군 (1)	정읍시 (1) 무주군 (2)	영암군 (1) 진도군 (1) 보성군 (3)	구미시 (1) 포항시 (1) 영양군 (1) 북청군 (1)	사천시 (1)	-	-
미선정 (23개)	광주시 (1) 남양주시 (1) 울진시 (1) 평택시 (1)	삼척시 (1)	-	계룡시 (1) 논산시 (1) 부여군 (1) 서산시 (1)	군산시 (1)	담양군 (1) 순천시 (1) 신안군 (1) 여주시 (1)	경산시 (1) 경주시 (1) 정선군 (1) 철주군 (1)	고성군 (1) 의령군 (1) 진주시 (1) 합안군 (1)	-	세종시 (1)
전체 시군수	10	9	11	15	13	21	23	18	2	1
선정 비율(%)	60.0	88.9	100.0	73.3	92.3	81.0	82.6	77.8	100.0	0.0

## 2. 선정 시군 추진상황1: 조례와 추진위원회

### ○ 자료 통계자료, 기초 정보 부족

- (1) 농어촌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는 시군 「관리카드」(2021.03 기준)  
 (2) 공주대학교, 2020.12., "신활력플러스사업의 18-19년 사업 성과분석 및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대면조사(인터뷰) 및 서면조사 병행(2020.10 기준)

### ○ 조례 제정 현황 → 제정하기 쉬운 사업조례 중심. 기본조례 관점 부족

		기존 조례 해석	기존 조례 일부 변경	신활력 중심 별도 제정	신활력 포함 포괄조례 제정
사업 년도	18년(n=10)	3(33.3)	3(33.3)	2(22.2)	1(11.1)
	19년(n=20)	5(26.3)	1( 5.3)	8(42.1)	5(26.3)
Total		8(28.6)	4(14.3)	<b>10(35.7)</b>	6(21.4)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20쪽을 재정리

31

### ○ 추진위원회 구성의 유형과 위원수 → 행정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향 여전

		위원회 구성 유형			평균 위원수 (명)
		공공중심형	민간중심형	전문가중심형	
사업 년도	18년(n=10)	6(60.0)	3(30.0)	1(10.0)	10.4
	19년(n=20)	11(55.0)	5(25.0)	4(20.0)	12.5
Total		<b>17(56.7)</b>	8(26.7)	5(16.7)	<b>11.8</b>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4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 추진위원장 유형 → 지침에 따라 '민관공동' 유형이 많지만, '행정단독'도 30%

		위원장 방식			부군수 공동위원장 참여	추진단장 역할		
		민간 단독	민관 공동	행정 단독		추진 위원장	추진 위원	미참여
사업 년도	18년(n=10)	1(10.0)	3(30.0)	6(60.0)	8(80.0)	5(50.0)	4(40.0)	1(10.0)
	19년(n=20)		17(85.0)	3(15.0)	18(90.0)	15(78.9)	4(21.1)	
Total		1( 3.3)	<b>20(66.7)</b>	<b>9(30.0)</b>	26(86.7)	20(69.0)	8(27.6)	1( 3.4)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5쪽과 농어촌공사(2021.03) 시군 「관리카드」 자료

### ○ 추진위원회 개최실적 → 분기별 1회 빈도로 높지만, '5회 미만' 도 전체의 절반

		평균(회)	추진위원회 회의 실적			
			~5회 미만	~10회 미만	~20회 미만	20회 이상
사업 년도	18년(n=10)	<b>9.3</b>	5(50.0)	2(20.0)	1(10.0)	2(20.0)
	19년(n=20)	<b>5.6</b>	10(50.0)	8(40.0)	2(10.0)	0(0.0)
Total		5.2	<b>15(50.0)</b>	10(33.3)	3(10.0)	2(6.7)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6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32

### 3. 선정 시군 추진상황2 :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 추진단의 법적 형태 → 가장 쉬운 '임의단체 설립, 보조사업 운영'이 63%

		행정직영	임의단체	위탁1: 중간 지원조직	위탁2: 대학	재단법인
사업 특성	향토자원 고도화(n=16)		11(68.8)	2(12.5)	1(6.3)	2(12.5)
	지역푸드 시스템 구축(n=7)	1(14.3)	5(71.4)	1(14.3)		
	창업·사회적경제플랫폼구축(n=7)	1(14.3)	3(42.9)	2(28.6)		1(14.3)
Total		2(6.7)	19(63.3)	5(16.7)	1(3.3)	3(10.0)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9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 추진단장 선정 및 근무방식 → 대부분 내부추천 방식(80%), 비상근 96.7%
- 추진단장 직업 유형 → 전현직 교수나 고위공무원 및 공기관 출신이 대부분(66.7%)
- 사무국장 선정방법, 임금 → 1곳 제외 모두 공개채용, 월 평균 300만원 미만 20%

	연봉 평균 (만원)	사무국장 임금		
		월 300만원 미만	~월330만원 미만	월 330만원 이상
Total	3,591.8	6(20.0)	22(73.3)	2(6.7)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8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사업지침 '월 300만원 이상'

- 사무국 직원수 → 2명이 60%, 3명 이상이 40% → 100개 시군이라면 250명 추정 33

### 4. 선정 시군 추진상황3 : 코디네이터의 구성과 운영

- 코디네이터 선정방법과 근무형태 → 내부 추천 82%, 비상근의 수당방식
- 코디네이터 인원수 → 시군별로 평균 5.3명. 시군별로 1~11명으로 매우 다양

100개 시군이라면 총 530명 규모로 확대

### 5. 선정 시군 추진상황4 : 행정 전담부서와 협의체

- 전담부서 → 사업주제를 반영하여 결정, 총괄조정 역할 미흡
- 협의체 참여 실과소 수 → 평균 7개 부서. 시군별로 4~11개로 매우 다양
- 협의체 운영실적 → 평균 23.5회 개최(한달에 한번) → 개별 협의까지 포함 추정(?)

		평균 횟수	협의회 등 회의 실적			
			~5회 미만	~10회 미만	~20회 미만	20회 이상
사업 특성	(가공·유통 중심) 향토자원고도화	33.6	1(11.1)	1(11.1)	2(22.2)	5(55.6)
	(관광·서비스 중심)향토자원고도화	17.9	1(14.3)	0(0)	4(57.1)	2(28.6)
	지역푸드시스템구축	30.1	1(14.3)	2(28.6)	0(0)	4(57.1)
	창업·사회적경제플랫폼구축	9.7	4(57.1)	0(0)	1(14.3)	2(28.6)
Total		23.5	7(23.3)	3(10.0)	7(23.3)	13(43.3)

자료 : 공주대학교(2012.12), 요약본 18쪽을 보완하여 재정리

34

### 3.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12대 점검항목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35

#### [의제1] 행정의 총괄조정체계와 정책전문성 확보 → 부분적으로 지켜지고 있으나 내실은 미흡

##### 1. 농어촌정책의 총괄조정체계 구축

- 사업지침 '⑧ 협업체계 구축' : '전담부서(팀) 및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여부”  
+ “국장급 이상의 결재문서 유무 확인”  
→ 사업지침으로는 강력하게 반영되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계속 점검

##### 1-1. 행정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정책영역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전담부서가 사업담당 부서 : 사업부서 >> 기획부서  
→ 신활력플러스사업 성격으로 볼 때 총괄조정 기능 미흡

##### 1-2. 관련 부서 간 '행정협의회' 운영 정례화, 업무 소통과 정책 협력 추진

- 참여 실과소는 4~11개로 다양. 매월 1회 협의회 회의 개최  
→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며 매우 활발하게 업무협조 진행중  
→ 하지만 개별 업무협조 중심,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인 협의체 운영은 미흡

36

**[참고] 문재인정부, 조직편성권의 지방 이양과 자율성 확대**

행정안전부(2018.3),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1. 추진배경 :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기준인건비 등 조직 관리·운영상의 **자율성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 1) 자치단체 **정원관리 자율화** : 기준인건비 한도를 초과 패널티(감액) 삭제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의회 제출 의무화
  - 2) 자치단체 **‘과’ 설치 자율화**
    -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9~18개) 삭제
    - 한시기구/소속기관 설치시 협의대상은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조정
  - 3) 인구 10~15만 도농통합시는 실·국 설치기준을 종전 1~3개에서 2~4개로 확대
3. 자치단체 **기능 및 인력의 재배치, 효율화**
  - 1) 추진개요 :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능 쇠퇴 분야 등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분야로 재배치해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
  - 2) 재배치목표 : 향후 5년간 신규인력 충원규모 반영하여 총정원의 1~3% 재배치
  - 3) 재배치 기준 :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 읍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 “향후 **직렬 신설도 지자체 재량권 부여 검토중**”

37

**[참고]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 업무협조체계 강화**  
→ 직접유사업무는 ‘총괄조정 과로, 나머지는 행정협의회 운영

**구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신활력플러스 + 농촌협약 범위**

(농촌 삶의질계획) 농촌 마을공동체 + 중심지활성화 + 농촌관광, 6차산업 + 농촌복지, 사회적농업, 푸드플랜 + 귀농귀촌 +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지속가능발전 등	<b>[공통점]</b> 1)주민과의 접촉이 많고 2)업무 자체가 융복합 성격이 강하며 3)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요구 받는다
---	--

**운영 :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 개최 + 인센티브 + 문화적 장치**

참가 단위 : ‘팀’ 단위가 보다 실효성  
 설치근거 : 반드시 (마을만들기) 조례에 명시 → 총괄조정 전담부서의 소집 권한  
 주요 역할 : ① 각종 행정 사업 정보 공유(특히 교육 사업), ② 공모사업 절차와 일정 등 방법론 통일, ③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결과 공유, ④ 다음 연도의 각종 예산 및 사업 계획 협의, ⑤ 중간지원조직 지원방안 공유, ⑥ 정책위원회 상정 안건의 협의와 정리, ⑦ 민간 네트워크 법인과와의 협력방안 협의 등  
 정기회의 :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 설치 초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지속성 확보 : 협업 담당자 지정,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 + 문화적 장치 + 연2회 정기인사 이후에는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 필요

38

## [참고]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행정의 정책 전문성, 협업 촉진

- 1) **관련 동향**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따라 빠른 변화
  - 자치조직권 확대, '과' 신설 자율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 자치분권 종합계획 : 장기근무 보직과 순환근무 보직의 구분
  -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② "기관간, 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 2020.03, "지역사회 중심 정책 연계 5개 부처 업무협약" → 2021.01 공모사업
- 2) **행정안전부(2020.1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협업 활성화 계획, 협업이음터 ([www.gwanghwmoon1st.go.kr](http://www.gwanghwmoon1st.go.kr))
  - 협업책임관, 협업지원관, 협업 매칭 매니저 → 단계적으로 지자체 적용
  - 협업 실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반영
  -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지자체 협업/협력 지표 반영
- 3) **지자체 대응 방향** : 자치분권 시대에 행정(공무원)의 존재 의의
  -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선제적 대응
  - 정책 수요자인 주민 관점에서 행정 스스로의 혁신
  -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 구축
- 4) **지자체 조례, 지침** : 정책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 협업 업무 인정, 성과 평가 가점, 협업 수당, 해외연수 등

39

4년간 70억원, 100개 시군 총 7천억원

## 2. 민간 전문가 채용,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 확보

- 행정 공무원 스스로 인정하는 정책 전문성과 순환보직제 문제
- 사업지침에서는 '공무원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명시 없음
  - '농촌협약'에서도 반복

### 2-1. 필수보직기간 준수, 정문/공모직위제 확대 등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 보완장치 ① 공무원 필수보직기간(2년) 준수, ② 공무원 공모직위제,
- ③ 공무원 전문직위제(3년) : 광역 3~7급, 기초 5~8급 대상
  -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같이 중강지 융복합 정책사업에서는 필수 도입 검토

### 2-2. 개방형, 임기제 등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 보완장치 ④ 개방형 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제도 확대
  - 개방형 직위제 : 시군구 6급 이상 대상,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
  - 임기제 공무원 : 4가지 유형. '시간선택제 임기제'=정원외, 5년근무
    - 행정과 민간 사이의 활발한 인사교류 및 순환 확대 필요

40

**[참고]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을 위한 제도 강화**  
 →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 강화의 전제조건(불편한 진실)

- 1) **필요성** : 다양하고 복잡하며 빨리 변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 유형, 방식, 절차 등  
 →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 요구  
 → 특수 업무의 연속성 유지, 전문성 요청 반영
- 2) **방 법** : 전략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 대응

- ① **과장/팀장 공모직위제 도입**, ② **필수보직기간 2년 준수**
- ③ **전문직위제(전문관) 확대** : 3년 의무 근무, 이번 인사부터 적극 반영
- ④ **임기제 공무원 채용** : 지역사회개발 융복합 분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b>공무원 전문직위 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평정규칙 제16조 제3항 등</li> <li>• 대상 직위 및 직급 : ※ '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 :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지위</li> <li>- 대상 : 경력직 공무원의 직위(복수직위 포함)</li> <li>- 직급 : 시·도 3~7급, <b>시·군·구 5~8급(상당 직급 포함)</b></li> </ul> </li> <li>• 인센티브 : 경력 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수당 지급, 능력개발 지원 등</li> </ul>	<b>3년간 필수보직 (전보 제한)</b>
----------------------------	--	-----------------------------

임기제 공무원 제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정원	정원 대체	정원외	정원 대체	정원외
기준인건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근무시간	상근	주 15~35시간	상근	주 15~35시간
민간 전문가 채용	근무기간	총 5년(신규임용자 5년, 연장 가능)	1년 단위(단체장 임기만료일 이전 연장)	총 1년(필요시 1년 6개월 연장)

**[참고] 행안부 '전문직위군' 제도와 업무협조체계 강화**

- 1) 중앙부처에만 적용하던 것을 2016년부터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
  - 2)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126호, 시행 2020.9.22)
  - 3) 주요 내용
    - 한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를 의무로 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더욱 확장
    - 유사한 정책 영역을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것
  - 4) 활용가능성 : 행정협의회 안에서 유사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 사이의 이동을 적극 장려하여 업무 연계성과 지속성을 더욱 강화
- 행정협의회 **의 효율적 운영**과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제도

한국행정연구원, 2021.01, 『2020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총 응답자 4,339명)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1순위 응답 기준)**

1위 :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기타 :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과 '과다한 업무량', '전공 및 적성과 무관한 인력배치' 등

**[참고]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 (2019. 3. 발표, 130쪽)**

- 1) 방향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서비스 품질 제고”
  - 지방 인사시스템의 혁신을 중요 과제에 포함
- 2) 직무 특성에 따른 '직위 유형 구분 및 보직 관리 차별화' 제시
- 3) 행정의 직무 특성에 따른 보직 구분
  -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
- 4) **필수보직기간 확대**
- 5) **전문직위에 대한 가산점도 의무적으로 부과**
- 6)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9.6.18.)
  - '직렬'은 법령으로 여전히 정해져 있지만 을 통해 **지자체 조례로 '직류' 신설이 가능**하게 개방(제3조1)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직류 신설 가능. 예를 들어, 공동체나 농촌재생,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의 직류를 조례로 신설

43

**[의제2]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연계협력 강화**  
**→ '추진단'의 제도적 성격을 둘러싼 이해 부족이 지속**

**3. 농어촌정책 영역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 '추진단'의 성격을 둘러싼 제도적 이해가 부족하여 **지금도 혼선이 지속**
- 기초 지자체에만 사업지침으로 강조하고, 광역 및 중앙의 지원기능 **명시 없음**  
→ '농촌협약'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

**3-1. (중앙) '삶의질법 등' 을 개정하여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지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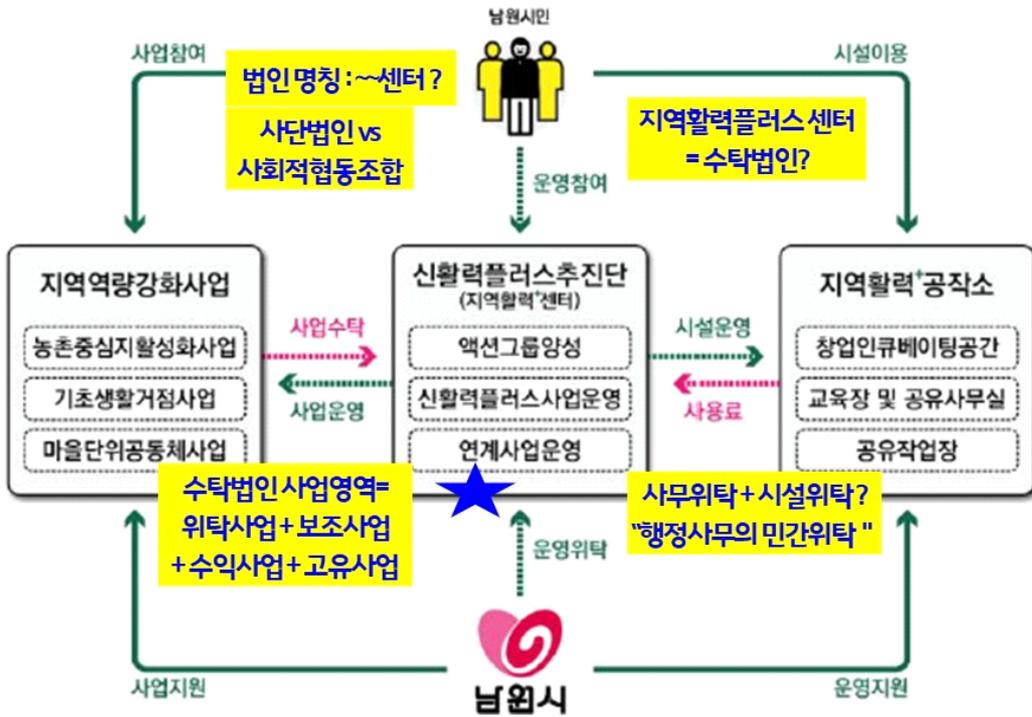
-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 농식품부는 사업지침으로만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계속 강조  
→ **중앙정부의 고유한 역할(법, 제도적 개선)에는 여전히 미흡**

**3-2. (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유도**

- 사업지침으로 기초 지자체에 '**설치 자체'는 의무화**
- 사업지침 '① 추진단 구성'과 '② 추진단 인건비 확보' 강조 + "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문서 유무 확인"까지 명시. 또 '③ 추진단 지원 근거'로 조례 제정 강조  
→ **추진단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고, 통합형으로의 발전경로는 제시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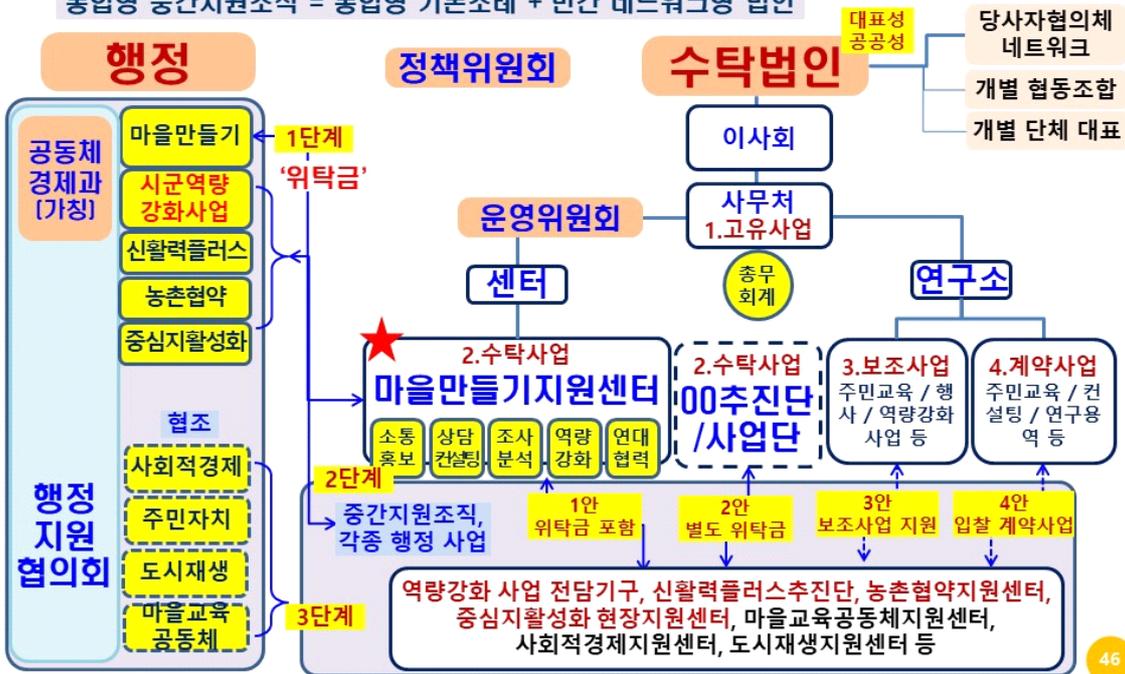
44

[참고] 남원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미래와 민간위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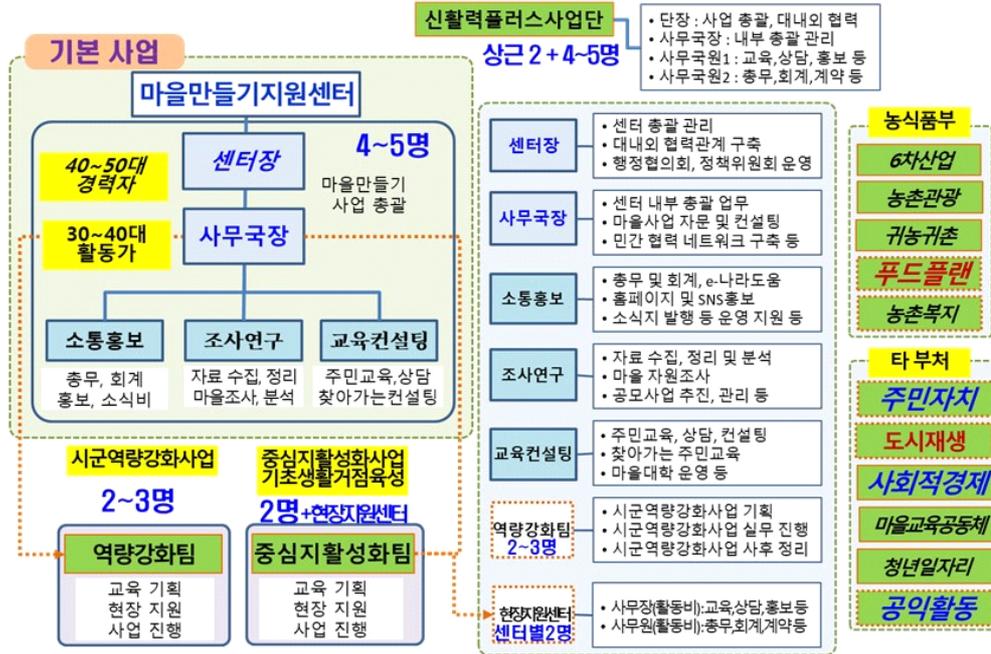
[참고] 통합형,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수탁법인 조직도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 = 조례(위탁 근거) + 민간 법인 존재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 통합형 기본조례 + 민간 네트워크형 법인



## [참고] 지자체 농촌정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인력 규모 추정

→ 일회성의 보조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의 위탁사무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47

1) 일시 : 2021.11.2-5, 11.30-12.3

2) 장소 : 보령시 비체팰리스

3) 대상 : 1개 시군당 1박2일 14시간  
15개 시군 대상, 4개 유형 구분

## [참고] 충남도 농촌재생혁신사업 심화과정 프로그램(안)

시기	시간(m)	교육과목(주제)	주요 교육 내용	비고
1일차 오전	10~12시 (120분)	농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 충남 농촌마을정책의 경험</li> <li>◦(강의) <b>농촌협약의 추진체계</b> 지침</li> </ul>	강의
1일차 오후	13~15시 (120분)	농촌협약 추진체계의 제도적 장치 실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 <b>행정의 전담조직</b> 구성과 정비</li> <li>◦(실습) 우리 시군의 전담조직 구성</li> </ul>	강의, 실습
	15~17시 (120분)	농촌협약 추진체계의 제도적 장치 실습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습) <b>농촌협약위원회</b> 구성과 운영</li> <li>◦(실습) <b>민간 추진위원회</b> 구성과 운영</li> </ul>	실습
	17~18시 (60분)	종합토론 및 중간 정리	◦(토론) 쟁점토론과 정리	토론
2일차 오전	09~12시 (180분)	농촌협약 추진체계의 제도적 장치 실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 <b>농촌협약지원센터</b> 설치와 운영</li> <li>◦(실습) 우리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설치</li> </ul>	강의, 실습
2일차 오후	13~14시 (60분)	실습자료 정리 및 발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습) 시군별 <b>실습도면 종합정리</b></li> <li>◦(토론) 시군별 발표 준비</li> </ul>	실습, 토론
	14~16시 (120분)	시군별 사례 발표와 토론, 자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 <b>시군별 발표</b>(30분 내외)</li> <li>◦(자문) 쟁점토론과 자문</li> </ul>	발표, 자문
	16~17시 (60분)	종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 시군별 <b>향후 과제 점검</b></li> <li>◦(자문) 향후 과제 제안</li> </ul>	토론, 자문

48

특히, 지자체 행정 공무원 대상의 집중적인 교육연수 필요

## 4.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 · 연계협력 강화

- 중앙에서 기초 지자체에 직접 사업을 전달하는 셈임
- 광역과 기초 지자체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 없음**  
→ '농촌협약'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

### 4-1. (광역)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기초 지자체 지원 기능 강화

- 광역의 역할에 대한 검토 자체가 미약함
- 광역(권역) 중계단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 **충남도 농촌마을정책 사례와 같이 강력한 지원기능 필요**

### 4-2. (지자체) 통합형의 범위와 형태, 시기 등은 지자체 자율성 부여

- 지나치게 느슨한 자율성은 '중앙의 책임 방기'에 해당함
- 지자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중앙과 광역의 지원기능 필요**  
→ **집중심화워크숍, 우수사례 자료집 제작 및 보급, 쟁점 토론 기회 제공 등**

49

## [의제3] 민간 조직화 촉진, 당사자 협의체 설립 지원 → '액션그룹의 발굴과 육성' 자체가 본 사업의 핵심내용

## 5. 민간의 이해 당사자 협의체 설립 및 조직화 지원

### 5-1. 민간 자발성을 토대로 한 '당사자 협의체' 설립 지원

- 농어촌정책에서 민간 당사자 "스스로 말하게 하라" 는 관점과 자세가 중요
- '행정의 칸막이'가 '민간의 칸막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정책적 오류 예방  
→ **전국적으로 아주 다양한 시도가 있고, 시행착오가 반복중**

### 5-2. 현장 학습모임 등 단체의 필요에 따른 조직화 활동 지원

- 사업취지 자체가 민간의 조직화 지원에 해당
- 사업지침 '⑤ 사회적경제 포함' 강조, '⑥ 참여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총 사업비의 30% 이상(제경비 제외)을 s/w 프로그램에 활용 여부"를 검토
- 다양한 소액사업을 통해 자주적인 학습조직 구성, 작은 실천 기회 제공  
→ **액션그룹의 성장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밀착형의 지원 필요**

50

## 6. 당사자 협의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영리법인 육성

- '액션그룹'은 강조하지만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비영리법인 설립은 **명시 없음**  
→ 농어촌정책의 '민간주도성' 측면에서 **중요성에 비해 경시**

### 6-1. 민간 주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장려

- 한국 농촌 현실에서 너무 빈약한 네트워크 법인 설립 현황 : 전북, 충남 발달
- 추진단 자체는 법인이 아니고, 수탁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 필요함
- 농촌정책의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위한 **두 가지 경로**  
→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의 과정이 중요** → **지자체 스스로 경로 결정**

### 6-2. 사무위탁이나 보조사업, 계약사업 등으로 민간 법인의 성장과정 촉진

- 법인 업무는 ①고유사업, ②수탁사업, ③보조사업, ④계약사업으로 구성
- 행정의 '정책적 인큐베이팅 관점'으로 4년간의 핵심적인 성과목표에 해당  
→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가 공론장을 통해 인큐베이팅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51

## [참고] 네트워크 법인 설립(=행정조직 개편)의 두 가지 경로 → '농촌정책'은 어떤 경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 제1안 : (좁은 의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영역 중심의 개편

농촌정책과 : 농촌공간계획, 농발계획, 삶의질계획  
지역개발과 : 농촌 마을공동체 +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H/W), **농촌협약**  
농촌산업과 : 농촌관광, 6차산업  
농촌사회복지과 : 농촌복지, 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 푸드플랜 총괄  
농촌여성정책팀 : 여성복지, 농촌축제  
(귀농귀촌)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이후의 다양한 지역발전투자협약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제2안 : 사회적 가치 지향의 지역사회정책 영역 중심의 개편

농촌 마을공동체 +  
읍면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푸드플랜,  
평생학습(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지속가능발전

민간+행정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해 **지자체 특성 반영**하여 결정

52

## [의제4]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 제도화

→ 여전히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쟁점들이 다수

### 7-1.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책의 기본조례' 제정

- 농업농촌기본법, 삶의질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법체계 정비 방향이 불투명
  - 신활력플러스,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 등 사업조례 제정 수요는 계속 확대
  - 사업별로 정책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설치는 불합리
- '기본조례' 제정의 방향은 법률 체계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에 여전히 불명확

### 7-2. 기본계획, 정책위원회/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민관협치 제도화

- 모든 사업조례는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를 포함
- 정책협업과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별도 조례로 당분간 대응**
  - "충남 농촌정책의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 조례"
  -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제정(2021.02.22)

→ '제도적 장치'에 기반하여 민관협치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 [참고] 충남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 조례

2021.02.22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 농촌
- ② 농촌주민
- ③ 농촌형 주민자치회
- ④ 농촌지원사업
- ⑤ "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 ⑥ "정책협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간 협업을 필요한 정책을 말한다.

## 4. 종합분석과 당면과제 검토, 제안

“사업 추진체계를 어떻게 평가, 보완할 것인가?”

55

### [종합]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평가

→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성과와 가능성

#### 1. 종합분석 및 평가

##### 1)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사업

- 2018년 착수 → 2022년 완료(실질), 2022년 선정 → 2025년에 완료 예정
- 총액 7천억원의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절반도 훨씬 집행하지 못한 상태  
→ 이미 정책적 관심이 약해지고 '또다른 공모사업(=농촌협약)으로 벌써 이동

##### 2) 현재진행중인 성과와 가능성 :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 농특위 의결안건의 취지를 비교적 잘 반영한 정책
- 다양한 활동가 및 액션그룹의 출현 : 1500개 액션그룹, 2만7천명 참여(2025)
- 사무국 및 코디네이터 등 활동가 성장 : 2025년경에는 약 800명 활동가풀
- 농촌의 총체적 역량강화 기여 : 다양한 교육 + 소액사업, 조직화, 네트워킹
- 민-민, 민-관, 관-관의 소통과 협력 경험 축적 : 갈등을 동반하며 칸막이 극복  
→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심화시킬 중앙 및 광역 지원기능 미흡<sup>36</sup>

## 2. 사업지침 강화, 변경사항

### 1) 기초-광역-중앙 모두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내실화

- 정책 전달체계 자체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강화 : 중앙과 광역의 지원기능
- 지자체 추진체계의 민관협치 성격 강화 : 추진위원회, 추진단장, 사무국 등  
→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시행착오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발

### 2)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의 변경, 보완사항

'농촌협약'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

- 지방비 30% 예산 범위 안에서 상근자 인건비 인정 : 도시재생뉴딜 준용
-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 상향 조정과 채용방식 개선 : 중앙정부의 역할
- 행정의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시 요구
- 광역의 지원기능 강화 : 별도 예산 지원 검토 등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방향 제시 : 특히, 농촌협약지원센터 연계
- 액션그룹의 활동성과를 축적하면서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 강조

57

'농촌협약'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

## 3.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지원기능 강화 방향

### 1) 농식품부 역할 강화와 외연 확장

- 지자체 민간 우수인력 확보 지원 : 공동채용설명회 정기 개최 등
- 중계단 위원수 확대와 광역 지자체 단위로 재편 : 위원의 부담 경감
- 광역 지자체에 별도 예산 지원 혹은 별도 편성 요구
- 각종 정보의 충분한 공유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정책 방향에 대한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과정 중시
- 전문적인 연구논문 생산을 위한 별도 공모사업 도입 : 학술적 토론 확대
- 주제별 소인수 심화워크숍 수시 개최 : 지식의 공동생산과 공유

58

## 2) 농어촌공사의 지원 기능 강화

- 지역개발추진단의 전문인력 대폭 확대 : 추가로 3~4명 필요
- 주요 역할 : 1) 선정지구의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분석, 2) 공통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과 추가적인 지침 작성, 3) 관련 정책 영역과의 협력방안 모색(푸드플랜,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 삶의질계획,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4) 전국 단위 공통사업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관리 등

## 4) 광역(행정, 중간지원조직)의 시군 지원기능 강화

‘농촌협약’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

- 광역 단위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 중간지원조직 통합 혹은 협력 강화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역할 재정비 +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와 통합
- 광역 행정의 조직개편과 행정협의체 운영 : 광역 지자체가 먼저 모범을 !!!
  - 기초에 적용한 사업지침의 관점을 광역에도 적용
  - 농촌정책의 전담‘과’ 설치와 총괄조정 기능 강화
  - 행정협의체의 제도적 설치와 내실 있는 운영 강조

59

# 4. 농식품부와 농특위의 역할 제안

## 1) 농식품부의 역할과 과제 제안

- 농촌협약의 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증장기 구상 설계
-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형태에 대한 집중 심화워크숍 개최
- 민간 활동가의 심화학습을 위한 광역 단위 교육연수원 설립과 운영
- 농촌 ‘면’ 기반의 정책협업 강화 :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등
-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 토론 중심의 민관협치과정 개설

## 2) 농특위의 역할과 과제 제안

-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과감한 행정혁신 유도 : 행안부 협조
- ‘삶의질 특별법’을 지렛대로 부처별 조정 역할 강화 : 삶의질위원회 연계
-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의결안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행정과 민간의 정책토론 적극 유도 : 논쟁의 생산과 공감대 확산
- 농어촌정책 분야 민관협치 우수사례 수집 및 표창, 확산

60

# 사례발표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사례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 황준환]

##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민간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1.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공사례
- 2.청양군 마을만들기 정책과 신활력플러스사업

2021. 10. 1.



청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공사례



### - CONTENTS -

#### I. 개요

- 01. 사업의 개요
- 02. 추진체계
- 03. 연계사업
- 04. 추진 경과
- 05. 성과 지표

#### V. 통합돌봄

- 01. 통합 돌봄 도입 모형
- 02. 청양형 키워커 모형 제안

#### II. 청양형 신활력

- 01. 단계별 사업 모형의 적용
- 02. 청양 신활력 특징점

#### VI. 홍보 실적 및 사례

- 01. 모니터링 시스템
- 02.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례
- 03. 주민참여 행사
- 04. 기타 홍보

#### III. 추진실적 및 계획

- 01. 주요추진실적 및 계획
- 02. '20년~'21년 3분기 실적  
및 '21년 4분기 계획

#### VII. 통합시스템 구축

- 01. 데이터 관리 시스템
- 02. 시스템 운영 및 활용

#### IV. 지속가능 플랫폼

- 01. 청년창업지원센터
- 02. 창업생태계 조성
- 03. 액션그룹 평가단

[참조] 주민참여조직

## I. 개요

01. 사업의 개요
02. 추진체계
03. 연계사업
04. 추진 경과
05. 성과 지표

3

### I. 개요

## 01. 사업의 개요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사업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플랫폼, H2O 청양

### 추진목적

H2O(Human, Healing, Organization)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양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 및 육성**,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등 **관내 다양한 사업과 연계**

### 사업내용

- 기간: 2019년~2022년
- 사업비: 70억
-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H2O센터를 중심으로 10개 읍면 연계)

### 사업분야

- HW: H2O센터 리모델링 (15억원)
- SW: H2O아카데미(46억원) 청양청년스타트업(57억원)  
액션그룹성장학교(20억원)행복동행프로젝트(45억원)

### 연계사업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푸드플랜(먹거리위원회)
- 복합문화센터(정산면)
-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 커뮤니티 케어
- 청춘거리(청양읍)
- 가족문화센터-평생학습관(청양읍)
- 통합 돌봄
- 그 외 청양군 관리시설

4

## 02. 추진체계

■ 추진위원회 구성 (총 13인)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위원장	김윤호	청양군청	부군수
위원	황준환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추진단장
위원	김종관	청양군의회	의원
위원	나인찬	청양군의회	의원
위원	김선식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과장
위원	김남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지사장
위원	노승복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위원	박창원	충남도립대학교	
위원	조영재	충남연구원	
위원	윤준상	공주대학교	
위원	김은자	농촌진흥청	
위원	이인용	액션그룹 청우리	
간사	이기준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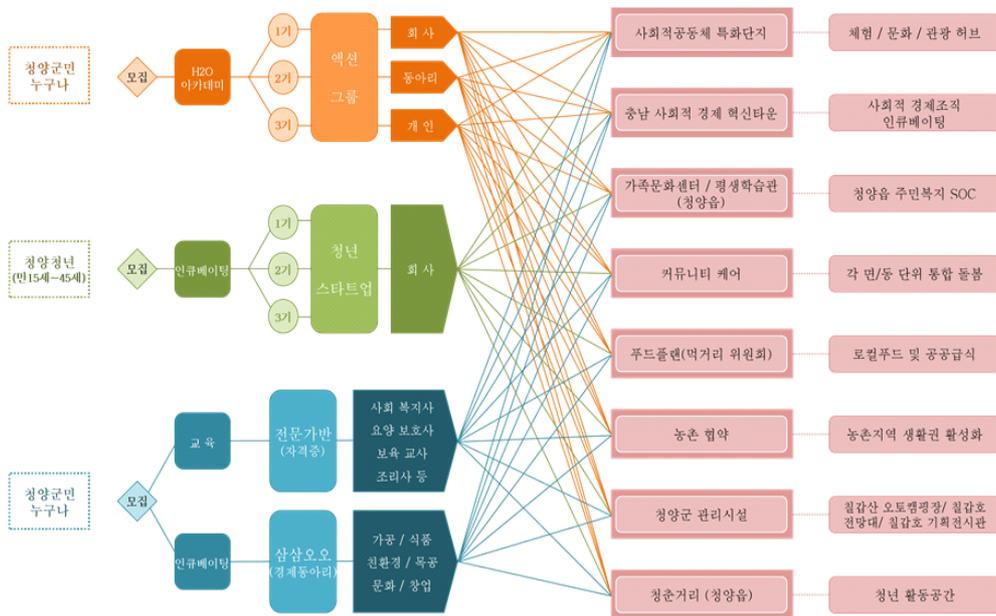
■ 자문위원 (총 5인)

성명	소속	직위	분야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정책
윤석환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행정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	센터장	역량강화
신광철	충남대학교 조소과	교수	공간
김덕환	문화예술, 뮤지컬	배우	기획

■ 사업단 구성 (총 9인)

구분	성명	소속	
추진단장	황준환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사무국	사무국장		정희택
	사무원		정아름
	사무원		오그래
코디네이터	강희숙		
코디네이터	김락중		
코디네이터	김수진		
연구원	나지환		
연구원	박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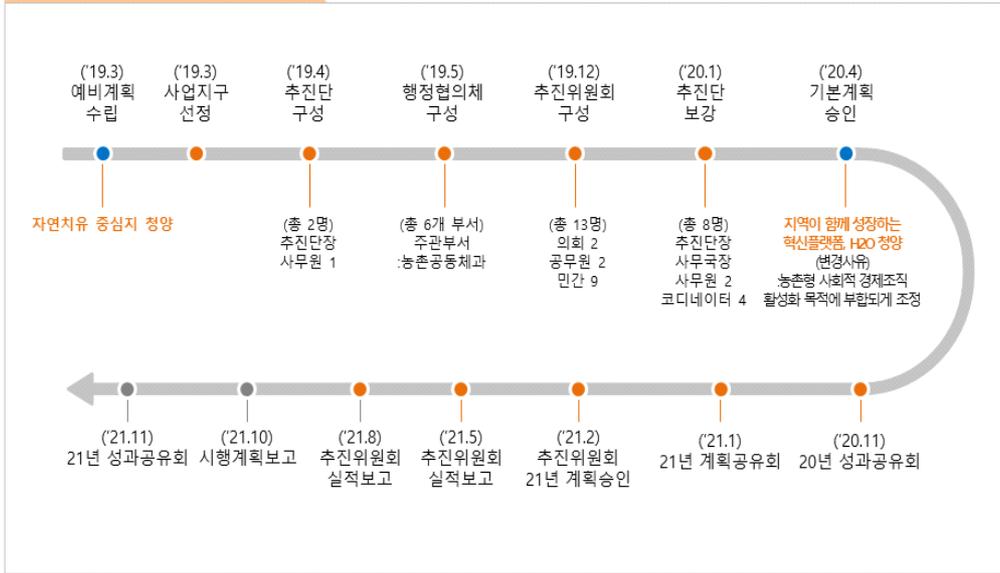
## 03. 연계사업 개념도



※ 행복동행 프로젝트: 다양한 연계사업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04.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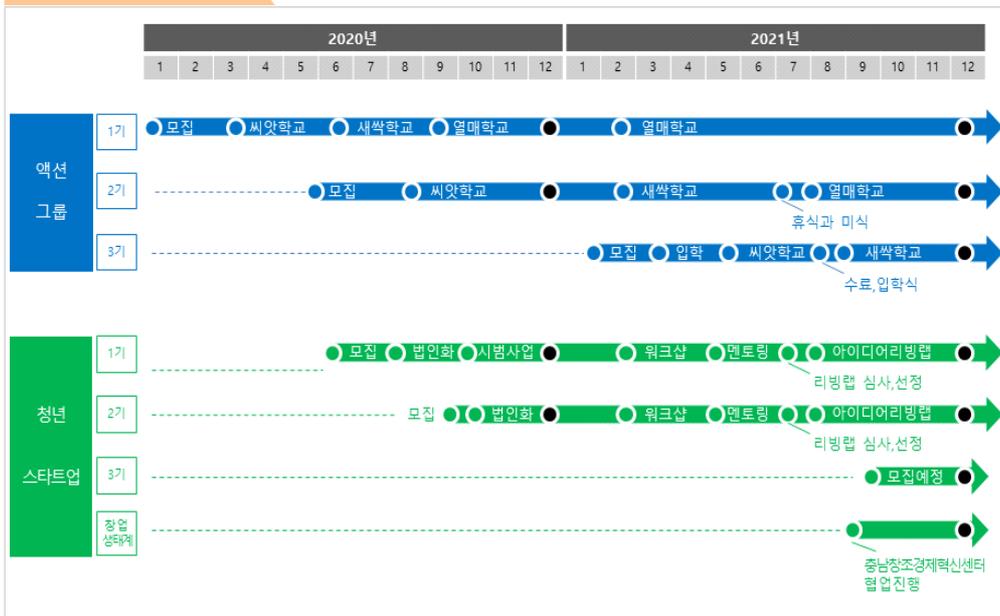
19,20년 추진경과 및 21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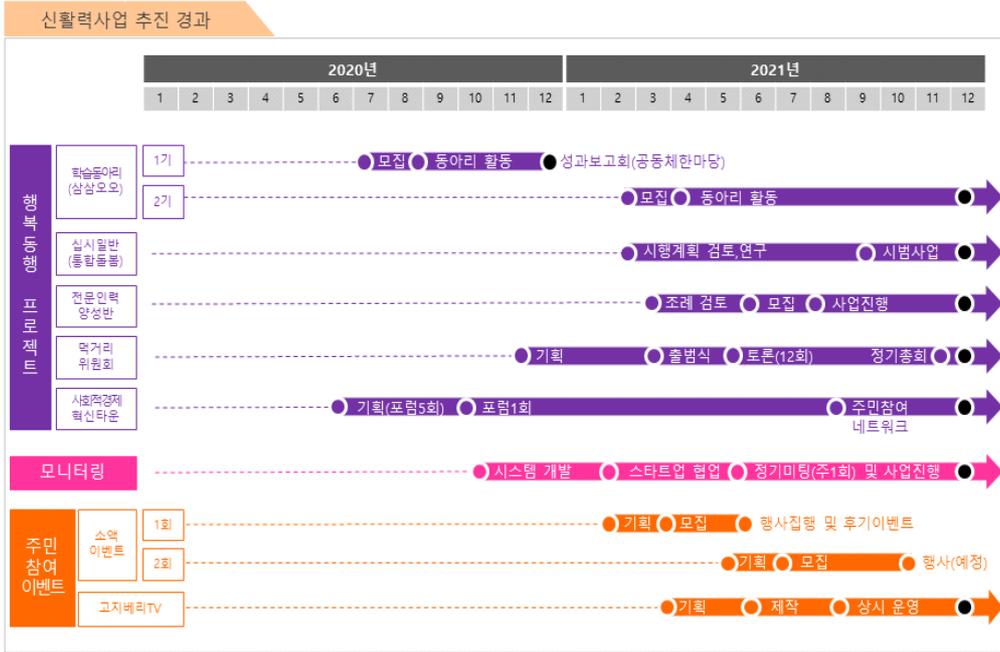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조례 수립예정

# 04. 추진 경과

신활력사업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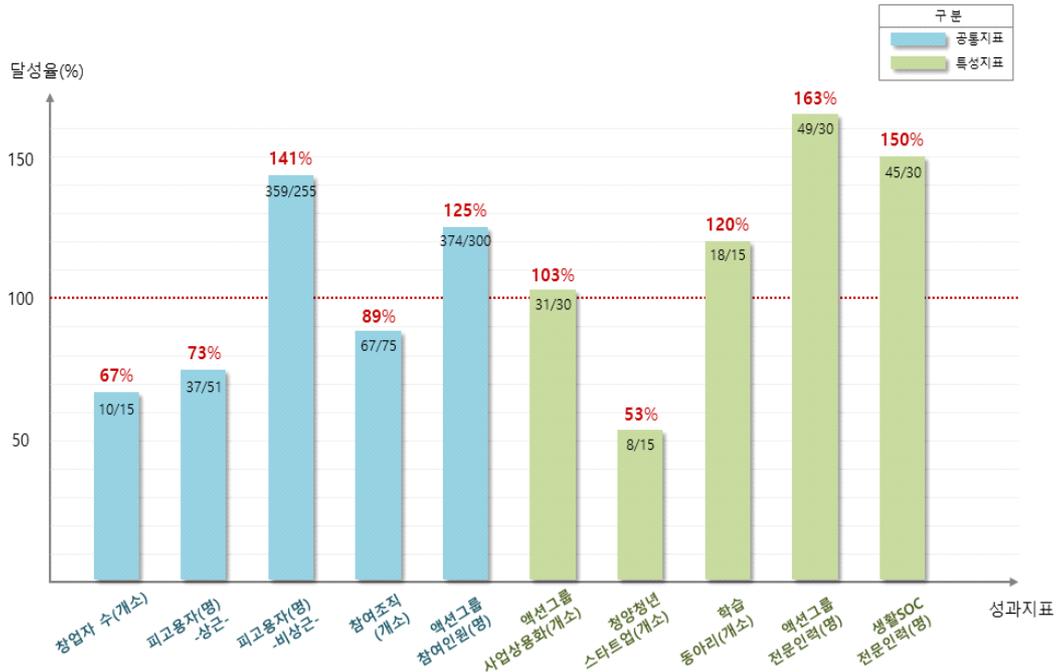


## 04. 추진 경과



## 05. 성과 지표

구분	세부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달성율(%)	
공통 지표	1.일자리	창업자 수 (개소)	15	10	67	
		피고용자 수(명)	상근	51	37	73
			비상근	255	359	141
	2.사업 참여조직	참여조직(개소)	75	67	89	
		액션그룹 참여인원(명)	300	374	125	
특성 지표	1.참여 정도	액션그룹 사업 상용화(개소)	30	31	103	
		청양청년 스타트업(개소)	15	8	53	
		학습동아리 지원단체(개소)	15	18	120	
	2.전문 인력양성	퍼실리테이터양성(명) <small>(과업변경)액션그룹 성장학교 전문인력양성(명)</small>	30	49	163	
		코디네이터 전문자격증 수료(명) <small>(과업변경)생활SOC관련 전문인력양성(명)</small>	30	45	150	
	충남도립대 사회적경제 전문 교육프로그램 수료(명)	30	진행 중	-		



## II. 청양형 신활력

- 01. 단계별 사업 모형의 적용
- 02. 청양 신활력 특징점

## 01. 농촌 신활력플러스 단계별 사업 모형의 적용



## 02.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특징점

첫번째,  
**농촌지역이지만, 도시형 콘텐츠 사업 & 청년창업 시도**

중전 : 농업 청년 창업이나 영농 후계자 육성 중심으로 정책 추진



## 02.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특징점

두번째,

**시니어의 경우, 주특기를 활용하며 여럿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형 개발 유도**

중전 : 시니어 단독으로 개인 농장이나 점포 운영 (개인사업)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 **공동체 활력**을 목표로 하는 **공공성 있는 신규사업 모형** 발굴

1기 역선그룹  생태학교 칠갑산 생태학교	1기 역선그룹  친환경 방제 청우리	1기 역선그룹  어르신 도시락 맛갈손	2기 역선그룹  목공체험 미내골 나무사랑	3기 역선그룹  마을교육공동체 청양 함께자람	3기 역선그룹  정소 전문 청양 마법빛자루
--	---	--	--	--	---

## 02.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특징점

세번째,

**주민 소액사업참여 활성화로, 상호협력하는 공동체 정신 학습 기회 제공**

중전 : 농업융복합분야에 한정해서 지원(생활개선 연구회 등)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형 소액사업** 발굴

1기 학습동아리						2기 학습동아리		
회번	학습동아리 이름	학습 분야	번호	학습동아리 이름	학습 분야	회번	학습동아리 이름	학습 분야
1	푸드 북	농산물 take out 메뉴개발	5	꽃보다 예쁜 맘들	EM활용 천연제품	1	건설 아카데미	농산물 건식 가공
2	호박꽃들의 인두이야기	특성화 가공 (자요데)	6	미내골 나무사랑	국산목재DIY 문화 확산	2	습식 아카데미	농산물 습식 가공
3	정정장중앙정소년창업	학교밖 청소년 자립, 창업지원	7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마을목공소 공방수업	3	반찬 아카데미	농산물 반찬 가공
4	청양문화마을만들기	귀농정착 문화 만들기	8	금싸라기	고령농민 민로개척학습	4	통합돌봄 연구회	마을단위 통합돌봄

## 02.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특징점

네번째,

**주민 참여형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감 있는 매뉴얼 개발 및 PDCA 사이클 운영**

※ PDCA : Plan(계획)-Do(실천)-Check(확인)-Action(조치)

중점 : 농업 생산에 관련된 농업기술지도사 중심으로 운영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 **단계별 주민사업 운영 매뉴얼**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성

[액션그룹 성장학교/학습동아리]

1. H2O 아카데미
2. 씨앗학교(플랜지원)
3. 새싹학교 (러닝지원)
4. 열매학교 (비즈니스 자립화)



[청양 청년 스타트업]

1. 청년창업 멘토스쿨
  - 합동워크숍
  - 전문가 1:1 멘토링
2. 청년 인재양성 교육
  - 기초교육 / 자격증 취득
3. 아이디어 발굴 리빙랩
  - 아이디어 공모전
  - 리빙랩 실험

17

## 02.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특징점

다섯번째,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주민직무능력 재훈련 기회제공**

중점 :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취미 활동 수준 지원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 자격증 취득 등을 적극 지원**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새로운 사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번호	자격증	인원	번호	자격증	인원	번호	자격증	인원
(1)	티스틀리에 1급	6	(6)	CS강사 및 SNS전문가	8	(11)	생활 SOC-복지 (사회복지보육교사, 요양보호간호조무 등)	15
(2)	버섯종균기능사	1	(7)	농산물 품질관리사/유통관리사	5	(12)	한식조리사	11
(3)	미술지표 2급	1	(8)	목공체험지도사	2	(13)	스마트폰 기능사	19
(4)	양식조리사	1	(9)	유기농기능사	15			
(5)	바리스타	4	(10)	술해설가 및 유아술지도사	3			현재 취득완료/수강중/예정 인원 94명

18

## 02.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특징점

여섯번째,

### 주민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로, 주제별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중전 : 행정에서 기획한 군 대표 축제 중심으로 주민 참여 네트워크 실시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 주민 조직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공동체 활성화 주민 축제** 등

[그림피크닉 가정의 달 주민 참여이벤트 개최(21.5)]



## 02.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특징점

일곱번째,

### 청양군 창업생태계 시스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중전 : 단위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원(교육, 컨설팅 등) 종료로 인한 연계사업과의 단절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 사업 종료 이후 창업지원시스템 연속성 확보



### Ⅲ. 추진실적 및 계획

- 01.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
- 02. '20년~'21년 3분기 추진실적  
및 '21년 4분기 계획

21

Ⅲ. 추진실적 및 계획

## 01. 주요 추진 실적 및 계획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01	H2O 아카데미 운영	① 청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단 역량강화 ② 1기,2기 (6팀+7팀=13팀), 3기 (8팀)
02	청양청년 스타트업 양성	① 1기,2기,3기 (4팀+3팀+1팀=8팀), 예비 1팀 ② 스타트업 시범사업 진행 / 충남도립대 MOU
03	액션그룹 성장학교 운영	① 1기,2기 (6팀+7팀=13팀) 운영 ② 3기 자유주제,군정목표 (8팀+8팀=16팀) 모집 완료
04	행복동행 프로젝트	① 소액학습동아리(삼삼오오) 1기,2기(8팀+4팀=12팀) ② 푸드플랜 먹거리위원회 운영 (3개분과x4회=12회) ③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포럼 기획 및 운영 (5회) ④ 십시일반 (면단위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05	H2O 비즈니스 구축	①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 SNS채널 개설 및 운영 ② 신활력사업 활동 모니터링 및 홍보(스타트업 활용) ③ 고지베리TV (유튜브) 기획 및 운영, 주민참여 이벤트 개최

22

02. '20년~ '21년2분기 추진실적 및 '21년3~4분기 계획

1. 인재 양성 및 공동체 조직화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진실적 ('20년~'21년 3분기)	추진계획 ('21년 4분기)
H2O 아카데미 운영	① 청양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역량강화 ② 읍면별 순회교육 ③ 예비액션그룹 아카데미 ④ 지역 활동가 양성교육	① 사업단 역량강화(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사업단-재단 사업공유회 ② 2기 예비액션그룹 아카데미 완료 (12팀) : 모집(5월), 아카데미(6월~10월) ③ 3기 예비액션그룹 모집(8팀, 군정목표팀) : 모집('21년 3월), 아카데미(4월~6월), 씨앗학교(7월~9월) ※군정목표팀/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창설팀, 도시자살준비팀, 청춘거리 활성화팀, 청양미디어센터팀, 청년협동조합연합회팀, 공공시설 운영자 전문가반 (CEO/중간관리자/회계)	① 사업단 역량강화(재단과 합동 운영) : 팀발명, 선진지견학, 특강, 독서 등
청양청년 스타트업 양성	① 청년 아이디어 발굴단 ② 아이디어발굴 리빙랩	①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 MOU체결 ('21년 2월) ② 청년스타트업 1기 : 4팀 : 모집(6월), 법안설립(9월), 시범사업(9월~12월) ③ 청년스타트업 2기 : 3팀 : 모집(9월), 법안설립(11월) ④ 청년스타트업 3기 : 1팀 : 모집(11월), 법안설립('21년 1월), 추가2팀 모집 중 ⑤ 청년 스타트업 1,2,3기 통합 프로그램 : 발류체인 워크숍 ('21년 3월) : 스타트업 회사별 탐방 멘토 매칭('21년 3월)	① 청년 스타트업 3기 : 예비 1팀 사업계획서 작성 중 : 추가 1팀 모집 예정 ② 청년 스타트업 1,2,3기 : 목표 10팀 : 1:1멘토링 1차 ('21.4월~11월), : 아이디어 리빙랩 1차 ('21.7월~11월) ③ 청양 청년사업체 실태 및 창업생태계 조사 ('21.6월~21.9월)

02. '20년~ '21년2분기 추진실적 및 '21년3~4분기 계획

2. 사회적경제 프로세스 구축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진실적 ('20년~'21년 3분기)	추진계획 ('21년 4분기)
액션그룹 성장학교	① 씨앗학교(플랜지원) ② 새싹학교(러닝지원) ③ 열매학교(비즈니스 자립화)	① 1기 액션그룹 6팀 : 씨앗학교(4월), 새싹학교(9월), 열매학교(12월) : '21년도 열매학교 계속 운영 ② 2기 액션그룹 예비12팀→ 합격7팀 : 씨앗학교(12월), 사업평가('21년 2월), 입학식('21년 3월) ③ 3기 예비액션그룹 8팀 : 모집('21년 3월), 아카데미('21년 4월), 씨앗학교('21년 6월)	① 1기 액션그룹 6팀 : '21년도 열매학교 계속 운영 ('21.6월~21.11월) ② 2기 액션그룹 7팀 : 새싹학교('21.3월~6월), 열매학교('21.7월~11월) ③ 3기 액션그룹 8팀 : 새싹학교('21.9월~11월) : 성과보고회 ('21.11월)
행복동행 프로젝트	① 동행공동체 발굴 ② 동행공동체 인큐베이팅 ③ 실시일반 동행 프로젝트	① 소액학습동아리(삼삼오오) -1기 8팀 : 모집(7월), 팀발명(9월), 사업완료 및 성과공유회(11월) -2기 4팀 완료 : 모집(12월), 팀발명 및 사업 집행('21년 3월~7월) ② 푸드플랜 먹거리위원회 (50명) : 위원회 구성(11월), 출범식 및 부위원장 선출('21.3월), : 분과장 및 간사 선출('21.5월) ※안전한먹거리분과(16명+자문), 공공먹거리분과(16명+자문), 행복한먹거리분과(15명+자문) ③ 전문가 인력양성(45명) : 생활SOC학습동아리 모집 ('21년 6월), 운영 ('21년 7월~) ※사회복지, 요양보호, 보육교사, 조리사, 스마트분류용지도사 ④ 실시일반 (면단위 통합돌봄) 사업 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팀 포럼 : 계획5회 수렴(7월), 1회 실행(9월)	④ ② 푸드플랜 먹거리위원회 (50명) : 분과별 회의('21.6월~11월) 3개 분과 X 3회=총 9회 : 분과위원회 회의('21.5월~11월) 5회 : 정기총회 ('21.12월) ⑤ 전문가 인력양성 -생활SOC학습동아리 : 운영('21.7~22.9월) 계속사업 ④ 실시일반(면단위 통합돌봄) 사업 : 시범사업 추진('21.9월~21.11월) 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팀 포럼 : 4회 실행 예정 ('21.6월~21.11월)

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활력 거점 조성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진실적 ('20년~'21년 3분기)	추진계획 ('21년 4분기)
H2O센터 조성사업(H/W)	고추박물관 리모델링	① 설계공모 실시 : 발주 (21.8월)	① 실시실계 : 설계수립(21.9월~'21.1월) 실시실계 완료(21.2월)
H2O 비즈니스 구축	① 비즈니스 지원 ② 홍보·마케팅	① 신활력사업 홍보 톨 개발 및 운영 :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모바일앱 개발(10월) ② 지면광고 제작 및 집행 : 2회(6월, 10월) ③ 사업설명자료(팜플렛,동영상 등) 제작(12월) ④ 청양 미디어센터 설립 운영 : 이동식 스튜디오(고지베리TV) 기획 ('20.10~'21.4) : 주민 참여형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유 ⑤ 주민참여형 소액 이벤트 개최 : 그림피크닉 ('21.5월), ⑥ 신활력 홍보 전략 수립 : 21년도 종합 홍보 가이드라인 수립(21.10~'21.12) : 21년도 분기별 홍보 실행계획 수립(21.3~'21.10)	① 신활력사업 자체 홍보 채널 운영 :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모바일앱 콘텐츠 업로드 총 36회(21.4월~'21.11월) ② 청양 미디어센터 설립 운영(~'22.9) : 이동식 스튜디오(고지베리TV) 구축(21.5~'21.10) : 주민 참여형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유 ※라이브방송 3회(21.10월~'21.12월) ③ 주민참여형 소액 이벤트 개최 : 물감피크닉 ('21.10월), ④ 신활력 홍보 전략 수립 : 21년도 분기별 홍보 실행계획 수립(21.3~'21.10) : 22년도 종합 홍보 가이드라인 수립(21.10~'21.11)

25

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활력 거점 조성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진실적 ('20년~'21년 3분기)	추진계획 ('21년 4분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① H2O센터 통합관리시스템구축 ② 모니터링사업단 운영관리	① 웹진, 소식지 창간(11월), : 소식지 발간(21년 8월) ②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2월) : 스타트업 3개 회사와 협력하여 운영시스템 개발 ※20년도 모니터링 결과물: 소식지,웹진,카드뉴스,동영상 등 ③ 성과보고회 - 백서(총3권) : 신활력사업 관계자의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기록물 : 구성 및 기획 - 연간활동 보고서 : 19년,20년 연간활동 보고서 제작 ('20.12월) - 공동체 한마당 : 주민참여사업 성과공유회 ('20.11월)	① 웹진, 소식지 발간(1회) ②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스타트업 3개 회사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계속 (~'22.9) ③ 성과보고회 - 백서(총3권) : 1권 -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편 : 2권 - 주민조직육성 매뉴얼편 - 연간활동 보고서 : 21년 연간활동 보고서 작성 - 공동체 한마당 : 주민참여사업 성과공유회 ('21.11월)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운영	① 추진위원회 운영 ② 자문위원회 운영 ③ 사업단 운영 ④ 사업단 활동	① 추진위원회 : 20년도 2회 21년도 1회(21.2) / 2회(21.5) / 3회(21.8) ② 자문위원회 : 20년도 4회 / 21년도 1회(서면 '21.2) ③ 사업단 사무실 운영 ④ 비상근 코디네이터 3명 운영	① 추진위원회 : 21년도 4회 ② 자문위원회 : 21년도 2회(21.2)~4회(21.11) ③ 사업단 사무실 운영 ④ 비상근 코디네이터 3명 운영

26

#### IV. 지속가능 플랫폼

- 01. 청년창업지원센터
- 02. 창업생태계 조성
- 03. 액션그룹 평가단
- 04. 액션그룹 경영매뉴얼

#### IV. 지속가능 플랫폼

### 01. 청년창업지원센터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구 한전건물 임대

입주 : 2021. 08. 05 (개소식 : 2021. 08. 24(수) 15:00)

운영 및 지원 내용

- 1) 청년창업협동조합연합회 사무공간 지원
- 2) 네트워크 및 회의 공간 지원
- 3) 충남도립대와 충남장조경제혁신센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벤처캐피탈 펀드 운영 지원)

운영 주체

- 1) 2022년까지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운영
- 2) 2023년부터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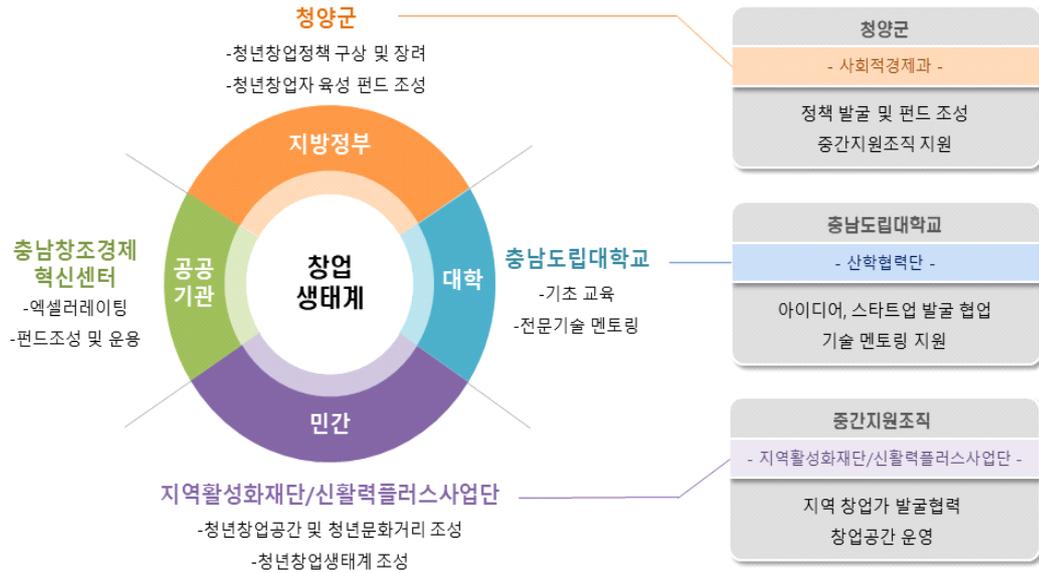
입주기관(총 8개소)

- 1) 1층 -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 일자리정보센터
- 2) 2층 - 청아름 / 레이디버드 / 강강 (청년협동조합)
- 3) 3층 - 디자인공작소 / 청춘온 / 호텔C (청년협동조합)



## 02. 창업생태계 조성

### 01. 추진체계 및 기관



## 02. 창업생태계 조성

### 02. 성과와 투자



03. 세부사업내용

1. 청양 지역혁신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역 혁신창업가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 기간 : 2022. 3. 1 ~ 2022. 12. 31 (1년차)
- 사업예산 : 1억4천5백만원 (도비 45백만원, 군비 1억원)

과목	사업비(백만원)			내역
	계	(국)도비	군비	
	145	45	100	
사업화 지원금	90	45	45	3팀 × 15백만원
인건비	40		40	센터 매니저급 1인
운영비	15		15	

※ 군비 :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충남도립대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집행

시행주체 및 대상

- 시행주체 :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대상 : 청양군 소재 청년(예비)창업기업,

Next Local 참여 창업가

※ Next Local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에 도전하는 프로그램  
 예) 나주'쪽'-삼푸바 등 솔리드 바디케어브랜드  
 의성'마늘'양파'-파스토, 카라멜라이징 양식소스  
 홍성'한우'-인증기능CCTV 소 상태 관리 서비스  
 합천'지역문화이야기'-장작유지할  
 : 2020년 참여 지역  
 -13개 지역 (충남-홍성)  
 : 2020년 참여 창업가 25팀(약200명) 중  
 -사업장 이전 12팀, 거주지 이주 8명

사업목표

청양군 로컬크리에이터 3팀 창업 및 육성

03. 세부사업내용

1. 청양 지역혁신가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용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로컬 창업창직 지원"

- 청양 전용트랙 신설 (충남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연계)
- 지원사항 : 입주공간 지원(중간지원조직), 사업화 자금 지원, 전문 멘토링
- 지원절차



교육 프로그램 예시

연번	프로그램명	유형	대상	주요내용
1	로컬 캠프	육성,네트워킹	로·크	교육
2	찾아가는 로터링(LO-Tering)	육성,네트워킹	로·크	현장코칭, 멘토링
3	스타트업워크	지원	로·크	전시 및 판매
4	창업챌린지리얼	지원	로·크	테스트베드 제공
5	로컬 창업 장직 활성화	육성,지원	로·크	생활형 창업자 공간지원
6	소셜 임팩트 배지(ESG)	육성,지원	소셜벤처	문제 해결형 소셜벤처

※ 청양군 지역혁신가의 사업화모델(BM)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필요

03. 세부사업내용

2. 청양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운영

사업목적

청양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창업기업 성장촉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개년, 투자)
- 펀드 운영기간 : 2022. 1. 1 ~ 2029. 12. 31 (8개년, 운영)
- ※ 투자 이후 회수기간까지 고려하면 총 8년 동안 운영

시행주체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민간 벤처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와 공동운영 예정

운영보수

총 조성금액의 2.5% 내외, 예산 내 사업운영비 포함

펀드조성방안

- 청양군 : 매년 1억 출자, 총 5억 조성
  - 2022년 (1차년도) : 신활력플러스사업비에서 조성
  - 2023년 ~ 2026년 : 사회적경제과에서 요구 예산 편성
- 민간투자자금 : 매년 2천만원 이상, 총 1억 (최소)
- 청양 스타트업 투자 유지 목표(예시)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금액	0.8억	1억	1.2억	1.5억	1.8억	6.3억

- 시드투자 후 연결되는 투자성과는 제외
- 펀드 출범 전 회수 목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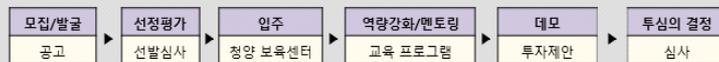
03. 세부사업내용

2. 청양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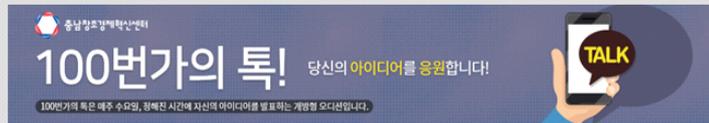
세부내용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 로컬 데모데이, 투자심의회 등”

- 청양형 Batch (배치,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청양군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가, 지역혁신가
  - ※ 사업과 모델이 정립단계에 있거나, 시제품이 준비된 창업가



- 투자자 네트워킹 : 찾아가는 100번가의 특\* (청양편) 운영



\*100번가의 특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투자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 02. 창업생태계 조성

### 04. 추진일정

		업무협약 및 세부시행계획수립						시행계획 승인 및 펀드 조성, 로컬프로그램 지원											
		2021년						2022년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판의 영역	협약 체결																		
	출자계획수립																		
	2022년 예산반영																		
	시행계획승인																		
	모집 / OT																		
	창업가 로컬 프로그램 지원																		
	완료 / 결과보고																		
비판의 영역	협약 체결																		
	상세계획수립																		
	예산반영																		
	시행계획승인																		
	모집 / 역량강화																		
	펀드조성 및 출범(연질찾기)																		
	모의투자																		
	보완 및 심사																		
	결과보고																		
	후속계획수립																		

## 02. 창업생태계 조성

### 05. 충남창업조경제혁신센터 소개



**일반 현황**

**(설립배경)**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파트너기업) 매칭 방식으로 17개 시도에 설치

**(주요기능)**  
지역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①지역기술창업 육성 지원 ②지역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  
③지역특화산업 육성 ④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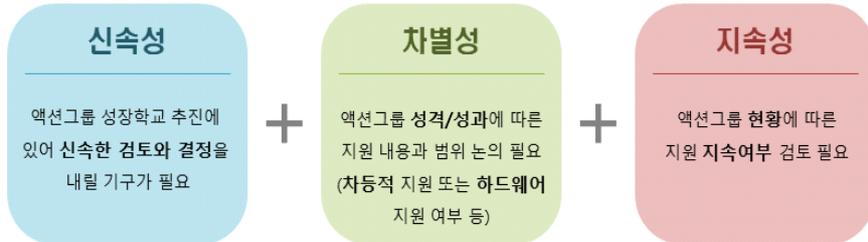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7(기술창업 활성화 등),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전담기관의 지정), 제5조의 7(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조직 및 인력**

센터장 강희준 외 41명 (2021. 7. 1 기준)

구분	계	센터장	정규직				계약직 (PPP포함)	파견직		
			책임	선임	진입	사원		지자체	대기업	코트라
정원	22	1	3	5	8	5	-	-	-	-
현원	42	1	2	4	7	10	15	-	2	1

01. 평가단 구성 배경



02. 평가위원 구성(5인)

번호	이름	직책
1	황 준 환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단장
2	정 희 택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사무국장
3	구 자 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4	서 정 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5	정 석 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 간사는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액션그룹 코디네이터가 담당

※ 농촌공동체과와 농어촌공사 담당관은 참관인으로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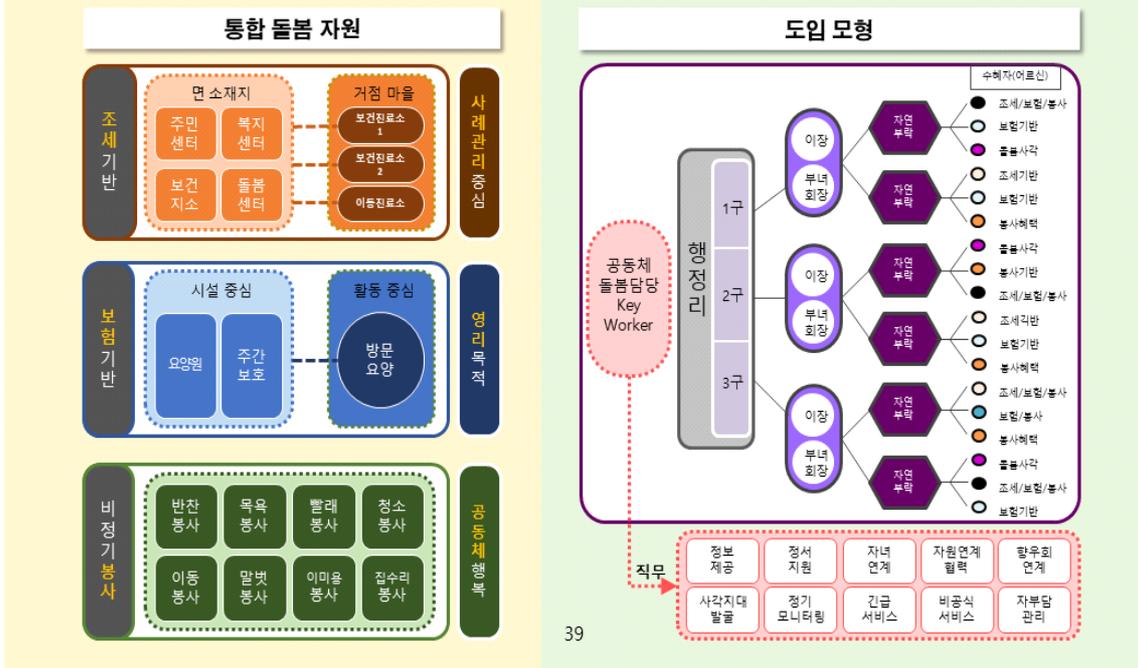
※ 액션그룹 평가단은 필요 시 월1회 개최하며 결정사항은 주진위에 보고함

V. 통합돌봄

- 01. 공동체 돌봄 담당 도입 모형
- 02. 청양형 키워커 모형 제안

## 01. 공동체 돌봄 담당 도입 모형

### 청양군 공동체 돌봄 담당 Key Worker 도입 모형



## 02. 청양형 키워커 모형 제안

<b>사업명</b>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십사일반 동행프로젝트 운영
<b>사업기간 및 예산</b>	(사업기간) 착수일 ~ 2021. 12. 20. (사업예산) 58,000,000원 (금오천팔백만원)
<b>사업배경 및 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양군을 포함한 다양한 시군에서 노인을 위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읍면단위로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나 즉시성과 근접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li> <li>○ 읍면단위 중심의 통합돌봄의 한계인 즉시성과 근접성, 그리고 정서적 체감도를 높이고 보완하며 청양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의 돌봄 시스템 모형 개발의 필요성 대두</li> <li>○ 청양군 통합돌봄 체계로 Key Working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마을단위 노인의 욕구와 특성, 마을 환경에 맞는 지역(마을)밀착 맞춤형 돌봄 제공 체계로 통합돌봄 사례관리(읍면동)-keyworking(마을)-neighbourhood watch system(노인 개인)으로 연계되는 생태체계 접근을 기대</li> </ul>
<b>사업 내용</b>	<p>(1단계) 청양군에 적합한 마을단위 통합돌봄 시스템 운영모형의 개발</p> <p>(2단계) 개발된 모형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p>

## VI. 홍보 실적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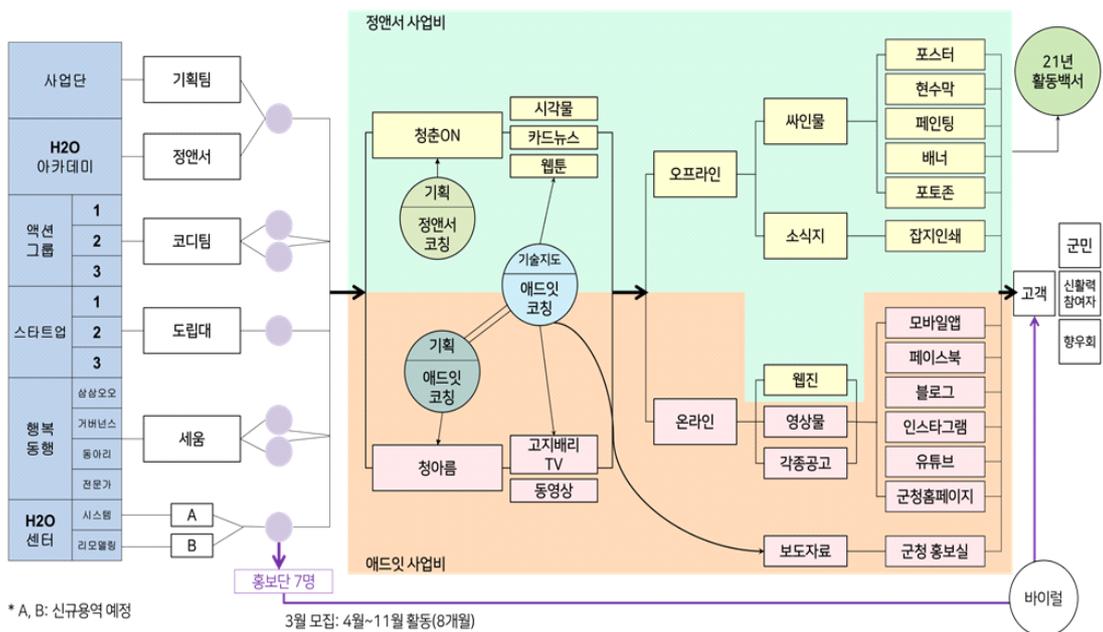
01. 모니터링 시스템
02. 모니터링 운영 프로세스
03. 주민참여 행사
04. 기타 홍보

41

### VI. 홍보 실적 및 사례

## 01. 모니터링 시스템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42

## 02.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02.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03. 주민참여 행사

#### 주민참여 소액 이벤트 사례 - 그림 피크닉 [2021.5.15.]

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는 7세~11세 어린이와 보호자 10팀 (1팀당 최대 4명)  
 내용 : 원목 의자를 자유롭게 색칠하며 즐기는 소규모 이벤트로, 1개월의 전시 후 각자 가져가서 자유롭게 사용  
 참여 : 액션그룹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행사 준비 및 진행

<b>STEP 1.</b>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 청년스타트업: 청준ON	<b>STEP 2.</b> 재료(의자) 준비 액션그룹: 미내끝나무사랑	<b>STEP 3.</b> 미술 강의 및 코칭 청년스타트업: 호벌C	<b>STEP 4.</b> 축하공연 액션그룹: 다름이난타마음	<b>STEP 5.</b> 취재 및 운영보조 청년스타트업: 레이디버드
--	--	---	---	--

본 행사 및 작품전시

### 04. 기타 홍보

<b>기사 [신문, 잡지, 블로그 등]</b>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공적으로 진행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청년스타트업 육성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청년스타트업 육성	<b>슬로건 포스터</b> 젊은 청양 희망연과 청춘청양 함께 만들어요! 젊은 청양 희망연과 청춘청양 함께 만들어요!
<b>리플렛, 소책자, 소식지 등 홍보물</b>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함께해요 H2 젊은 청양	<b>현수막, 배너 등 옥외 홍보물</b> 젊은 청양 희망연과 청춘청양 함께 만들어요!

## Ⅶ. 통합시스템 구축

01. 데이터 관리 시스템
02. 시스템 운영 및 활용

47

Ⅶ. 통합시스템 구축

## 01. 데이터 관리 시스템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01. 배경 및 필요성



48



## 1기 액션그룹

■ : 수익창출 ■ : 동아리

### 1. e-청춘

#### 농민주도형 온라인 공유마켓



구성원 : 15인  
박상현, 윤용자, 김만자,  
김미선, 조경우, 김기홍,  
김상림, 최은아, 윤석환,  
강준동, 오세진, 김주경,  
윤향숙, 조유환, 박용규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양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온라인 기반으로 판매

### 2. 뒤앤담

#### 청양군 명품 차·청 개발사업



구성원 : 10인  
이광남, 김영필, 김연이,  
순순자, 김옥수, 김홍분,  
문원호, 안미현, 박진서,  
성옥

자·정 문화형태 프리미엄 카페운영 사업으로써  
마케팅 및 유통회사 설립을 통한  
명품차 샵 운영

### 3. 맛깔손

####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구성원 : 12인  
신미란, 강계화, 이옥화,  
조순호, 김명숙, 박종민,  
김숙경, 최재욱, 박영혜,  
이영희, 김은지, 황재림

청양군 H2O센터(고추박들관) 내 제조시설을 이용,  
통합 돌봄 대상인 취약계층(어르신 등) 대상으로  
맞춤형 도시락과 밀키트를 개발하여 공급

### 4. 문화터미널 ▲

####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 동아리 육성



구성원 : 45인  
황성은, 이옥자, 조재민,  
노하진, 복지은, 노효정,  
한동훈, 손준혁, 이현종  
외 39명

생활문화 핸드메이드 명품샵 운영 및  
관광기념품 판매장 운영

### 5. 청우리

#### 청양군 친환경 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종합회사



구성원 : 15인  
이인용, 라희중, 강락규,  
권남혁, 권효순, 김동일,  
노재근, 박성욱, 엄태일,  
윤여진, 이문수, 최남식,  
최연옥, 한광우, 송주영

체험장(향후 고추문화 마을에 적용 할 모형 개발) 및  
친환경 방제 식물 재배, 가공을 통한  
천연 방재농약보급

### 6. 칠갑산 생태교육센터

#### 생태 환경교육 및 캠프 운영



구성원 : 14인  
김기태, 황영순, 김유현,  
정철호, 안선영, 이정호,  
김기상, 이훈환, 신인옥,  
장영희, 김현락, 최경혜,  
최진규, 정준단

청양군 내, 생태전문가 육성학교 및 생태캠프 운영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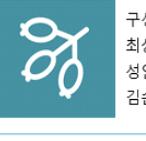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2기 액션그룹

■ : 수익창출 ■ : 동아리

### 1. 구가연가

#### 구기자와 연을 융합한 바이오헬스 6차산업 사업화



구성원 : 10인  
최상두, 김종덕, 유선배, 이상근,  
성인경, 황호석, 양향희, 유영분,  
김순옥, 황선영

### 2. 다듬이마을

#### 다듬이타문화 스토리 구축 및 재능기부



구성원 : 14인  
강경례, 남윤우, 김명숙, 김화숙,  
최윤자, 최정아, 김순덕, 김오목,  
전영순, 윤현미, 이희숙, 김진아,  
정다운, 강석영

### 3. 풀꽃약방

#### 청양의 산야초를 이용한 산야초 치유전문 브랜드



구성원 : 11인  
임득균, 강순희, 김미경, 김순임,  
노영성, 반은자, 유성애, 이은경,  
조형호, 최미애,  
최기순

### 4. 미래골나무사랑

#### 목공체험교실 운영



구성원 : 14인  
김양배, 안지숙, 임장빈, 전기숙,  
김동국, 양근석, 이미숙, 김성훈,  
이상신, 김종숙, 강태선, 송복순,  
성홍제, 이난성

### 5. 이상동몽

#### 농촌체험휴양마을 혁신 프로젝트



구성원 : 13인  
김기순, 이미경, 장경아, 노재찬,  
이인숙, 오정은, 안혜란, 박정옥,  
유재민, 송기영, 김희숙, 임상혁,  
강희주

### 6. 청양군 청소년동아리

#### 청소년 무인스튜디오 카페



구성원 : 10인  
양수연, 양서준, 신민지, 이현진,  
이지원, 이동윤, 김기현, 박진감,  
김선빈, 강산

### 7. 단비

#### 청양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농가공품 제조 및 체험학습장 운영



구성원 : 10인  
최단비, 김정미, 유혜자, 이지연,  
윤경희, 김현우, 최호준, 임준현,  
김동렬, 박은희



52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3기 액션그룹 (자유주제)

수익창출 : 동이리

<p><b>1. 청양 마법빗자루</b></p> <p>지역의 건물관리, 청소대행업 및 소독</p>  <p>구성원 : 15인 김태연, 고지연, 양월주, 유희자, 이상희, 홍천기, 김종권, 양희식, 김보철, 지영정, 정순영, 주미라, 김성주, 윤상숙, 김태근</p>	<p><b>2. 청춘불패</b></p> <p>칠갑산 오토캠핑장 카라반과 글램핑장 운영</p>  <p>구성원 : 10인 김경진, 김은주, 장훈, 변진수, 김태훈, 김진섭, 김옥순, 김봉열, 김다빈, 김진현</p>	<p><b>3. 한담각시 규방공예 연구회</b></p> <p>전통문화 체험, 교육, 판매</p>  <p>구성원 : 10인 최영미, 이순옥, 박민아, 양경숙, 이미영, 이종목, 이옥순, 서봉석, 조찬미, 김미숙</p>
<p><b>4. 대평 다.채.움</b></p> <p>해바라기 공동작업을 통한 농촌 및 경관체험마을</p>  <p>구성원 : 12인 정창순, 윤동찬, 장수비, 윤홍수, 임권수, 박종철, 전익희, 김복기, 윤상순, 유명열, 박선숙, 유성자</p>	<p><b>5. 청양군 치유농업연구회</b></p> <p>치유농장,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관광 활성화</p>  <p>구성원 : 12인 이세영, 김미연, 최정화, 박경자, 우동욱, 황순덕, 한영숙, 박정기, 서진숙, 유병무, 전영신, 김금자</p>	<p><b>6. 청양효소치유의 숲</b></p> <p>자연치유를 위한 효소 치유의 숲 운영</p>  <p>구성원 : 15인 고사리, 윤경호, 이종현, 강민국, 박영숙, 정경호, 이종찬, 최덕현, 성미애, 박계숙, 박성두, 정원옥, 노선희, 박인자, 김민영</p>
<p><b>7. 청양함께자람</b></p> <p>청양형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위한 정보공유와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p>  <p>구성원 : 17인 이나윤, 정미숙, 이정미, 윤서현, 유정선, 이은희, 김윤경, 신재선, 정명자, 최선덕, 박미현, 이주하, 이환희, 박진희, 김진희, 안지은, 윤지연</p>	<p><b>8. 바른음악리</b></p> <p>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 합창단 운영, 실천사항 등을 정하여 캠페인 활동</p>  <p>구성원 : 12인 김태종, 이미란, 김수경, 박미정, 김지혜, 김승희, 김송아, 고요안, 고이랑, 이나현, 김은경, 김슬우</p>	<p><b>9. 청양 드론 농업 연구회</b></p> <p>드론을 활용한 농업 경영 및 공동 방제 연구</p>  <p>구성원 : 13인 조일상, 이주전, 김청경, 김세태, 서복식, 정해도, 우영식, 최진중, 정진성, 김용태, 김승환, 안재수, 최정기</p>

# 3기 액션그룹 (군정목표)

순번	그룹 주제	대표	구성원	순번	그룹 주제	대표	구성원
1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창설 (9개팀)	윤기서	정우리, 풀꽃약방, 뉘앤뉘, 맛갈순, 소찬 위문술, 단비, 강강협동조합, 운영주체윤기서	6	공공시설 역량강화 -CEO 아카데미- (15인)	신기민	김태연, 이영환, 엄필용, 엄성용, 윤기서, 이인용, 북미정, 김장식, 이육자, 신기민, 임득균, 명덕재, 신미라, 최호준, 강왕구
2	청양 청년협동조합 연합회 (6개팀)	이영환	레이디버드 협동조합, 청아름협동조합, 청춘은협동조합, 강강협동조합, 로탈C협동조합, 디자인공작소 협동조합	7	공공시설 역량강화 -중간관리자 아카데미- (13인)	김락중	김경미, 이상희, 정아름, 김택중, 박수연, 조형호, 이해영, 김양미, 최선덕, 김은지, 김태종, 이미란, 최단비
3	청양군 미디어센터 (7명)	북미정	북미정, 명덕재, 엄성용, 김양배, 이인용, 이홍식, 이광남	8	공공시설 역량강화 -회계 아카데미- (22인)	김현우	문선정, 문미정, 김선미, 김환선, 김명숙, 봉유진, 이주희, 양월주, 노선희, 양예지, 박상희, 박소현, 권은하, 노영성, 김상림, 김현숙, 김수진, 강희숙, 고은경, 김현우, 오그래, 강계화
4	청춘거리 청양의 봄 (6명)	김경미	김경미, 정명선, 김동경, 김중환, 명수진, 김도훈				
5	도시재생 뉴딜 준비사업	우재권	도시재생지원팀과 협력하여 추가구성원모집중				

## 청양청년 스타트업

<p><b>1. 디자인공작소</b> 시각 디자인을 제작 및 광고 대행</p> <p><b>시각 디자인</b></p> <p>구성원 : 6인 이영환, 이현중, 최지원, 손준혁, 한동훈, 김주연</p>	<p><b>2. 청춘ON</b> 웹진, 소식지, 카드뉴스 (모니터링)</p> <p><b>웹진 / 소식지</b></p> <p>구성원 : 5인 이소영, 송종만, 김용휘, 조원진, 지용수</p>	<p><b>3. 청아름</b> 각종 동영상 제작(모니터링)</p> <p><b>동영상</b></p> <p>구성원 : 5인 명덕재, 송승민, 허원석, 이다형, 곽현</p>	<p><b>4. 청양청년</b> 모바일앱 개발 및 콘텐츠</p> <p><b>모바일앱</b></p> <p>구성원 : 6인 이재영, 유정재, 홍성혁, 김경태, 조정은, 박소현</p>
<p><b>5. 레이디버드</b> 역량강화 컨설팅사</p> <p><b>현장 활동가</b></p> <p>구성원 : 5인 김경미, 엄성용, 명수진, 이주희, 임장환</p>	<p><b>6. 강강</b> 베이커리 및 카페운영</p> <p><b>빵/케이터링</b></p> <p>구성원 : 5인 박소정, 엄필용, 유지수, 이가은, 유범선</p>	<p><b>7. 호텔C</b> 청양 삶기술학교 운영</p> <p><b>삶 기술 학교</b></p> <p>구성원 : 5인 이효진, 김명주, 이원규, 김규성, 김지영</p>	<p><b>8. 채움</b> 스마트팜 엔지니어링 회사</p> <p><b>스마트팜</b></p> <p>구성원 : 5인 임현목, 유동현, 이은규, 김진태, 조하림</p>

55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행복동행\_학습동아리

<p><b>1. 푸드쿵</b> 지역농산물 신메뉴개발</p> <p>구성원 : 6인 김장익, 신영숙, 심미옥, 명인하, 김지은, 노승훈</p>	<p><b>2. 호박꽃들의 만두이야기</b> 특성화 음식가공, 판매상품개발</p> <p>구성원 : 6인 남기성, 김정숙, 이용금, 한재욱, 한재숙, 강창례</p>	<p><b>3. 청정창(청양 청소년 창업)</b> 학교 밖 청소년 창업 지원</p> <p>구성원 : 6인 김보미, 구승주, 김서현, 이수진, 조소현, 황현지</p>	<p><b>4. 청양문화마을만들기</b> 특성화마을조성, 귀농문화조성</p> <p>구성원 : 5인 최상두, 김종덕, 최상섭, 양향희, 사인상</p>
<p><b>5. 꽃보다 예쁜맘들</b> BM 천연제품 만들기</p> <p>구성원 : 5인 봉유진, 신순희, 김유정, 이영미, 윤애희</p>	<p><b>6. 미내골 나무사랑</b> 국산 목재 DIY 문화 확산</p> <p>구성원 : 5인 김양배, 김성훈, 명재항, 최화용, 성홍재</p>	<p><b>7. 아낌없이 주는 나무</b> 마을목공소 만들기</p> <p>구성원 : 3인 고사리, 강민국, 박계숙</p>	<p><b>8. 금싸라기</b> 고령농가 판로개척, 학습모임</p> <p>구성원 : 3인 노재찬, 복진순, 손찬욱</p>
<p><b>9. 건식가공 아카데미</b> 농산물 가공아이템 개발</p> <p>구성원 : 7인 송순호 외 6인</p>	<p><b>10. 습식가공 아카데미</b> 농산물 습식가공 아이템 개발</p> <p>구성원 : 6인 유근진 외 5인</p>	<p><b>11. 반찬가공 아카데미</b> 농산물 반찬가공 아이템 개발</p> <p>구성원 : 8인 김경옥 외 7인</p>	<p><b>12. 청양물정책연구소</b> 십시일반면면위 통합물품 연구회</p> <p>구성원 : 6인 이육자 외 5인</p>

56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행복동행\_전문인력양성반

1. 복지 아카데미(가칭)	2. 조리 아카데미(가칭)	3. 스마트폰 활용 아카데미(가칭)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총 구성원 : 15인	총 구성원 : 11인	총 구성원 : 1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분야 (11인) 이경순, 권진수, 반혜린, 반양희, 윤현숙, 김영주, 정은순, 임지혜, 강태림, 전현진, 박로숙</li> <li>■ 보육교사분야 (2인) 김진선, 노정희</li> <li>■ 요양보호 분야 (2인) 박경은, 구정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희정, 강선애, 김선화, 주미라, 김미혜, 임세빈, 한미경, 명월재, 김은영, 정기숙, 복순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태, 김종미, 조관옥, 최은희, 김희정, 장보경, 김윤희, 김수연, 강혜영, 송미애, 진경언, 김지아, 김은옥, 이연우, 김영주, 조연옥, 박주연, 김태구, 황순덕</li> </ul>



57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행복동행\_푸드플랜(먹거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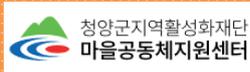
1. 안전한 먹거리 분과(생산)	2. 공공 먹거리 분과(유통)	3. 행복한 먹거리 분과(소비)																																				
슬로건: '지역 소농들의 감소농으로의 성장'	건강한 먹거리 소비할 권리(역거리 기본권)보장	청양 푸드플랜 인문학 조성																																				
의제: 생산자 기본 소득 보장	의제: 청양모델 토탈케어 시스템화	의제: 청양 푸드플랜 식문화 조성																																				
총 구성원 : 16인	총 구성원 : 16인	총 구성원 : 15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성원 소속</th> <th>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그룹</td> <td>친환경농업협회, 일반군민, 청양군품목별연구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 청양군 산림축산과</td> <td>5</td> </tr> <tr> <td>2그룹</td> <td>귀농귀촌협의회, 청양축협, 농업중앙회 청양군지부, 청양군 산림조합, 기술센터</td> <td>5</td> </tr> <tr> <td>3그룹</td> <td>청양군 농촌공동체과,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사)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 청양군 농민회, 농업정책과,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td> <td>6</td> </tr> </tbody> </table>	구분	구성원 소속	인원	1그룹	친환경농업협회, 일반군민, 청양군품목별연구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 청양군 산림축산과	5	2그룹	귀농귀촌협의회, 청양축협, 농업중앙회 청양군지부, 청양군 산림조합, 기술센터	5	3그룹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사)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 청양군 농민회, 농업정책과,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6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성원 소속</th> <th>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그룹</td> <td>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일반군민(학부모), 푸드플랜 생산자회, 청양교육지원청, 청양군 복지정책과</td> <td>5</td> </tr> <tr> <td>2그룹</td> <td>햇살영농조합법인, 청양농협, 정산농협, 화성농협, 청양군 미래전략과</td> <td>5</td> </tr> <tr> <td>3그룹</td> <td>청양군 통합돌봄과, (사)한국의식업중앙회 청양,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청양군기업인협의회, 통합돌봄과, 농촌공동체과</td> <td>6</td> </tr> </tbody> </table>	구분	구성원 소속	인원	1그룹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일반군민(학부모), 푸드플랜 생산자회, 청양교육지원청, 청양군 복지정책과	5	2그룹	햇살영농조합법인, 청양농협, 정산농협, 화성농협, 청양군 미래전략과	5	3그룹	청양군 통합돌봄과, (사)한국의식업중앙회 청양,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청양군기업인협의회, 통합돌봄과, 농촌공동체과	6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성원 소속</th> <th>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그룹</td> <td>휴식(음식점)대표, 청양군 여성단체협의회, 청양군생활개선회, 기술센터, 청양군 농업정책과</td> <td>5</td> </tr> <tr> <td>2그룹</td> <td>청양나래농장,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촌문화체험빌딩연구회, 농가주부모임, 청양군 농촌공동체과</td> <td>5</td> </tr> <tr> <td>3그룹</td> <td>사회적경제과, 청양군6차산업연구회, 청년네트워크, 청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술센터 기술지원과</td> <td>5</td> </tr> </tbody> </table>	구분	구성원 소속	인원	1그룹	휴식(음식점)대표, 청양군 여성단체협의회, 청양군생활개선회, 기술센터, 청양군 농업정책과	5	2그룹	청양나래농장,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촌문화체험빌딩연구회, 농가주부모임,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5	3그룹	사회적경제과, 청양군6차산업연구회, 청년네트워크, 청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술센터 기술지원과	5
구분	구성원 소속	인원																																				
1그룹	친환경농업협회, 일반군민, 청양군품목별연구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 청양군 산림축산과	5																																				
2그룹	귀농귀촌협의회, 청양축협, 농업중앙회 청양군지부, 청양군 산림조합, 기술센터	5																																				
3그룹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사)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 청양군 농민회, 농업정책과,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6																																				
구분	구성원 소속	인원																																				
1그룹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일반군민(학부모), 푸드플랜 생산자회, 청양교육지원청, 청양군 복지정책과	5																																				
2그룹	햇살영농조합법인, 청양농협, 정산농협, 화성농협, 청양군 미래전략과	5																																				
3그룹	청양군 통합돌봄과, (사)한국의식업중앙회 청양,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청양군기업인협의회, 통합돌봄과, 농촌공동체과	6																																				
구분	구성원 소속	인원																																				
1그룹	휴식(음식점)대표, 청양군 여성단체협의회, 청양군생활개선회, 기술센터, 청양군 농업정책과	5																																				
2그룹	청양나래농장,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촌문화체험빌딩연구회, 농가주부모임,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5																																				
3그룹	사회적경제과, 청양군6차산업연구회, 청년네트워크, 청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술센터 기술지원과	5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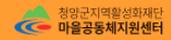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청양군 마을만들기 정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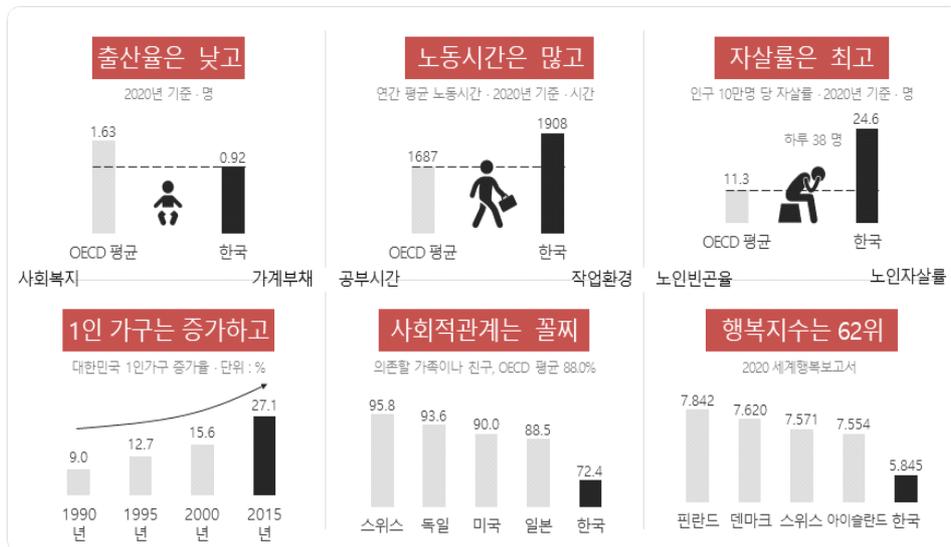


## I. 지역현황

### 지역소멸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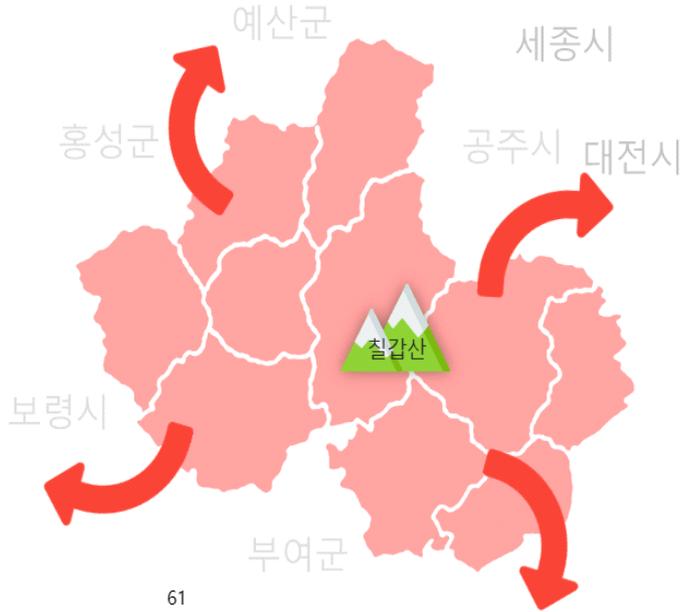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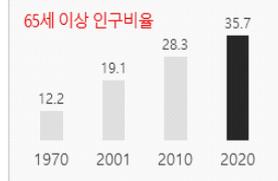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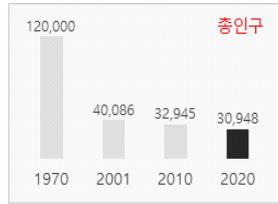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산업화·도시화·경제성장 만능주의 ▶ 가족해체·공동체 파괴 ▶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삶의 질





충남의 중앙, 산동과 산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61

청양군 민선 7기 군정 비전과 목표

다함께 - 주민주도 민관협치  
더불어 - 공동체 회복

군정비전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비전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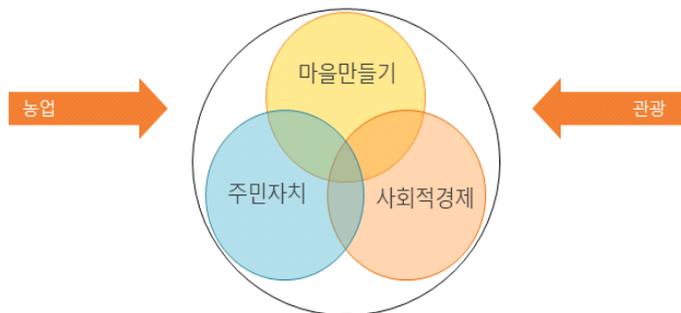
따뜻한 희망 공동체

군민이 주인인 참여 행정

튼튼한 지역순환 경제

꼭 가보고 싶은 매력도시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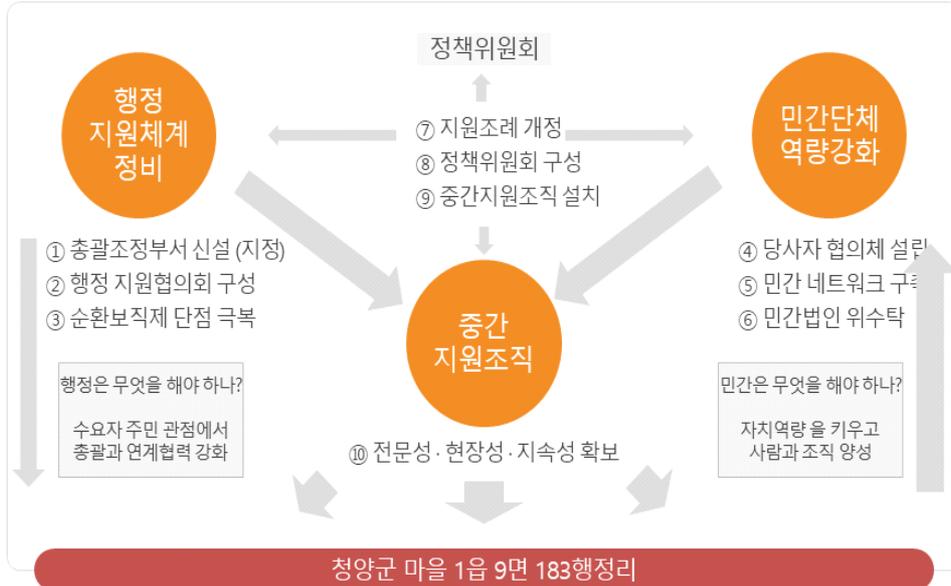


62

## 추진과정 -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 민관협치형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원 기능 강화



## 추진과정 - 총괄 부서 신설(행정)

(2019년 1월)



**행정조직** 민선 7기 핵심정책 '공동체, 푸드플랜' 확장성 강화

**중간지원조직** 통합형 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준비

## 추진과정 -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임기제공무원 : 행정과 민간을 잇는 가교

- 필요성** 다양하고 복잡하며 빨리 변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유형, 방식, 절차 등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 요구 특수 업무의 연속성 유지, 전문성 요청 반영
- 방법** 전략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① 과장/팀장 직위공모제 도입 ② 필수보직기간 2년 준수 ③ 전문직위제(전문관) 도입  
 ④ 임기제 공무원 채용: 농촌 지역사회개발 분야 (단계적 확대)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대응

### 임기제 공무원 제도

민간 전문가 채용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정원	정원 내제	정원 외	정원 내제	정원 내제
기준인건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근무시간	상근	주 15-35시간	상근	주 15-35시간
근무기간	총 5년 (연장가능)	총 5년	1년 단위	총 1년

###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3항, 평정규칙 제 16조 3항 등
- 대상 직위 및 직급 (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가능)  
 ✓ 분야 :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지위  
 ✓ 대상: 경력직 공무원의 직위 (복수직위 포함)  
 ✓ 직급: 시/도 3~7급, 시/군/구 5~8급 (상당 직급 포함)
- 관련근거: 경력 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수당 지급, 능력개발 지원 등

3년간 필수보직 (전보제한), 전문직위군(群)

## 추진과정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중간)

센터장

마을만들기 팀

역량강화 사업담당

사회적경제 팀

협력지원 팀

#### 주요 연혁

- 2016 : 충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구축 사업 선정
- 2017 : 건설도시과 직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 2017 :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 2018 : 청양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총회
- 2019 : 농촌공동체과 신설로 업무이관
- 2019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함께이음 정책) 수립
- 2020 : 지역활성화재단 신설로 업무이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확대(통합형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근거 : 충남 살기좋은 희망마을 조례

목적 : 상향식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지원

역할 :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공동체 플랫폼

예산 : 2억원(도비 3, 군비 7 매칭)

인원 : 4명(인건비 위주, 사업비 없음)

업무 : 충남 중간지원조직 4대 고유업무

### 충남 중간지원조직 4대 고유업무(인건비 기반)

#### 정책제안

자원조사, 의제발굴  
마을사업 모니터링  
(농촌정책융복합 세미나)

#### 주민참여

정보공유, 참여유도  
동기부여, 소통홍보  
(읍면순회 센터사용법)

#### 역량강화

마을상담, 컨설팅  
활동기발굴, 교육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 민관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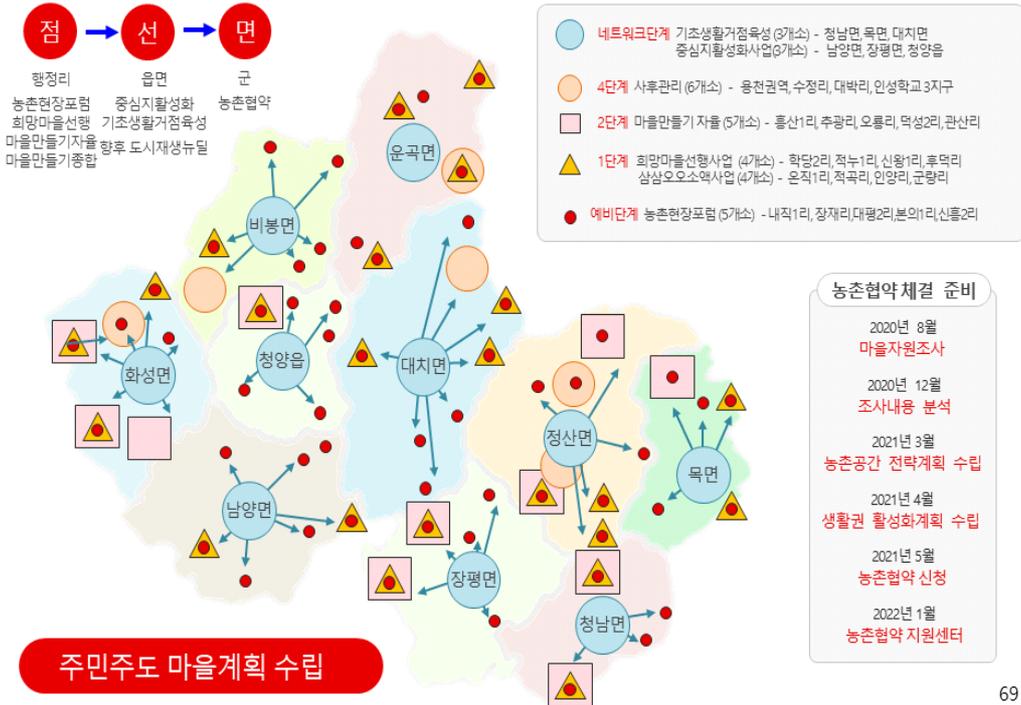
행정협의체, 민간네트워크  
정책위원회,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연대회의)



청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 2019년 기본계획 수립



함께이음 ① 공간이음 - 21년 총 30개 지구 마을사업 추진



함께이음 ① 공간이음



청양형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지원 전략 : 5단계 10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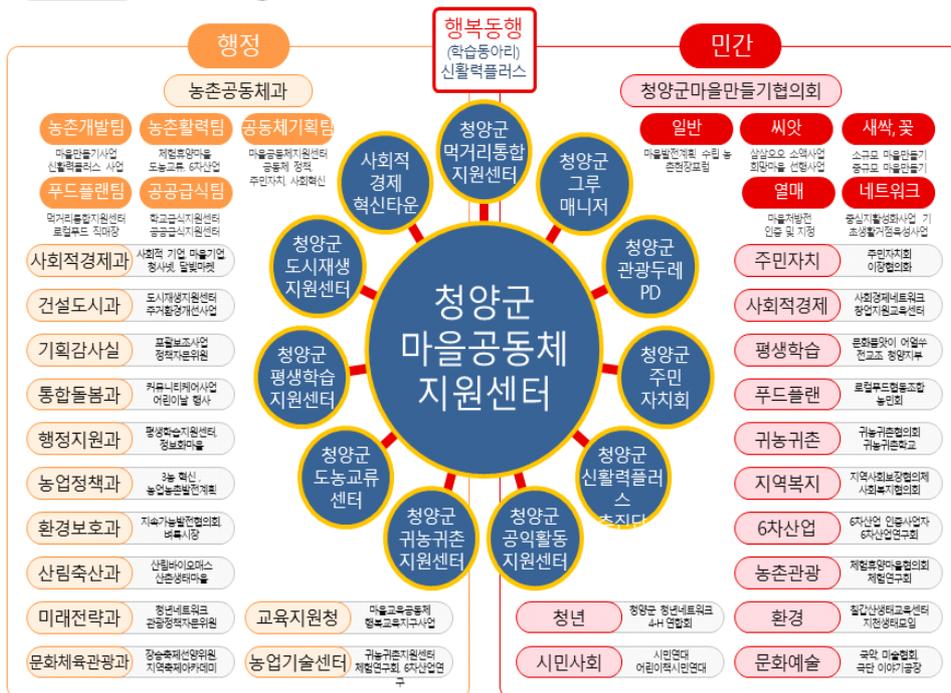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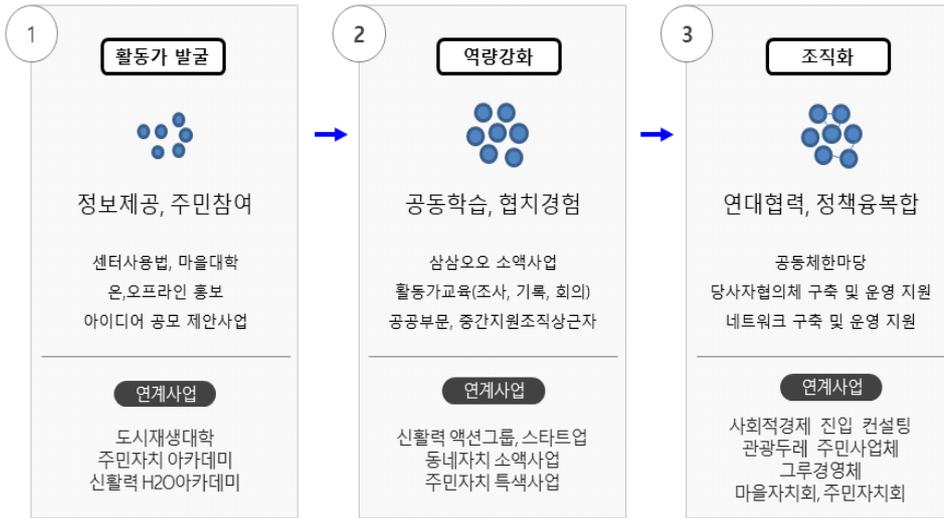
“함께이음” 마을만들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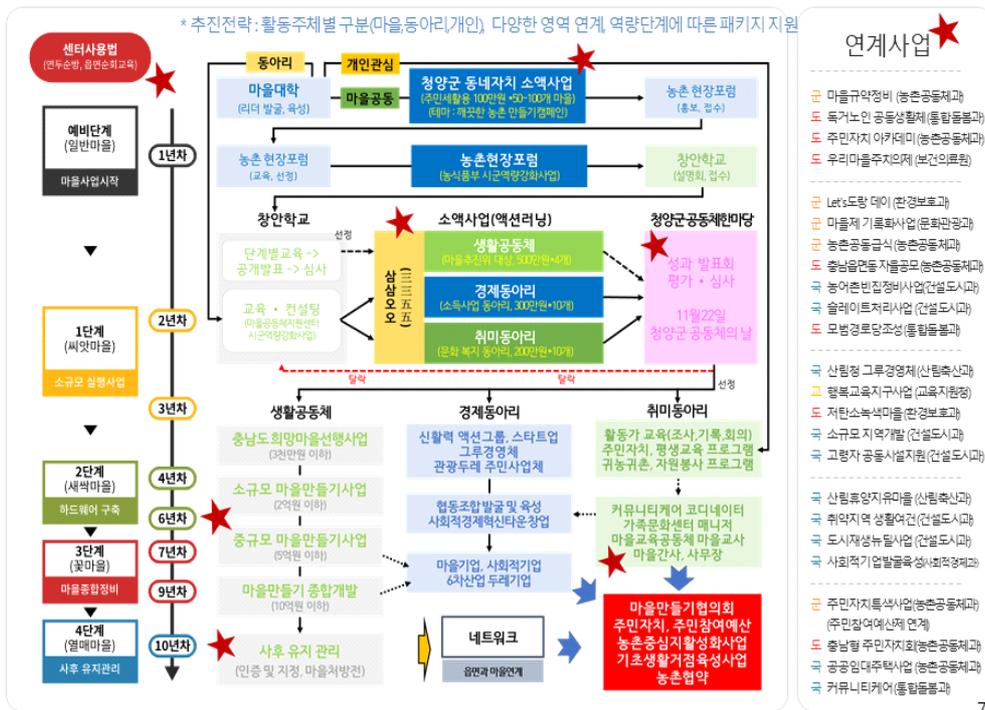
하나하나가 모여 둘둘이 되는 청양군 마을공동체  
청양군 공동체의 날 선포(매년 11월 22일) - 청양군 공동체한마당

**마을공동체 주체 형성**

\* 주민교육 방법론 개선: 초기단계 교육 확대, 소액사업 및 실천학습 위주, 창안학교 방식 도입, 다양한 영역 연계(중복배제), 상호평가의 심사방식



역량단계	실과	사업명	비고
예비	농촌공동체과	마을대학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동네자치 소액사업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농촌현장포럼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마을규약정비	함께이음
	통합활동과	특가노인 공동생활체	
	건설도시과	고형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도시과	도시재생대학	
	미래전략과	청년 걸이어 프로그램	
	농업기술센터	농촌에서 살아가기	
	행정지원과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행정지원과	스마트 정약 법 국민운동		
보건의료원	우리마을 주주이음		
1단계	농촌공동체과	삼삼오오 소액사업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희망마을 선행사업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주민자치 특색사업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틀림공유센터 청양공간	
	농촌공동체과	마을단위 줄어공동체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발굴 육성 지원	함께이음
	사회적경제과	맞춤형 창업 컨설팅	
	통합활동과	행복경로당 조성 운영	
	통합활동과	마을통사의 날 운영	
	통합활동과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	
통합활동과	이동발래방차		
문화관광과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		
2단계	농촌공동체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함께이음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함께이음
	문화관광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	
	산림축산과	그루경영체 육성	
	환경보호과	기후변화 경로당 지원	
	정양교육청	학교교실 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사업	
	건설도시과	마을회관 증개축, 실터정비	
	건설도시과	고형자 공동시설 지원	
3단계	농촌공동체과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함께이음
	건설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4단계	산림축산과	산림휴양지유마	
	농촌공동체과	마을처방전	함께이음
네트워크 단계	농촌공동체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신활력플러스사업	함께이음
	농촌공동체과	주민자치회 전환	함께이음
	기획감사실	청양형 뉴딜 사업	
통합활동과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		
건설도시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청양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도**

**목표1. 길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된 청양**  
[대응과제] 청주여건개선

[전략] 미래수요에 대응한 계획한 정주환경 조성

1-1 포용적 생활환경 조성  
- 생활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1-2 활력지역 주민유치  
- 인입입지, 노후주택, 임대주택, 주택개발

1-3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관리  
- 체계적 농촌경관관리,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확대, 산림녹지관리, 폐기물처리

**목표2. 활기 있는 일거리가 있는 청양**  
[대응과제] 농촌경제활력제고

[전략] 지역차원에 기반 한 산단형 경제체계 완성

2-1 청양 사회적경제 활성 고도화  
- 사회적경제인프라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2-2 농촌지역 융합 및 청년인력유치  
- 농촌융합산업단지 조성, 스마트농업, 농촌관광

2-3 혁신적 산단형 경제 활성화  
- 혁신적 산단형 경제, 청년인력유치 확대, 사회적기업

**목표3.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청양**  
[대응과제] 지역공동체활성화

[전략] 주민과 공공이 조화로운 거시공동체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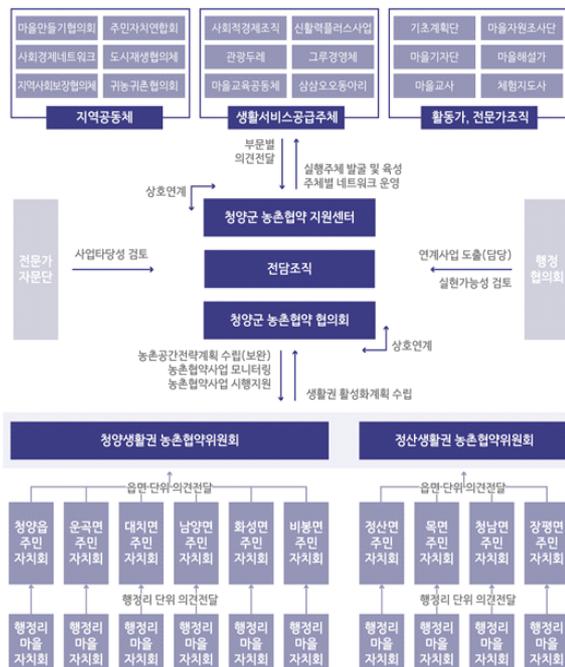
3-1 농촌활력 민관협력 고도화  
- 통합관리체계 구축

3-2 지역사회 주민자치 수준인프라 구축  
-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3-3 혁신적 인구구조 조성  
- 청년유류체류 및 유입인프라, 청년인구 유치 및 유류지원, 귀농귀촌

지역사회 소통체계 구축하기

- 민관협치 영역**  
마을만들기의 외부 지원 시스템  
[대의제 민주주의]
- 마을 밖에서 지원 기능강화**
- 주민자치 영역**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 시스템  
[직접 민주주의]
-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마을**
- 마을자치 영역**  
청양군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주제  
[당사자조직]





# 토론문

1.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 김향자
2.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김정연
3. 충남도의회 의원 김명숙
4. 청양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노승복
5. 농어민신문사 논설위원 이상길



# 농어촌사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발전을 위한 제언

김향자(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

## □ 민관협치 추진주체의 중요성

-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조직화와 민관협치가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음
- 농어촌사업의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체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공공적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민관의 협력적 추진이 매우 중요함
  - 현재 농어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이 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사업 추진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 이제는 단지 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 해결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함
  - 민간조직의 역량 강화, 민간조직의 네트워크화,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의 육성, 주민참여 활성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 □ 지속가능한 민관협치형 추진주체의 육성

-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과 어촌의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농어촌 정책사업이 대부분 한시적인 사업기간(3~4년)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 이후에 관련 조직이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관련 사업의 지속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의 변화·발전을 꾀한다거나, 새로운 정책사업을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부처별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고, 자치단체 내에서도 여러 정책분야에서 이미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이 다수 육성·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관광서비스 중심의 향토자원 고도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관광 중간

지원조직(관광DMO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사업별로 추진체계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초기단계에서 부처간, 부서 간에 상호 협의 및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역할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함.
  - 기존의 농어촌지역의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러나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것처럼 농어촌사업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사무장 등 농어촌사업 참여인력의 경력 관리와 전문성 강화

- 현재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한정된 기간으로는 추진되고 있음. 계획 수립 기간을 제외하면, 사무장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게는 2년, 길어야 4년임.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성과를 낸다고 해도 이후에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음
  - 이러한 사업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사무장의 인건비에 대한 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발표자의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함)
  -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활동가의 경우에도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이들 인력은 정부의 사업을 통해 육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인력풀을 지자체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타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상호 인력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농어촌전문인력 인력뱅크나 이들 인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개개인의 경력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임
- 또한 농어촌 사업에 관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일반적인 실전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론까지도 겸비한 집중 심화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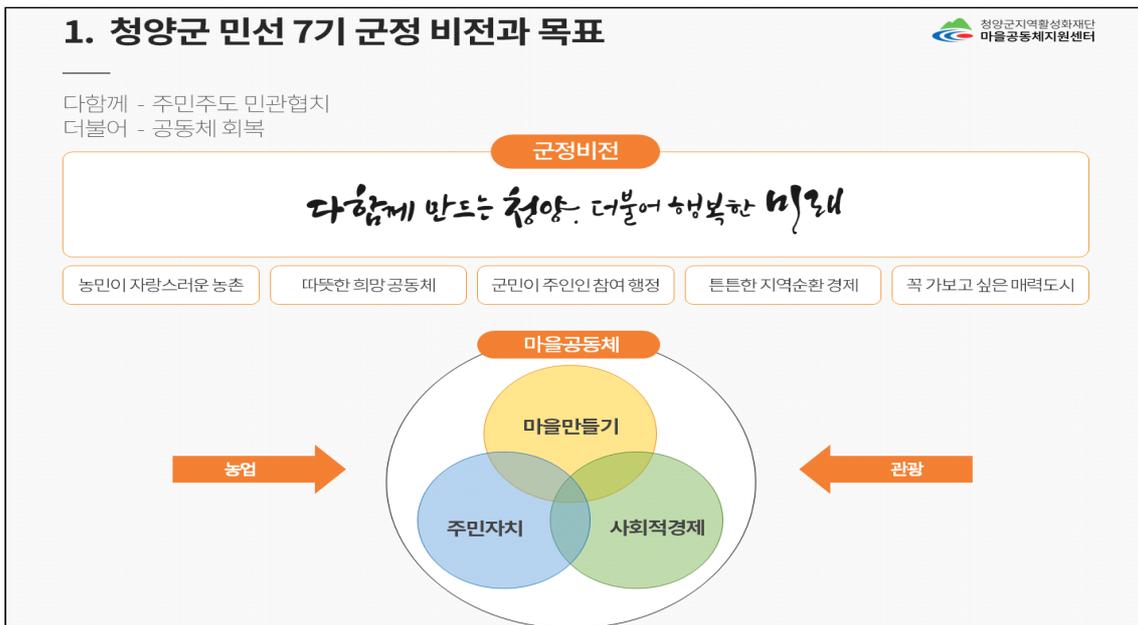
# 청양군 농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노승복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2018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분권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도 농촌 마을만들기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도 이관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농촌마을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행정이나 전문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마을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주민 주도로 행정과 함께 민관협치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기획해서 전달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민주도 상향식 방법입니다. 이렇게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주도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지자체 행정과 컨설팅 회사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충남에서는 2015년부터 민관협치형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남 각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주도 민관협치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마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림1] 민선7기 청양군 군정 비전과 목표

## □ 청양군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사례

민선7기에 즈음하여 청양군은 농촌마을의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동체 회복**으로 잡고 군정 비전을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로 설정했습니다. 일단은 청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를 통해 민관협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자치역량이 커지고 공동체의식이 함양된 군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청양을 만드는 것을 군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양군은 2019년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민선7기 군정 핵심정책인 마을공동체 정책의 총괄조정 부서로 ‘**농촌공동체과**’를 충남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기존 행정 실과 업무 가운데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업무 분석, 상향식 주민주도 업무, 사회적 가치 중시 업무, 융복합이 되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모아 농촌공동체과 안에 5개 팀(공동체기획팀,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농촌개발팀, 농촌활력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푸드플랜, 학교 및 공공급식, 농촌관광, 6차산업 등의 업무 영역에서 행정의 실과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융복합을 강화하여 농촌지역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의미한 시도입니다.



[그림2] 농촌공동체과 신설과 팀별 업무

공무원은 순환보직제 시스템으로 인해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타 부서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행정 시스템은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양군은 2019년 5월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청양군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행정과 민간 사이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와의 유사 업무들을 연계하여 융복합시키고, 마을주민들의 요구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양군은 마을만들기 중장기(2019~23년)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부자농촌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간 연계 협력을 넘어 향후 설치가 필요한 푸드플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자치영역, 사회적경제 영역 등 중간지원조직을 연계 통합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며, 그 운영방식은 **재단법인**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을 통한 협업을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의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10억원)과 군비(7억원)를 합해 청양군 소유 유휴공간인 (구)대성체육관에다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혁신플랫폼**을 주민참여형 공간으로 신축 중에 있고,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림3] 통합형 중간지원조직과 재단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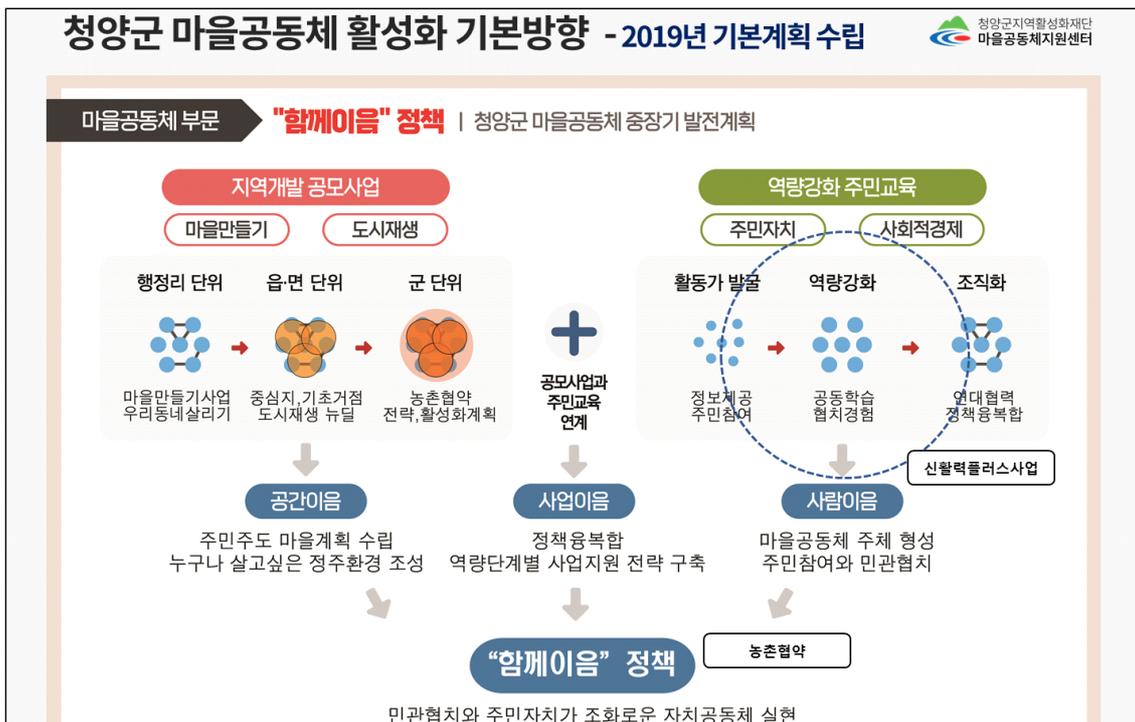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청양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지역주민을 마을만들기 주체로 세우고, 주민의 참여, 자치역량 강화, 민관협치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주목하면서 청양군 마을만들기 중장기계획인 **‘함께이음’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함께이음’ 정책은 세 가지 핵심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간이음 - 지역개발 공모사업(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
- 사람이음 - 역량강화 주민 교육사업 통해 민간의 조직화 촉진(청양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전환,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 주체를 형성
- 사업이음 - 다양한 부처별 지역개발 공모사업과 역량강화 주민교육사업을 함께 연계하여 역량단계별, 연차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전략 구축

특히 ‘사람이음’ 영역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활용하여 주민 액션그룹, 청년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행복동행) 등 사람과 조직을 키워내고 주민들이 협치 경험을 해보는 사업으로 특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함께이음’ 정책의 내용들을 담아 농촌공간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의 **농촌협약**(434억)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림4] 청양군 ‘함께이음’ 정책

충남도는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3대 축과 10대 핵심과제 제시하고 농촌마을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시스템 구축을 우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9년 12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앞으로 민관협치의 농촌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제안에 충남도의 다수 사례, 그리고 청양군의 마을만들기 중장기 계획인 ‘함께이음’ 정책이 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표1]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핵심과제와 청양군 사례

3대 축	10대 과제	청양군 사례	비고
행정지원체계 개편	총괄조정부서 지정	농촌공동체과	'함께이음' 정책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신활력사업 행정협의회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임기제공무원	
민간의 역량강화와 조직화	당사자협의회체 설립	마을만들기협의회	
	민간네트워크 구축	신활력사업 행복동행	
	민간법인 위수탁	재단법인 설립	
민관협치	지원조례 제정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정책위원회 구성	정책융복합 세미나 (신활력,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림5] 민관협치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 자치기반 민관협치, 사업후 지속가능성이 열쇠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농정전문기자)

### □ 신활력플러스는 이전의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신활력사업(2005~2010)의 성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을 제시.

-이 사업을 통해 지역브랜드 창출, 혁신주체 육성 등 내생적 추진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 지역이 사업 기획 추진주체가 되어 자생적 발전역량을 키우고, 특화자원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고창 복분자, 함양 산양삼, 보성 녹차를 예로 들어 지역특산물 중심의 다양한 브랜드가 개발됐다고 분석.

○ 반면, 신활력사업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용역업체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역량있는 민간조직 육성이 미흡했고, 이에 따라 사업 종료후 시설물 방치, 부실운영 등 부정적 사례가 발생.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사업보다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진단.

○ 정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과거 신활력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 발전적으로 계승한 사업이라고 설명.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계획협약을 도입하고, 집행조직으로 추진단을 두는 것,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30%, 액션그룹, 행정협의회 등을 강조하는 것은 일단 이전과 차별성으로 평가.

○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신활력사업과 신활력플러스는 비슷한 구조. 시설 중심, 용역업체 중심,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 지자체 공무원 주도의 추진체계는 여전. 실질적

인 민관협치 구조는 미흡.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역량 있는 민간조직 육성에 성공하고 있는가?

-인구 과소화로 공동체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진 농촌 실정을 고려할 때, 공동체니, 사회적 경제니 하는 논리로 실체나 지속가능성이 없는 공동체란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과소화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중간지원조직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자칫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데, 기존 농촌개발 생태계를 이루는 컨설팅업체, 행정, 농어촌공사, 토목건설업체에 더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까지 올라타는 결과 초래.

○ 발제 내용에 대부분 공감. 궁극적으로 민관협치와 마을단위, 읍면단위 자급, 자치를 중심으로 대전환 필요

#### 추진체계 정비: 광역 중간지원조직 통합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대학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광역 중간지원조직으로 통합 필요

“현장포럼을 주관하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량과 실효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으로 현재 9개도의 거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설치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어야 한다. 하지만, 교수가 운영하고 주로 대학원생들에 의해 업무가 진행된다 보니 현장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고, 운영비도 부족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도청 소재지에서 일선 행정리 마을까지 찾아가다 보니 마을과 밀착될 수도 없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현장포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촌개발 이대로 좋은가? 한국농어민신문 2020년 2월4일자>

○ 중계단, 광계단 기능 심층 검토

-현 중계단과 광계단의 자문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가?

□ 사후관리: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유지관리 등 사후 관리 단계는 행정의 점검과 제재만 있을 뿐이고 운영부담은 주민주체들의 몫.

- |  |
|--|
| <p>① 시장·군수와 추진단은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p> <p>②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p> <p>③ 시장·군수와 추진단은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의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p> <p>-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p> <p style="text-align: center;">&lt;유지관리 등 사후 관리주체 규정&gt;</p> |
|--|

○ 지속가능한 사후 관리를 위한 검토과제

- 정부와 지자체가 던진 사업, 시장도, 사업성도 없는데 주민 부담은 부당하다
- 행정 지원 없이 지속가능하려면 수익사업 불가피: 사업 목적과 농촌다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규제) 개선 검토
- 코로나 19로 농촌체험 등 끊겨 위기 겪는 곳 다수: 위기 시 지원 방안 전무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농어촌공사, 마을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민관협치형 추진체계의 원활한 진행과 확산을 위해 5차례 현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지역	정책사업	주 발제자(소속)
10. 01(금)	충남 청양	신활력플러스	구자인 소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동,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10. 20(수)	경북 상주	푸드플랜	황영모 연구위원 (전북연구원)
10. 21(목)	강원 평창	농어업회의소	김대현 사무국장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11. 17(수)	전북 임실	농촌협약	김정연 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11. 18(목)	전남 목포	어촌뉴딜300	황길식 대표 (영소,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세부일정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Live(오르빌, 농특위 채널) 영상을 통해 외부인도 참여 가능합니다.